자체연구 2023-01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유수동 · 최지민 · 이서희 · 윤소연 · 강희송 · 문혜리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저 자 **유수동, 최지민, 이서희, 윤소연, 강희송, 문혜리**

연구책임자 **유수동**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 구 진 **최지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서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소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희송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문혜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급변하고 있는 사회·기술·경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능동적·미래지향적인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

○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세와 방향을 예측하여 여러가지 대응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트렌드별 미래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환경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및 거시적 환경분석**

○ 세계 각 국가, 국제기구, 글로벌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큰 흐름과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함

○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STEEP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들을 도출하고, 미래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제시하고자 함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STEE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대적 요구를 중심으로 퓨처스휠 기법을 통해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자 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사회 주요 이슈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고자 함

□ **지방행정 미래 방향성 제시**

○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흐름과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각 트렌드별 바람직한 미래 지방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내용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 주요 국가, 국제기구 및 글로벌 컨설팅·조사 기관 등에서 최근 3년간(2020~2023)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간한 총 28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조사·정리하였음

- 해외자료들은 세계 전체 차원과 국가 전체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자료들은 국가 전체 차원과 기술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지방행정과 같은 종합행정 분야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리된 글로벌 메가트렌드들을 대상으로 요인별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여 분석단위 및 논의 수준을 축소하고, 글로벌 메가트렌드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었음

□ STEEP 분석을 통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요인별 구체화

❍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요인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거시적 환경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인 STEEP 분석을 활용하였음

- STEEP 분석은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al), 환경(Ecological 또는 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또는 legal) 영역에 대한 거시환경분석을 통해 미래 전망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STEEP 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각 트렌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음

❍ STEEP 분석에 있어 글로벌 메가트렌드 관련 보고서에 한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미래사회의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ChatGPT-4를 활용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STEEP 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음
- ChatGPT를 탐색적으로 활용하여 STEEP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 및 미래예측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함

□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한 미래사회 핵심 동인 추출**

○ 퓨처스 휠(Futures Wheel)은 토론을 통해 미래와 관련된 질문과 생각들을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식임(유수동, 2023)

- 즉,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토론과정을 구조화한 것으로, 사회 트렌드나 미래에 일어날 잠재성 있는 사건을 종이 가운데 써넣고 중앙에서부터 점차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임

○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하여 STEEP 분석결과 도출된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요인들을 분석하였음

- '합의의 법칙(rule of unanimity)'에 따라 연구자 간 동의를 거쳐 중요 요인별 연결고리를 범주화하고, 아이디어를 수차례 확인 및 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한 미래사회 주요 이슈 발굴**

○ 10개의 미래사회 핵심 동인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여 토픽별 키워드와 선행연구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각 토픽별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인구구조', '사회갈등', '사이버 범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양극화',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정치참여', '지방자치' 키워드별로 각각 10개의 토픽에 대한 토픽명을 개념화하였음
- 토픽 모델링에서의 토픽명은 해당 키워드들을 고려하여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설정하였으며, 중복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을 구체화하였음

□ **델파이조사를 통한 미래사회 주요 이슈 중복성 검토 및 종합**

○ 미래사회의 핵심동인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역 등 국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영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1·2차)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3.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및 정책방향 제시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을 위해 정성적·정량적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음

❍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8대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함

[2024년 8대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및 정책 방향(요약)]

구분	미래 정책 방향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 전략적·장기적 관점의 계획수립·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협업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재구조화	– 지방자치단체는 특성화 산업을 선정할 때, 독단적인 결정인 아닌 유관 대학과의 협의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방과 대학이 연합을 통한 지역 효과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고, 취업-교육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또한 지방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재난·안전관리 회복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재난·안전관리를 지속가능개발의 일부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방향에서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접근방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관리의 주체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함 – 개발되는 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높여가야 함
•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정책은 인간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소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의료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분	미래 정책 방향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관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의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의 효율성과 기초의 민주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기능별 초광역화가 필요함 - 맞춤형 분권 추진을 위한 차등적 분권 방식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중심의 소규모 지역기반 자치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다양화 및 통합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할 것임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문제해결력 강화	- 온라인 플랫폼 형식의 활동 분야 매칭을 통해 시민사회 공간 창출이 필요함 - 지방정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참여를 강화하여 지역 단위 다양한 사안을 지방의회에서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함 - 미래교육의 세부적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명확한 재원 산출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 쟁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임 - 교육재정 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적 관점하에서 갈등을 최소화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 균형 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신성과 균형을 통한 지역성장,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은 미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큰 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균형,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전환, 지역의 녹색경제 생태계 강화, 지역자원관리와 지역균형발전, 지역 수준의 역할 강조, 국가-지역 수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여야 함 - 국가와 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역의 특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함

4. 정책제언

□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및 대응 노력

❍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노력들은 미래에 대비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정부 및 공공정책의 변화	-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도입, 실행 -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및 기능 이양 - 예산·인력 등 각종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과학기술과 혁신의 촉진	- 연구 및 기술혁신 투자 -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 촉진 - 과학기술·혁신 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원 제공
역량과 교육 강화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 - 다양한 미래 직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민간자원의 적극 활용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 증진	-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 -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조직문화 조성 - 정책수립에 다양성 반영
주민참여와 사회적 연대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연대 강화 - 다양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 공동창조 활성화 및 정부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활성화 - 친환경 기술 및 실천 촉진, 참여 및 홍보활동 강화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정책 수립
글로벌 협력과 국제사회 참여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활동 참여 활성화 -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력을 위한 지역 내 노력 활성화 - 국제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자원 제공

❍ 이와 같은 지방행정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의사결정역량 제고, 문제해결역량 제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지방행정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구분	주요 내용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 집단지성을 통한 글로벌·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입안 - 정부 정책 연속성 강화 - 미래예측 연구에 기반한 정책결정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 빅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 정보의 복잡성·다양성에 대응하는 열린체계 구축 - 전자정부 시스템의 적극 활용
의사결정역량 제고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활용(집단지성 시스템 연계) - 전문가-대중의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운영 -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제해결역량 제고	-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와 행동 - 창의성과 혁신성 강조와 실현 - 능동적·미래지향적 대응 역량 제고
공정한 의사결정	-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공정성 제고 - 사회적·집단적 책임감 제고 - 사회·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

목 차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의 기본방향 ·····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7
1. 연구의 범위 ····· 7
2. 연구의 방법 ····· 8
3. 연구의 수행체계 ····· 11

제2장 |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제1절 분석의 틀 ····· 15

제2절 글로벌 메가트렌드 ····· 17
1. 세계 각국 정부의 미래예측과 대응 노력 ····· 17
2.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 18

제3절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 26
1. STEEP 분석 개요 ····· 26
2. STEEP 분석 결과 ····· 28
3. ChatGPT를 활용한 STEEP 분석 결과 ····· 34
4. STEEP 분석 결과 종합 ····· 37

제4절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 ····· 42
1. 퓨처스 휠 기법 개요 ····· 42
2. 미래사회 핵심 동인 분석 ····· 45

제3장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제1절 분석의 틀 ····· 61

제2절 미래사회 주요 이슈 ····· 63

1. 분석 개요 ····· 63
2. 미래사회 주요 이슈 관련 토픽 모델링 결과 ····· 66

제3절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 109

1. 분석 개요 ····· 109
2.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 111

제4절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131

1. 분석 개요 ····· 131
2. 미래사회 주요 이슈 중복성 검토 및 종합결과 ····· 133
3.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135

제4장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방향

제1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 155

1. 개요 및 현황 ····· 155
2. 미래 정책방향 ····· 157

제2절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재구조화 ····· 162

1. 개요 및 현황 ····· 162
2. 미래 정책방향 ····· 166

제3절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재난·안전관리 회복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170

1. 개요 및 현황 ····· 170
2. 미래 정책방향 ····· 173

제4절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 176

1. 개요 및 현황 ····· 176
2. 미래 정책방향 ····· 178

제5절 (자치역량과 책임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 181
1. 개요 및 현황 ····· 181
2. 미래 정책방향 ····· 184

제6절 (디지털혁신 생태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문제해결력 강화 ···· 190
1. 개요 및 현황 ····· 190
2. 미래 정책방향 ····· 191

제7절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 195
1. 개요 및 현황 ····· 195
2. 미래 정책방향 ····· 197

제8절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균형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 ····· 201
1. 개요 및 현황 ····· 201
2. 미래 정책방향 ····· 203

제 5 장 | 결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과제

제1절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 209

제2절 결론 ····· 212

【참고문헌】 ····· 215

【부록】 ····· 241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1차) ····· 241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2차) ····· 246

표 목차

[표 1-1] 연구의 기본방향 ····· 6
[표 1-2] 연구의 범위 ····· 7
[표 1-3] 연구의 방법 ····· 10
[표 2-1] 세계 각국의 미래예측과 대응 노력 ····· 17
[표 2-2]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대상 자료 ····· 18
[표 2-3] 글로벌 메가트렌드 ····· 19
[표 2-4]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을 활용한 STEEP 분석 결과 ····· 32
[표 2-5] ChatGPT를 활용한 STEEP 분석 결과 ····· 35
[표 2-6] STEEP 분석 결과 종합 ····· 40
[표 2-7]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주요 키워드) ····· 56
[표 3-1] 토픽 모델링을 위한 수집 키워드: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주요 키워드) ···· 65
[표 3-2] 수집 키워드와 자료량: 뉴스기사 ····· 66
[표 3-3]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위한 정제기준: 불용어 목록 ····· 67
[표 3-4]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위한 정제기준: 분석제외 키워드 예시 ·· 67
[표 3-5] 빈도분석 결과: 인구구조 ····· 69
[표 3-6]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인구구조 ····· 71
[표 3-7] 빈도분석 결과: 사회갈등 ····· 73
[표 3-8]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사회갈등 ····· 75
[표 3-9] 빈도분석 결과: 사이버 범죄 ····· 77
[표 3-10]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사이버 범죄 ····· 79
[표 3-11] 빈도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 81
[표 3-12] LDA 토픽 모델링 결과: 4차 산업혁명 ····· 83
[표 3-13] 빈도분석 결과: 디지털 경제 ····· 85
[표 3-14] LDA 토픽 모델링 결과: 디지털 경제 ····· 87

[표 3-15] 빈도분석 결과: 양극화 ····· 89
[표 3-16]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양극화 ····· 91
[표 3-17] 빈도분석 결과: 기후변화 ····· 93
[표 3-18]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기후변화 ····· 95
[표 3-19] 빈도분석 결과: 지속가능개발 ····· 97
[표 3-20]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지속가능개발 ····· 99
[표 3-21] 빈도분석 결과: 정치참여 ····· 101
[표 3-22]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정치참여 ····· 103
[표 3-23] 빈도분석 결과: 지방자치 ····· 105
[표 3-24]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지방자치 ····· 107
[표 3-25] 수집 키워드와 자료량: 학술논문 ····· 109
[표 3-26]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인구구조 ····· 111
[표 3-27]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사회갈등 ····· 113
[표 3-28]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사이버 범죄 ····· 115
[표 3-29]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4차 산업혁명 ····· 117
[표 3-30]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디지털 경제 ····· 119
[표 3-31]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양극화 ····· 121
[표 3-32]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기후변화 ····· 123
[표 3-33]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지속가능개발 ····· 125
[표 3-34]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정치참여 ····· 127
[표 3-35]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지방자치 ····· 129
[표 3-36]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종합결과: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 ·· 133
[표 3-37]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절차 ····· 135
[표 3-38] 참여 전문가 패널의 특성 ····· 136
[표 3-39] 설문지의 구성 및 자료분석방법 ····· 139
[표 3-40]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42
[표 3-4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44
[표 3-4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종합 결과 ····· 146

[표 3-43]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 148
[표 3-44]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의 영향 시기 예측 ····· 150
[표 3-45] 참고: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의 영향 시기 예측 ····· 150
[표 4-1] 대학 졸업 이동 유형과 지역 효과 추정 ····· 168
[표 4-2] 재난위험관리 국제 프레임워크의 변화 ····· 172
[표 4-3] 자치조직권 수준 ····· 183
[표 4-4] 미래교육 영역별 사업 내용(예시) ····· 198
[표 5-1]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 210
[표 5-2] 지방행정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 21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 11
[그림 2-1] 분석설계 구조: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 16
[그림 2-2] 퓨처스 휠 기법 ····· 43
[그림 2-3]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한 분석절차 ····· 44
[그림 2-4] 사회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 46
[그림 2-5] 사회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 47
[그림 2-6] 기술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 48
[그림 2-7] 기술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 49
[그림 2-8] 경제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 50
[그림 2-9] 경제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 51
[그림 2-10] 환경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 52
[그림 2-11] 환경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 53
[그림 2-12] 정치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 54
[그림 2-13] 정치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 55
[그림 3-1] 분석설계 구조: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62
[그림 3-2] 잠재디리클레할당의 기본 가정에 대한 직관적 시각화 ····· 64
[그림 3-3] 잠재디리클레할당 그래픽 모델 ····· 65
[그림 3-4]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인구구조 ····· 70
[그림 3-5]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인구구조 ····· 72
[그림 3-6]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사회갈등 ····· 74
[그림 3-7]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사회갈등 ····· 76
[그림 3-8]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사이버 범죄 ····· 78
[그림 3-9]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사이버 범죄 ····· 80
[그림 3-10]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4차 산업혁명 ····· 82

[그림 3-11]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 ····· 84
[그림 3-12]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디지털 경제 ····· 86
[그림 3-13]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디지털 경제 ····· 88
[그림 3-14]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양극화 ····· 90
[그림 3-15]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양극화 ····· 92
[그림 3-16]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기후변화 ····· 94
[그림 3-17]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기후변화 ····· 96
[그림 3-18]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지속가능개발 ····· 98
[그림 3-19]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지속가능개발 ····· 100
[그림 3-20]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정치참여 ····· 102
[그림 3-21]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정치참여 ····· 104
[그림 3-22]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지방자치 ····· 106
[그림 3-23]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지방자치 ····· 108
[그림 3-24]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인구구조 ····· 112
[그림 3-25]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사회갈등 ····· 114
[그림 3-26]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사이버 범죄 ····· 116
[그림 3-27] LDA 토픽 모델링 결과: 4차 산업혁명 ····· 118
[그림 3-28] LDA 토픽 모델링 결과: 디지털 경제 ····· 120
[그림 3-29]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양극화 ····· 122
[그림 3-30]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기후변화 ····· 124
[그림 3-31]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지속가능개발 ····· 126
[그림 3-32]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정치참여 ····· 128
[그림 3-33]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지방자치 ····· 130
[그림 3-34]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을 위한 분석절차 ····· 132
[그림 3-35] CVR 산출 공식 ····· 138
[그림 4-1] 세계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비교 ····· 156
[그림 4-2] 수도권과 비수도권 총인구 및 청년인구 비율 변화 ····· 156
[그림 4-3] 국내 상장사 본사 소재지 분포 ····· 162

[그림 4-4] 지역 내 잔존율(취업, 2010년 및 2018년) ····· 163
[그림 4-5] 지역 내 잔존율(일반대학 진학, 2010년 및 2018년) ····· 164
[그림 4-6] 대구형 RISE 육성계획 ····· 165
[그림 4-7]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 ····· 167
[그림 4-8]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4대 핵심 요소별 미래모습 ····· 190
[그림 4-9] 지방정부의 4가지 새로운 서비스 모델 ····· 192
[그림 4-10] 지방교육재정 규모 및 추이('19-'23년, 당초) ····· 196
[그림 4-11]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 20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급변하고 있는 사회·기술·경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능동적·미래지향적인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

- 과거와는 다른 문제해결 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예측과 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사회는 상상을 초월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 경쟁사회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미래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즉, 미래예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

-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세와 방향을 예측하여 여러가지 대응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

- 미래는 불확실성이 곳곳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는 없으나, 미래가 주는 불확실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답습할 수밖에 없음
- 미래예측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열쇠가 있는 것이며, 선호하는 미래와 다양한 대안적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미래연구의 가치는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마음을 열고 정책의제를 변화시키며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 유용함
- 미래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미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위협의 요소들을 예측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알리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래예측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현재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본 연구결과는 지방행정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의제의 변화와 계획 수립,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미래지향적 의사결정 지원, 미래에 대한 통찰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트렌드별 미래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환경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및 거시적 환경분석

❍ 세계 각 국가, 국제기구, 글로벌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큰 흐름과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함

❍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STEEP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들을 도출하고, 미래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제시하고자 함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우리사회, 특히 지방행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여 공공의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문제와 욕구(needs)를 파악하고자 함

❍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STEE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대적 요구를 중심으로 퓨처스 휠 기법을 통해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자 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사회 주요 이슈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고자 함

□ 지방행정 미래 방향성 제시

❍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흐름과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각 트렌드별 바람직한 미래 지방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3. 연구의 기본방향

❍ 미래 트렌드 분석 등 미래연구를 위해서는 과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고, 현재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미래예측방법론을 활용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그것을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용할 때 의미를 가지며,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과거-현재-미래 연구”라는 복합적·총체적인 연구 관점을 본 연구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표 1-1] 연구의 기본방향

구분	주요 내용
과거 연구	- 과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 • 과거의 글로벌 메가트렌드 조사·분석 및 STEEP 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및 연구동향 조사·분석
현재 연구	- 현재의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 분석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및 글로벌 이슈 분석 -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주요 이슈 도출 • 주요 키워드 및 요인 도출 등
미래 연구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 뉴스기사 토픽 모델링을 통한 미래사회 주요 이슈 도출 •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인 미래 전망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바람직한 미래 지방행정의 방향성 제시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함

□ 시간적 범위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3가지로 구성됨
- 자료분석 시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이후 현재까지(2020.01~2023.12)로 한정함
- 미래전망 시점은 원칙적으로 2024년부터 2040년까지로 한정함

□ 내용적 범위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STEEP 분석 및 퓨처스 휠 기법, 토픽 모델링 등을 통한 미래사회 주요 이슈 도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발굴, 분야별 미래 방향성 도출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정함

[표 1-2] 연구의 범위

구분	주요 내용
공간적 범위	-전국 및 세계 단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
시간적 범위	-자료분석 시점 •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이후 현재까지(2020.01~2023.12.) -미래전망 시점 • 2024년~2040년
내용적 범위	-글로벌 메가트렌드 조사·분석 -STEEP 분석을 통한 미래사회 주요 요인 도출

구분	주요 내용
	-퓨처스 휠 기법을 통한 미래사회 핵심적인 동인 분석 -토픽 모델링을 통한 미래사회 주요 이슈 도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트렌드별 미래 방향성 도출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거시·미시 환경분석과 트렌드 분석, 정책대안 마련 등을 위해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논문 등 국내외 각종 문헌을 활용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함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과 STEEP 분석, 지방행정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국내외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함

□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자문

○ 미래연구를 위한 접근방법과 적용과정에 대한 이론적·논리적·정책적 타당성을 검증 및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과 관련 분야 전문가 간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함

○ 지방행정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산업, 국토개발,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자문을 실시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 FGI, 인터뷰 등 전문가 의견조사

○ 문헌자료, 통계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복합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개별 인터뷰, FGI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 기술적 측면을 넘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심층면접, 표적집단면접(FGI)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함

○ 특히, 미래예측 및 트렌드 분석 등 미래연구와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퓨처스 휠

○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하여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및 STEE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 및 요인들을 대상으로 관계요인, 영향요인 등을 종합하여 핵심적인 동인들을 분석함

○ 퓨처스 휠(futures wheel) 기법은 이슈화되는 항목들을 서로 연관시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요인들 간의 복잡하게 얽힌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평적·위계 질서적이며, 단순한 사고를 유기적으로 복잡한 사고로 상호 이동함으로써 동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핵심적인 동인들을 추출할 수 있음

□ 토픽 모델링

○ 미래사회 이슈 도출을 위한 과정으로써, 언론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주요 토픽 및 키워드, 토픽 비중을 분석함

○ 토픽 모델링은 단순한 키워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된 토픽 계층을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대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 방법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퓨처스 휠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의 지방행정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분석함

○ 미래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내포하는 복수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실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선별해 내는 작업이 필요함

□ 사례 분석

○ 해외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혁신·우수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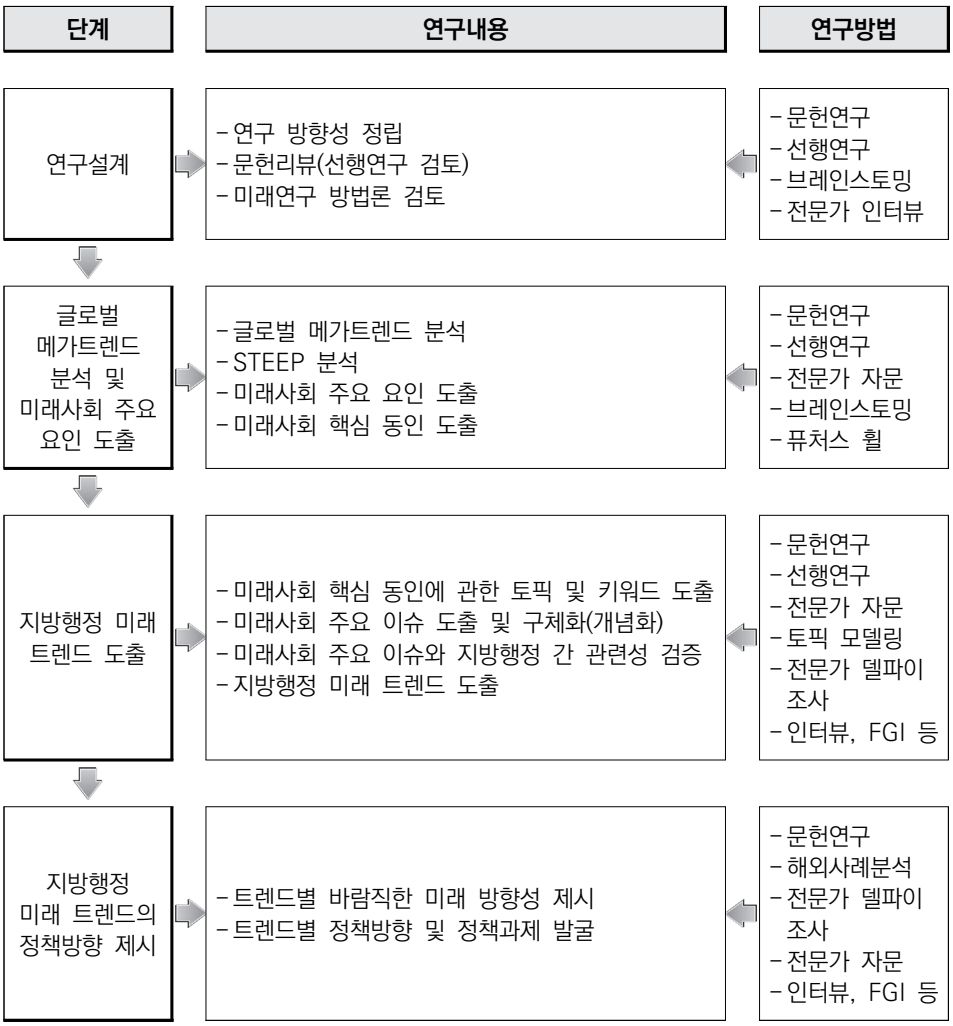
[표 1-3] 연구의 방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문헌연구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 STEEP 분석을 통한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도출 - 정책대안 마련	전과정 활용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자문, FGI, 인터뷰 등	- 미래연구 접근방법 및 적용과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지방행정 부문별 트렌드 및 핵심사항에 대한 자문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및 타당성 검증	전과정 활용
퓨처스 휠	-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관한 요인 도출(관계요인, 영향요인 등) - 미래사회 핵심적인 동인 추출	제2장 활용
토픽 모델링	- 미래사회 핵심 동인에 관한 토픽 및 키워드, 토픽 비중 분석 - 미래사회 주요 이슈 도출 및 구체화(개념화)	제3장 활용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미래사회 주요 이슈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제3장 활용
사례분석	- 해외 정책동향 조사·분석 - 정책방향 제시	제4장 활용

3. 연구의 수행체계

❍ 본 연구의 주요 흐름과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KRIL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제2장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제1절 분석의 틀

제2절 글로벌 메가트렌드

제3절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제4절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

제2장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제1절 분석의 틀

○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단계 연구과정을 설계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음

○ 먼저,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큰 흐름과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파악하였음

- 이를 위해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미래전망 보고서 등 국내외 자료들을 수집·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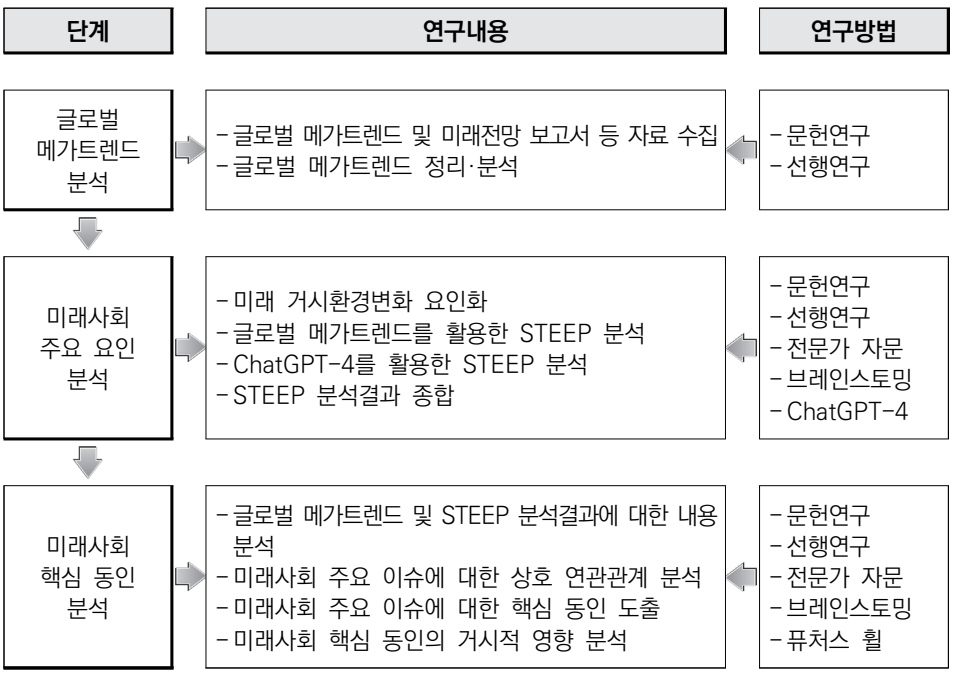
○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거시적 환경분석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음

- STEEP 분석을 통해 미래 거시환경변화를 요인화하였음
- 특히,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활용한 STEEP 분석결과와 ChatGPT-4를 활용한 STEEP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미래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으로 요인화하였음

○ 도출된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동인을 분석하였음

- 특히, 미래학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인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 분석 및 핵심 동인을 도출하였음

[그림 2-1] 분석설계 구조: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제2절 글로벌 메가트렌드

1. 세계 각국 정부의 미래예측과 대응 노력

❍ 세계 각국 정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전략적인 미래예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표 2-1] 세계 각국의 미래예측과 대응 노력

구분	자료 제목
미국	-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 발간
영국	- 미래전략처(Strategy Unit) - 국가 미래 이슈 분석,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핀란드	- 정부 차원의 미래전략보고서 발간 - 핀란드 의회 미래위원회: 국가 미래전략 수립 검토
스웨덴	- 스웨덴 의회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 다양한 미래 아이디어 발굴 및 정치적 과제 도출
일본	- 과학기술원(Th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미래예측 및 중장기 비전 도출
싱가포르	- 총리실 산하 시나리오 계획국 - 미래예측 시스템 개발·발전(시나리오 방법+돌발변수 메커니즘)
한국	- 중장기전략위원회(기획재정부) -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2.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 분석 개요

❍ 주요 국가, 국제기구 및 글로벌 컨설팅·조사 기관 등에서 최근 3년간(2020~2023년)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미래전망을 주제로 발간한 총 28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조사·정리하였음

❍ 본 연구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을 위해 활용된 분석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2-2]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대상 자료

구분	자료 제목
GLOBSEC(2020)	- GLOBSEC Megatrends 2020
UN(2020)	- Shaping the Trends of Our Time
Roland Berger(2020)	- Trend Compendium 2050 Six megatrends that will shape the world
영국 과학청(Goverment Office for Science)(2020)	- The future of citizen data systems
녹색기술센터(2020)	- 2030 기후변화대응 분야 글로벌 메가트렌드
NIC(2021)	-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WEF(World Economic Forum)(2021)	- Positive AI Economic Futures
gov.wales (영국 웨일즈 자치정부)(2021)	- Future Trends Report Wales 2021
NTT R&D(2021)	- NTT Technology Report for Smart World 2021
EPTA(2021)	- Technology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under scientific uncertainty
ISWA(International Solid Waste Association)(2021)	- The Future of the Waste Management Sector 2021-2030
McKinsey(2021)	- The top trends in tech
Criteo(2021)	- Shopper Story 2022: Global Consumer Trends & the Future of Commerce

구분	자료 제목
Siemens(2021)	- A New Space Race
Huawei(2021)	- Intelligent World 2030
GLOBSEC(2022)	- GLOBSEC Megatrends 2022
BlackRock(2022)	- Megatrends: Insights on the forces shaping our future
PWC(2022)	- Megatrends: Five global shifts reshaping the world we live in
OECD(2022)	- Trends Shaping Education 2022
Brookings Institution(2022)	- An inclusive future? Technology, New dynamics, and Policy challenges
Solactive(2022)	- Future Trends 2022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2)	-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2
Nexit Ventures(2022)	- The Hottest VC Trends of 2022: Our Predictions
외교부(2022)	- 2022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교육에의 시사점
Hellenic Republic(2023)	- Megatrends 2040: Volatility, Unceratinty, Resourcefulness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23)	- 2023년 CES 기술동향 및 글로벌 유망기술 메가트렌드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2023)	- NIA가 전망한 2023년 12대 디지털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2023)	-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 혼돈의 세계 경제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 28개 기관에서 발간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3] 글로벌 메가트렌드

구분	주요 내용
GLOBSEC (2020)	- 다자간주의가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슈퍼파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입지는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다. - 팬데믹은 서구사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분열을 고조시키고 있다. - COVID-19는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시켰으며, 경제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 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가까운 미래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주요 내용
	- 디지털 기술은 안보의 기초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공공보건은 심각한 안보문제가 될 것이다. - 지속가능성 의제는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 디지털 정보의 파괴적인 영향이 사회에 드러났다. - 대규모 정부 개입과 경제 개입주의가 확대될 것이다. - EU는 내부 분열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UN (2020)	- 기후변화, 자연자본과 오염 - 고령화된 세계의 인구 트렌드 - 도시화 - 신흥 및 경계 기술 - 불평등
Roland Berger (2020)	- 인구 - 이민 - 가치관 - 교육 - 전염병 및 다른 불확실한 상황 - 질병 및 치료 - 양육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 자원 및 원자재 - 위기에 처한 생태계 - 글로벌화 재평가 - 권력 변화 - 산업 변화 - 국가부채에 대한 도전 - 기술 가치 - 인공지능 - 인간과 기계 - 민주주의의 미래 - 지배와 지정학 - 글로벌 리스크
영국과학청 (2020)	- 명확한 정책목표 수립 - 시스템 관점 접근 - 정책목표 상충 시 투명하고 현실적 조율 -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주도 -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

구분	주요 내용
녹색기술센터 (2020)	-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친환경 차량 기술 - 기후변화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및 도시기후 플랫폼 - 기후변화와 극한기후 현상 - 녹색 소비 운동과 시민 참여기반 사회운동 - 물 부족으로 인한 물 분쟁 - 기후변화 교육 및 시민참여 - 하수 역학 기반 신종(유해)오염물질 제어기술 - 미래 에너지 거래시장의 변화 - 기후변화와 산림생물 다양성의 영향 - 기후위기와 감염병
NIC (2021)	-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고령화된 인구 - 도시화가 개발의 수요를 바꾸는 중 - 인간 발전과 관련된 과제 - 상승하고 이동하는 글로벌 중산층 - 이동 중인 사람들: 이주 - 기후변화는 여기에 있으며 강화되고 있음 - 환경 악화에 기여 - 인간 안보 침해 - 탄력과 적응의 성장 - 높아지는 국가 부채 - 고용의 혼란 - 더 조각난 무역 환경 - 경제적 연결성이 진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음 - 계속되는 아시아로의 기울기 - 신흥 기술 분야의 추세 -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들
WEF (2021)	- 경제 번영의 공유 - 기업의 재편성 - 유연한 노동시장 - 인간 중심의 AI - 성취감을 주는 직업 - 시민의 힘과 인간 번영
gov.wales (2021)	- 사람과 인구 - 불평등 - 지구 건강과 한계 - 기술 - 공공재정 - 공공부문 수요와 디지털 전환

구분	주요 내용
NTT R&D (2021)	- 4D 디지털 기반 세계 - 리모트 월드 - 웰빙 - 환경부하 제로 - 새로운 신뢰성 구축하는 벨류체인
EPTA (2021)	- 포용적,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화 - 원격근무 혁명 대응 - 위기대응력 높은 사회로의 진화 - 복잡한 사회의 취약성 평가·대응 - 건강 관련 데이터 공유·협력 강화
ISWA (2021)	- 건강과 환경보호 - 기후변화 완화 - 자원 효율성 및 순환경제 - 포괄적인 거버넌스 - 직업 측면에서의 건강과 안전 보장 - 기술 진보
McKinsey (2021)	- 차세대 네트워크 - 분산 인프라 - 트러스트 아키텍처 - 차세대 컴퓨팅 - 차세대 프로그래밍 - 차세대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가상화 - 인공지능 - 바이오 혁명 - 차세대 재료 - 차세대 청정기술
Criteo (2021)	- 전자상거래 성장에도 소비자들은 매장 방문 선호 - 대면 사회생활의 부활 - 소비자 가전이 지출에서 최대 비중 차지 - 동영상이 현재·미래 소비에서 핵심 영향요인으로 부상 - 소매점·브랜드 자체 웹사이트 소비 증가
Siemens (2021)	- 물리적 공간 경쟁: 팬데믹 이후 빌딩의 변화 - 디지털 공간 경쟁: 인프라 산업 디지털화 - 지구적 공간 경쟁: 탈탄소화 관련 도전
Huawei (2021)	- 의료 - 식품 - 생활공간

구분	주요 내용
	- 교통 - 도시 - 기업 - 에너지 - 디지털 신뢰
GLOBSEC (2022)	- EU는 이제 지역정치의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 대유행에서 만연병으로: 감염성 질병은 계속 남아 있다. - 냉전이 돌아왔다. - 세계는 두 경쟁 블록으로 나눠질 것이다. - 에너지 전환은 속도를 낼 것이다. - 제재와 활성화된 재정조치가 국가정책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 EU 확장은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정보 공간을 둘러싼 전투가 더 대립적으로 진행 중이다. - 사이버 전쟁은 여전히 전통적인 공격의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BlackRock (2022)	- 기술적 돌파구 -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 신흥 국제 자본의 등장 -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 빠른 도시화
PWC (2022)	- 기후변화 - 기술적 혼란 - 인구 흐름 - 분열된 세계 - 사회적 불안정성
OECD (2022)	- 성장과 지속가능 - 생활과 노동 - 지식과 권력 - 정체성과 소속감 - 변화하는 자연
Brookings Institution (2022)	-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 디지털 기술과 세계화 - 신기술 하의 세계경제 융합
Solactive (2022)	- 자동차생태계 진화 - 빅데이터 - 웹3.0

구분	주요 내용
	- 클린에너지 - 자원 효율화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미래 주택 - 농업기술 및 식품 혁신 - 스마트 헬스케어 - 미래 복지
ILO (2022)	- 포용적 경제 성장과 고용 - 모든 노동자 보호 - 보편적 사회보호 - 사회적 대화
Nexit Ventures (2022)	- 디지털화 - 사이버보안 - 기후 기술 - Z세대 쇼핑 - 메타버스 - 웹3.0
외교부 (2022)	-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 - 생활과 노동 방식의 변화 - 정보와 데이터 - 정체성과 새로운 형태의 소속감 - 변화하는 자연
Hellenic Republic (2023)	- 기후변화의 생태적 개혁 요구 - 자원 부족 - 인구통계적 불균형 - 도시화 - 급격한 기술발전과 초연결성 - 글로벌 수준에서 증산층의 성장과 소비 - 권력의 동쪽과 남쪽으로의 이동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23)	- 연결성과 융합 - 코그너티브 기술 - 소매업의 변화 - 스마트 뉴그린 - 인구변화 - 뉴 비즈니스 모델 - 스마트의료 웰빙 - 제로를 향한 혁신 - 거대도시

구분	주요 내용
	- 미래 인프라 - 미래 에너지 - 미래 모빌리티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2023)	-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시작 - 패권경쟁의 전장 확대, 표준 경쟁 - 업무의 화두는 인간-기계 협업과 자동화 - 사람과 공존하는 로봇 진화 가속 - 상황과 맥락을 읽는 복합지능의 대두 - 도시를 보호하는 재난 안전 인프라 구축 - 지구를 구하라,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 멀어지는 사람들, 양극화와 N극화 - 확산과 신뢰가 요구되는 디지털 세상 - 버츄얼 비잉(Virtual Being)으로 몰입되는 가상세계 - 心身一體, 헬스테크와 의료테크를 통한 일상회복 - 디지털 기술 혁신과 민간이 물을 여는 '뉴 스페이스'
현대경제연구원 (2023)	- 위기의 세계화 - 흔들리는 선진국 - 위기 속에 빛나는 아시아 - 정부부채 과잉의 늪 - 원전의 귀환 - 춥고 배고픈 세계 - 지구의 한계를 앞당길 인구문제

❍ 해외자료들은 세계 전체 차원과 국가 전체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자료들은 국가 전체 차원과 기술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지방행정과 같은 종합행정 분야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리된 글로벌 메가트렌드들을 대상으로 요인별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여 분석단위 및 논의 수준을 축소하고, 글로벌 메가트렌드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함

제3절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

1. STEEP 분석 개요

❍ 앞에서 살펴본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요인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거시적 환경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인 STEEP 분석을 활용하였음
- STEEP 분석은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al), 환경(Ecological 또는 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또는 legal) 영역에 대한 거시환경분석을 통해 미래 전망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음
- STEEP 분석은 거시환경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분석 요인을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상황을 객관화하는 방법론을 의미함
- STEEP 분석은 연구자가 관련 연구주제와 관련된 거시적인 외부환경변화를 과거, 현재 및 미래 시점에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분류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국제미래학회, 2014)
- 즉, 미래 트렌드나 특정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며, 그러한 것들이 문제해결 또는 사회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음

❍ STEEP 분석에서 다루게 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Social)
  - 인구, 문화적인 가치·태도, 행동양식, 관습, 교육 등 기본적으로 인간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서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며, 사회적 요인의 변화 속도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장기간 지속된다 할 수 있음
- 기술(Technological)
  - 기술의 발전은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동인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방식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의 일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사회에서는 거시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경제(Economical)
  - 사회 내에서의 자원배분과 사용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포함하며, 국민총생산(GNP), 임금, 고용, 인플레이션, 재정·통화정책, 부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미래전략 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환경(Ecological 또는 Environmental)
  - 인간활동과 상호작용하는 생태학적·물리적 환경으로서 물, 대기, 토양, 에너지 등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요소로서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음
- 정치(Political 또는 legal)
  - 주로 정부 역할 및 기능과 관련된 정치적·법적·제도적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일상생활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제도·법과 관련된 항목이며,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STEEP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요인을 구분하고, 미래의 거시적 환경변화를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프레임워크로 활용하고자 함

-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탐색활동을 통해 미래사회의 광범위한 이슈 영역을 사회·경제·환경·정치적 요인으로 조직화하여 단순화를 시도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특히,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요인들의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전략적인 계획수립의 방향성을 탐색하며, 전체적인 미래사회의 환경을 이해하고자 함

2. STEEP 분석 결과

○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바탕으로 STEEP 분석을 통해 요인화를 시도하여 미래의 거시적인 환경변화를 파악하였음
- STEEP 분석은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에서 제시되었던 각 트렌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음
- 우리사회는 다양한 격변적인 문제(turbulent problem)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STEEP 분석을 통해 미래사회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요인

○ 인구구조
- 선진국의 고령화 인구 비율 증가 및 인구증가 둔화
- 연령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원동력 저하
- 가족 및 가족구조의 변화
-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의 증가
- 이민과 이주의 증가

○ 사회갈등
- 사회적 응집력 문제 등 세대 간 갈등
-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등 성별 격차 해소
- 다문화 사회 갈등 증가
- 소득과 부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험 초래 증가
- 사회 집단 간 불평등 심화

○ 사회 안전과 인권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 및 폭력 증가
- 사회적 약자 안전보장에 대한 취약성 증가

- 디지털 안전사회 요구 증가
- 전염병에 의한 사망 증가
- 인권과 자유의 제한

□ 기술적 요인

○ 기술혁신
- 기술진보 및 혁신 가속화
- AI,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변혁적 기술개발
- 디지털 기술의 혁신 주도
- 디지털 기술 기반 기능 및 서비스 제공·연결
-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대전환
- 기술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보급
- 경제·산업·사회·문화 등 대전환 촉진
-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대
- 기술혁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구축·관리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문제 등 역기능 위협 확산

○ 노동시장 변화
- 생산성 향상 및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 새로운 직업의 창출 및 교육·역량 강화 요구
- 기술혁신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 작업 자동화에 따른 실업 및 일자리 감소 문제
- 직업 변화와 전환 비용, 디지털 격차 등 부정적 영향 우려 확산

□ 경제적 요인

○ 경제성장률 저하 및 무역갈등 심화
- 저성장 경제의 지속 및 경제 역동성 약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부채
- 인플레이션 지속
- 세계무역 성장률 저하
- 글로벌 통상 갈등 심화

❍ 경제적 불평등 심화
- 부의 집중 및 소득 불평등 가속화
- 노동 소득 감소 및 자본 소득 증가
- 실업률 증가
- 경제·사회 전반의 불안 확대
-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 디지털 경제권 확대
- 디지털 경제의 블록화 확산
-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 비대면 결제 서비스 확대
- 소규모 맞춤 생산 및 소비 확산
- 디지털 산업 규제 논의 확대

□ 환경적 요인

❍ 기후변화
- 지구 온도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협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극적인 변화
- 탄소배출 저감 압박 증대
- 생물 다양성 위협 증대

❍ 자원 및 에너지 부족
- 천연자원·원자재 부족 및 공급 문제 심화
- 기술발전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수요 증가

- 자원 및 에너지 안보 및 안정성 확보
- 탈탄소에 따른 대체 자원의 개발 요구 증대
- 자원 및 에너지 분쟁 증가

❍ 전염병 등 건강 위협
- 글로벌 전염병 증가 및 관리 취약 문제 심화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대규모 질병 발생
- 신종 질병 및 치료 등 관리 문제 대두
- 고령층 건강관리 및 질병 위협 증대
-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문제에 따른 새로운 질병 발생

□ 정치적 요인

❍ 큰 정부의 역할 기대
- 국가위기에 대한 정부 및 공공영역의 개입 증대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부 역할 증대
- 공공정책 및 정부지원의 중요성 증대
- 정부 및 정책의 역할에 대한 도전 증대
-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는 적극적 정책 요구 증대

❍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
- 투명성·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증대
- 공공문제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
-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 정부 신뢰 위기와 국가시스템 불안정성 증가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대

❍ 민주주의 강화
- 민주주의 위협과 시민참여 확대 요구
- 정부와 기관에 대한 대중 신뢰 하락과 통치구조의 재정립
- 정부와 시민의 협력 증대

- 시민사회 성숙 및 정책참여 중요성 증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 증대

[표 2-4]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을 활용한 STEEP 분석 결과

구분	구성요소	주요 내용
사회적 요인	인구구조	- 선진국의 고령화 인구 비율 증가 및 인구증가 둔화 - 연령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원동력 저하 - 가족 및 가족구조의 변화 -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부부의 증가 - 이민과 이주의 증가
	사회갈등	- 사회적 응집력 문제 등 세대 간 갈등 -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등 성별 격차 해소 - 다문화 사회 갈등 증가 - 소득과 부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험 초래 증가 - 사회 집단 간 불평등 심화
	사회 안전과 인권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 및 폭력 증가 - 사회적 약자 안전보장에 대한 취약성 증가 - 디지털 안전사회 요구 증가 - 전염병에 의한 사망 증가 - 인권과 자유의 제한
기술적 요인	기술혁신	- 기술진보 및 혁신 가속화 - AI,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변혁적 기술개발 - 디지털 기술의 혁신 주도 - 디지털 기술 기반 기능 및 서비스 제공·연결 -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대전환	- 기술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보급 - 경제·산업·사회·문화 등 대전환 촉진 -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대 - 기술혁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구축·관리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문제 등 역기능 위협 확산
	노동시장 변화	- 생산성 향상 및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 새로운 직업의 창출 및 교육·역량 강화 요구 - 기술혁신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 작업 자동화에 따른 실업 및 일자리 감소 문제 - 직업 변화와 전환 비용, 디지털 격차 등 부정적 영향 우려 확산
경제적 요인	경제성장률 저하 및 무역갈등 심화	- 저성장 경제의 지속 및 경제 역동성 약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부채 - 인플레이션 지속 - 세계무역 성장률 저하 - 글로벌 통상갈등 심화

구분	구성요소	주요 내용
	경제적 불평등 심화	- 부의 집중 및 소득 불평등 가속화 - 노동 소득 감소 및 자본 소득 증가 - 실업률 증가 - 경제·사회 전반의 불안 확대 -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경제권 확대	- 디지털 경제의 블록화 확산 -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 비대면 결제 서비스 확대 - 소규모 맞춤 생산 및 소비 확산 - 디지털 산업 규제 논의 확대
환경적 요인	기후변화	- 지구 온도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협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극적인 변화 - 탄소배출 저감 압박 증대 - 생물 다양성 위협 증대
	자원 및 에너지 부족	- 천연자원·원자재 부족 및 공급 문제 심화 - 기술발전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수요 증가 - 자원 및 에너지 안보 및 안정성 확보 - 탈탄소에 따른 대체 자원의 개발 요구 증대 - 자원 및 에너지 분쟁 증가
	전염병 등 건강 위협	- 글로벌 전염병 증가 및 관리 취약 문제 심화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대규모 질병 발생 - 신종 질병 및 치료 등 관리 문제 대두 - 고령층 건강관리 및 질병 위협 증대 -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문제에 따른 새로운 질병 발생
정치적 요인	큰 정부의 역할 기대	- 국가위기에 대한 정부 및 공공영역의 개입 증대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부 역할 증대 - 공공정책 및 정부지원의 중요성 증대 - 정부 및 정책의 역할에 대한 도전 증대 -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는 적극적 정책 요구 증대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	- 투명성·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증대 - 공공문제에 대한 실질적 참여 보장 -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 정부 신뢰 위기와 국가시스템 불안정성 증가 -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민주주의 강화	- 민주주의 위협과 시민참여 확대 요구 - 정부와 기관에 대한 대중 신뢰 하락과 통치구조의 재정립 - 정부와 시민의 협력 증대 - 시민사회 성숙 및 정책참여 중요성 증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 증대

3. ChatGPT를 활용한 STEEP 분석 결과

□ 분석 개요

○ 본 연구에서는 STEEP 분석에 있어 글로벌 메가트렌드 관련 보고서에 한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미래사회의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ChatGPT-4를 활용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STEEP 분석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음

-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활용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2022년 11월 OpenAI의 ChatGPT는 출시와 동시에 검색 엔진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정보탐색능력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음(유수동 외, 2023b)

○ 이러한 점에서 ChatGPT를 탐색적으로 활용하여 STEEP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 및 미래예측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함

- 다방면의 주제와 이슈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야 하는 미래 연구에 앞서, ChatGPT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초자료를 얻게 됨으로써 의미있는 연구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분석절차

○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4

○ 검색기간: 2023.05.04.~2023.05.10.

- 해당 기간 동안 STEEP 분석방법론과 지방행정, 지방행정과 관련된 STEEP 분석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음

○ 질문: “지방행정과 관련된 STEEP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정리해 주세요.”

□ **분석결과**

❍ 사회적 요인은 '다문화 사회', '고령인구',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으로 정리되었음

❍ 기술적 요인은 '스마트 시티', '디지털 정부', '사이버 보안'으로 정리되었음

❍ 경제적 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투자 증가'로 정리되었음

❍ 환경적 요인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자원 재활용'으로 정리되었음

❍ 정치적 요인은 '규제 혁신', '지방자치 강화', '공공참여 증대'로 정리되었음

[표 2-5] ChatGPT를 활용한 STEEP 분석 결과

구분	구성요소	주요 내용
사회적 요인	다문화 사회	- 이민자 및 국제결혼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 증가 -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접근방식 필요 - 다문화 가정의 교육, 문화적 차이 이해 등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고령인구	-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 필요 - 의료, 장기요양, 레크레이션,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 - 건강관리, 안전한 주거환경, 활동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지원정책 요구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사회적 서비스 접근 제한에 대한 우려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조건 개선, 사회참여 촉진 정책 필요 - 안정적 주거, 고용, 교육 등에 대한 지원 필요
기술적 요인	스마트 시티	- IoT,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 -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 등의 도시문제 해결 -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 안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인프라 필요
	디지털 정부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 이용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공공서비스 효율성 향상, 행정 투명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의 이슈 검토 필요
	사이버 보안	- 디지털화와 네트워킹 증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 중요성 증가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과 정책적 지원 필요 -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인식 교육, 보호 정책, 긴급대응체계 필요
경제적 요인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내 경제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 - 지역 특산물 및 산업발전 지원, 지역기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정책 요구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관광 산업, 특화 교육, 지역 내 소비 촉진 등에 대한 노력 필요

구분	구성요소	주요 내용
	지속 가능한 발전	-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고려한 환경 보호 - 친환경 에너지 사용,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지역 생태계 보호 등의 정책 필요 - 지역사회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자원 보존에 기여
	공공투자 증가	- 정부의 지역 인프라 개발, 사회 복지 서비스 개선, 경제 활력 촉진 지원 - 교통, 의료, 교육 서비스,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투자 지원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사회복지 개선 등에 대한 요구
환경적 요인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 변화 대응, 재난 위험 감소 등에 대한 요구 -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필요 -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및 집단 보호, 인식 증진, 연구 및 데이터 수집 필요
	녹색성장	- 경제 활력 촉진과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요구 - 친환경 에너지 산업, 그린 인프라 및 기술, 친환경 일자리 창출 필요 -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과 교통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과 산림 관리에 대한 지원 필요
	자원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에너지 변환 등을 통해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 부담 감소 필요 -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재활용 산업의 발전 지원 요구 - 교육 및 인식 증진 프로그램,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연구 및 개발 필요
정치적 요인	규제 혁신	-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노력 - 규제 프로세스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보호와 공공 이익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규제 필요
	지방자치 강화	- 지방정부의 결정권과 책임 강화, 지역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 제공 -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성 강화, 지방 입법 및 정책결정 권한 확대 요구 -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증진 필요
	공공참여 증대	-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요구 반영을 위한 노력 필요 - 공개 토론, 시민 참여 워크샵, 온라인 투표 등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촉진 - 공공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 효과성 제고

주: ChatGPT-4 검색기간 및 학습내용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4. STEEP 분석 결과 종합

□ 분석 개요

○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STEEP 분석결과와 ChatGPT-4를 활용한 STEEP 분석결과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미래사회의 거시적인 환경변화를 종합하였음

○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하위 요인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STEEP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갈등의 증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으로 도출되었음
- 기술적 요인은 '디지털 기술혁신', '디지털 대전환',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도출되었음
- 경제적 요인은 'COVID-19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극복', '팬데믹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 극복',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전환'으로 도출되었음
- 환경적 요인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자원부족의 시대 진입', '심각한 국제질병의 증가'로 도출되었음
- 정치적 요인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 '시민주도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시민 간 수평적인 소통구조 형성'으로 도출되었음

□ 사회적 요인

○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
- 성장잠재력 및 사회활력의 저하

○ 사회갈등의 증가

-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심화

- 공정성을 둘러싼 MZ세대의 불만 심화
- 청년실업, 다문화 등 사회적 갈등 심화

❍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증가
- 디지털 성범죄 증가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 및 범죄 증가

□ 기술적 요인

❍ 디지털 기술혁신
-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변혁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등 혁신 주도
- 로봇, 자동화 등에 따른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

❍ 디지털 대전환
-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 스마트시티의 등장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기능 문제
  - 고용구조 양극화, 프라이버시 침해, 인공지능 해킹·오작동 등

❍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 노동시장(산업·직업의 종류 등)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
- 새로운 직업역량의 대두
- 고용시장 변화로 인한 일자리 이슈
  - 일자리 감소,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 경제적 요인

❍ COVID-19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극복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전환
-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정체 현상
-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통상갈등 심화

❍ 팬데믹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 극복
-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 심화
- COVID-19로 인한 서비스 업종·저숙련 일자리 감소
-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 위기 심화

❍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전환
- 스마트 스토어, B2B·B2C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개인화된 비대면 서비스 확산
-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가 중요 소비층으로 부상

□ 환경적 요인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 기후변화의 심화 및 기온 상승
- 이상기후 증가로 인한 재해 빈도 증가 및 다양화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양립

❍ 자원부족의 시대 진입
- 중요 자원의 가용성 감소 및 수요 증가
- 과학기술발전과 에너지 수요 증가
- 안전한 식량 및 깨끗한 수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 심각한 국제질병의 증가
- 국가 간 이동성 강화로 인한 전염 확산
-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의 증가
-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 출현

□ 정치적 요인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
-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적 종합대책의 필요성 대두
- 최소 생활권 보장에 대한 요구와 적극적 대응
-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요구

❍ 시민주도(citizen-driven)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의 능동적 참여
-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결정, 집행, 평가, 환류
- 공론의 장을 통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 정부-시민 간 수평적인 소통구조 형성
-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참여형 통치구조의 중요성
- 시민소통 기술과 참여 증진 도구의 적극적 활용

[표 2-6] STEEP 분석 결과 종합

구분	구성요소	주요 내용
사회적 요인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 - 성장잠재력 및 사회활력의 저하
	사회갈등의 증가	-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심화 - 공정성을 둘러싼 MZ세대의 불만 심화 - 청년실업, 다문화 등 사회적 갈등 심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증가 - 디지털 성범죄 증가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 및 범죄 증가
기술적 요인	디지털 기술혁신	-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변혁 -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등 혁신 주도 - 로봇, 자동화 등에 따른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 스마트시티의 등장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기능 문제

구분	구성요소	주요 내용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 노동시장(산업·직업의 종류 등)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 - 새로운 직업역량의 대두 - 고용시장 변화로 인한 일자리 이슈
경제적 요인	COVID-19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극복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전환 -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정체 현상 -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통상갈등 심화
	팬데믹 이후 소득양극화 심화 극복	-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 심화 - COVID-19로 인한 서비스 업종·저숙련 일자리 감소 -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 위기 심화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전환	- 스마트 스토어, B2B·B2C 거래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개인화된 비대면 서비스 확산 -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가 중요 소비층으로 부상
환경적 요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 기후변화의 심화 및 기온 상승 - 이상기후 증가로 인한 재해 빈도 증가 및 다양화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양립
	자원부족의 시대 진입	- 중요 자원의 가용성 감소 및 수요 증가 - 과학기술발전과 에너지 수요 증가 - 안전한 식량 및 깨끗한 수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심각한 국제질병의 증가	- 국가 간 이동성 강화로 인한 전염 확산 -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의 증가 -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 출현
정치적 요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증대	-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적 종합대책의 필요성 대두 - 최소 생활권 보장에 대한 요구와 적극적 대응 -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요구
	시민주도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의 능동적 참여 -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결정, 집행, 평가, 환류 - 공론의 장을 통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정부-시민 간 수평적인 소통구조 형성	-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참여형 통치구조의 중요성 - 시민소통 기술과 참여 증진 도구의 적극적 활용

제4절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

1. 퓨처스 휠 기법 개요

□ 분석 개요

❍ 퓨처스 휠(Futures Wheel)은 토론을 통해 미래와 관련된 질문과 생각들을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식임(유수동, 2023)

- 즉,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토론과정을 구조화한 것으로, 사회 트렌드나 미래에 일어날 잠재성 있는 사건을 종이 가운데 써넣고 중앙에서부터 점차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임
- 퓨처스 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음(박영숙 외, 2007)
  - 미래사회 트렌드나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
  - 영향들 간 복잡하게 얽힌 연관관계를 알아보려 할 때
  - 다른 미래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볼 때
  - 현 사회 트렌드나 미래 잠재적 상황이 앞으로 미칠 영향들은 무엇인지 고려할 때
  - 대안 시나리오 안에서 예측해야 할 때
  - 미래를 염두에 둔 전망을 내놓을 때
- 이러한 점에서 퓨처스 휠 기법은 미래연구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할 방법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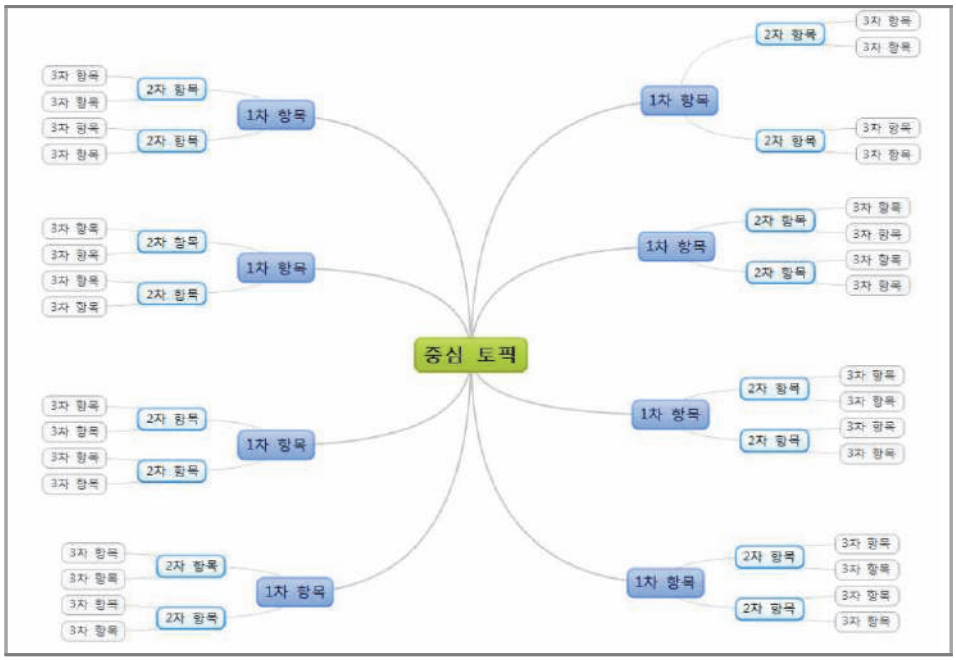
❍ 퓨처스 휠 기법은 이슈화되는 항목들을 서로 연관시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요인들 간의 복잡하게 얽힌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임(남태우·유수동, 2016)

-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평적·위계 질서적이며, 단순한 사고를 유기적이고 복잡한 사고로 상호 이동함으로써 사회 트렌드와 사회 이슈를 정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남태우·유수동, 2016)

- 중심 토픽의 동인들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인들과 관련된 특정 트렌드, 또는 사건을 중심으로 2차, 3차 항목에 대해 구조화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된 동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핵심적인 동인들을 추출할 수 있음(유수동·박현욱, 2022)

❍ 퓨처스 휠 기법의 형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2] 퓨처스 휠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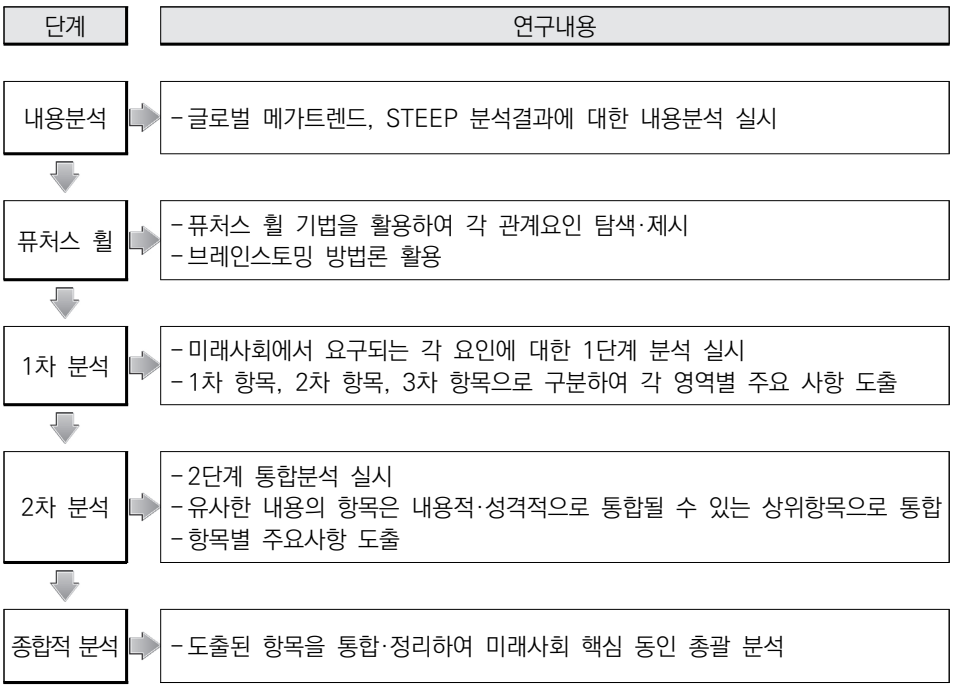
□ 분석절차

❍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하여 STEEP 분석결과 도출된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함

❍ 중심 토픽이라 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거시적인 환경변화인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방사형 형식의 1차 항목과 2차 항목, 3차 항목으로 확장해 나갔음

- 글로벌 메가트렌드, STEEP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퓨처스 휠 기법을 적용하였음
-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각 관계요인들을 탐색·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논의과정을 거쳐 영향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유수동·박현욱(2022)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합의의 법칙(rule of unanimity)'에 따라 연구자 간 동의를 거쳐 중요 요인별 연결고리를 범주화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그림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수차례 확인 및 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그림 2-3]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한 분석절차



2. 미래사회 핵심 동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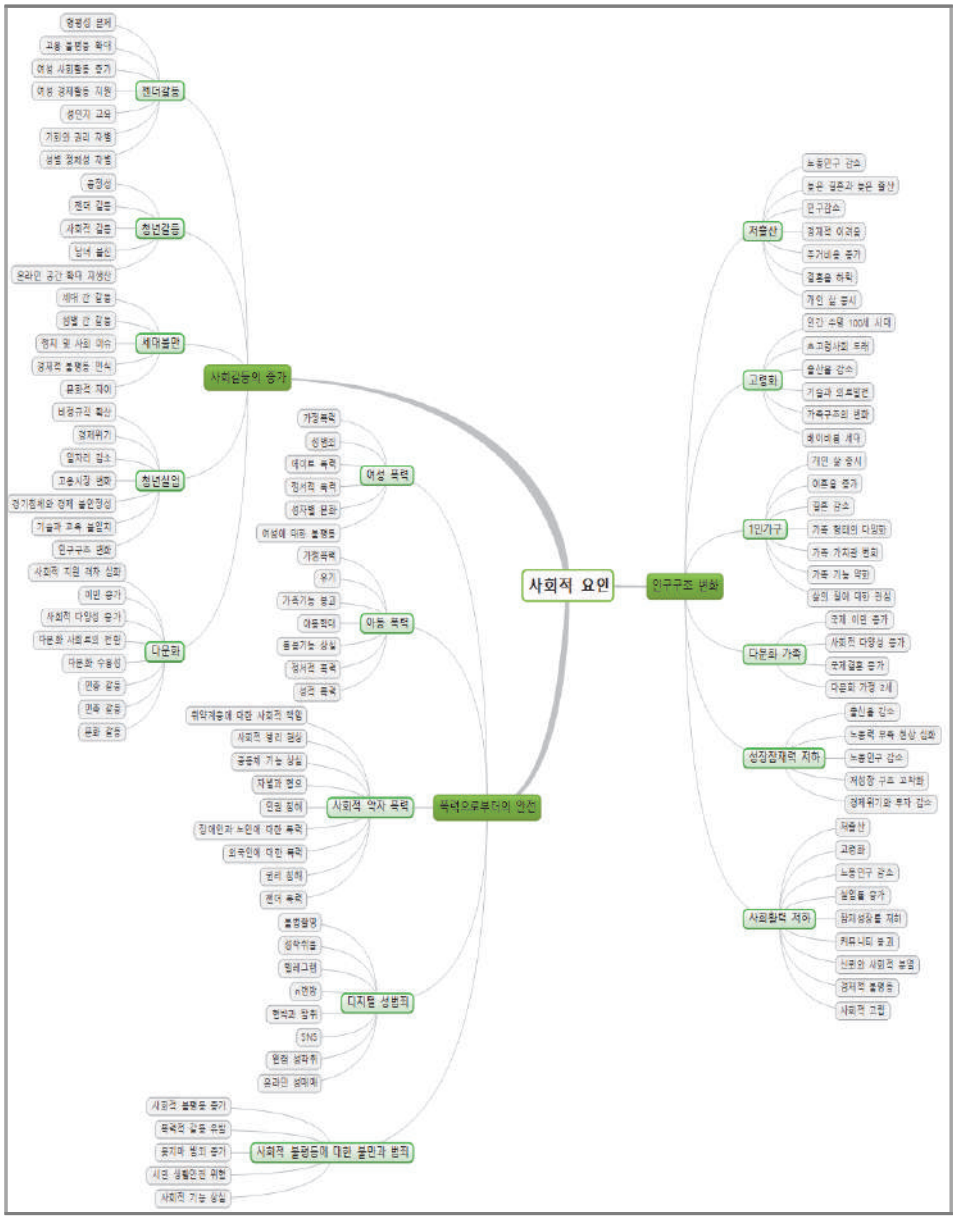
❍ STEEP 분석 결과 도출된 각 요인들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을 분석하였음
- STEEP의 각 요인들을 변화 동인 그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단순히 미래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분석체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변화, 특히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의 복잡성을 고려해보면, STEEP의 각 구성체계는 상호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STEEP 분석 이후에 각 요소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특히, ChatGPT 활용에 있어 답변의 신뢰성, 편향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통한 STEEP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을 도출하고자 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STEEP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요인들과 세부 구성요인에 대해 미래예측방법론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하였음

□ 사회적 요인

❍ STEEP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중심토픽인 사회적 요인에 대한 1차 항목은 '인구구조 변화', '사회갈등의 증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으로 구분하였음
- 다음으로 1차 항목별로 2차 항목과 3차 항목으로 확장하였으며, 주요 항목들을 도출하였음
- 사회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과 주요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4] 사회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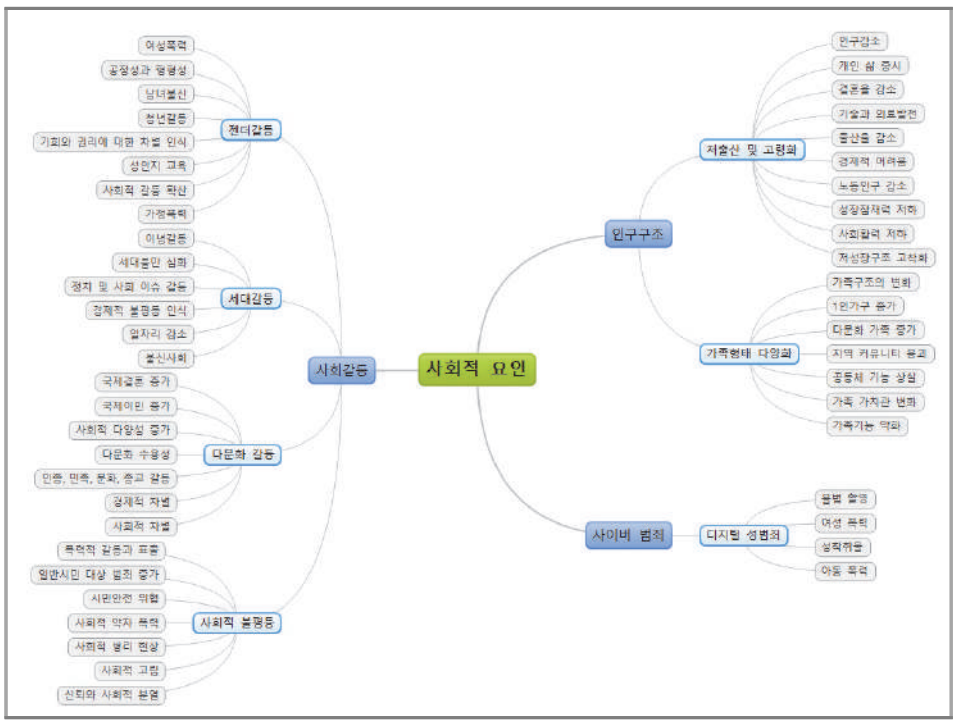


❍ 1단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역별 주요 내용들을 그룹화하기 위해 퓨처스 휠 기법을 다시 활용하여 2단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2단계 분석을 통해 성격적·내용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상위 항목으로 통합 및 정리하였음
- 통합과정을 거쳐 1차 항목으로는 '인구구조', '사회갈등', '사이버 범죄'로 정리·구분되었음
- 2차 항목으로서 '인구구조'는 '저출산 및 고령화', '가족형태 다양화'로, '사회갈등'은 '젠더갈등', '세대갈등', '다문화 갈등', '사회적 불평등'으로, '사이버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정리되었음

❍ 다음은 사회적 요인에 대한 각 영역별 주요 사항들을 그룹화한 것임

[그림 2-5] 사회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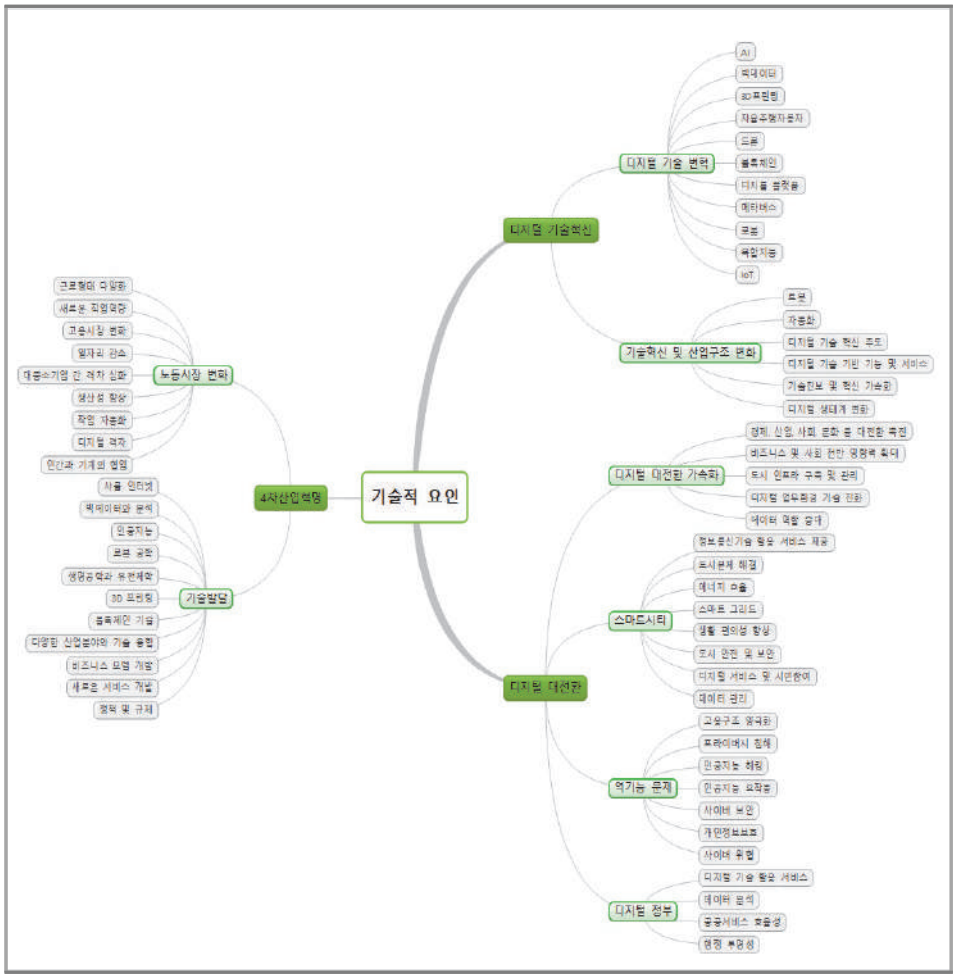


□ 기술적 요인

○ STEEP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중심 토픽인 기술적 요인에 대한 1차 항목은 '디지털 기술혁신',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구분하였음

- 기술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과 주요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6] 기술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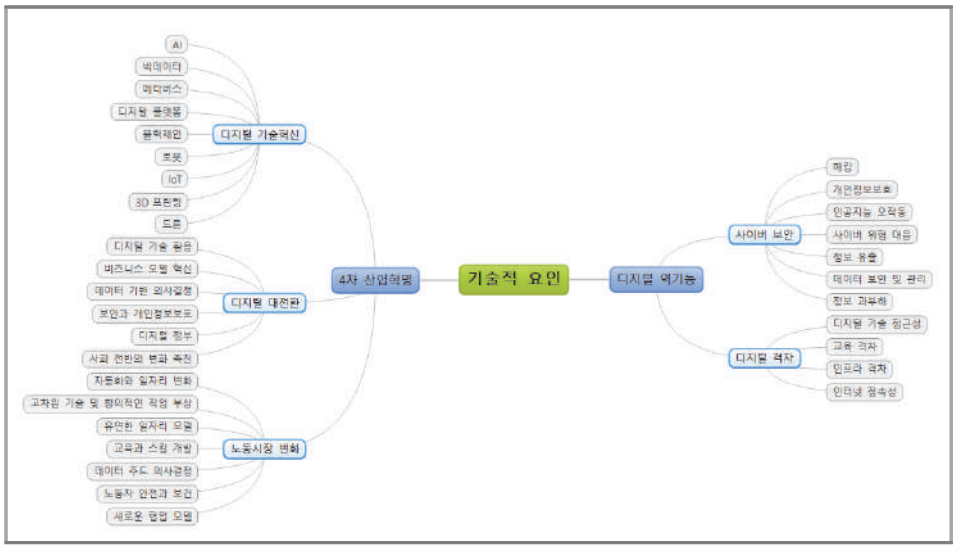


○ 통합과정을 거쳐 1차 항목으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역기능'으로 정리·구분되었음

- 2차 항목으로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혁신', '디지털 대전환', '노동시장 변화'로, '디지털 역기능'은 '사이버 보안', '디지털 격차'로 정리되었음

○ 다음은 기술적 요인에 대한 각 영역별 주요 사항들을 그룹화한 것임

[그림 2-7] 기술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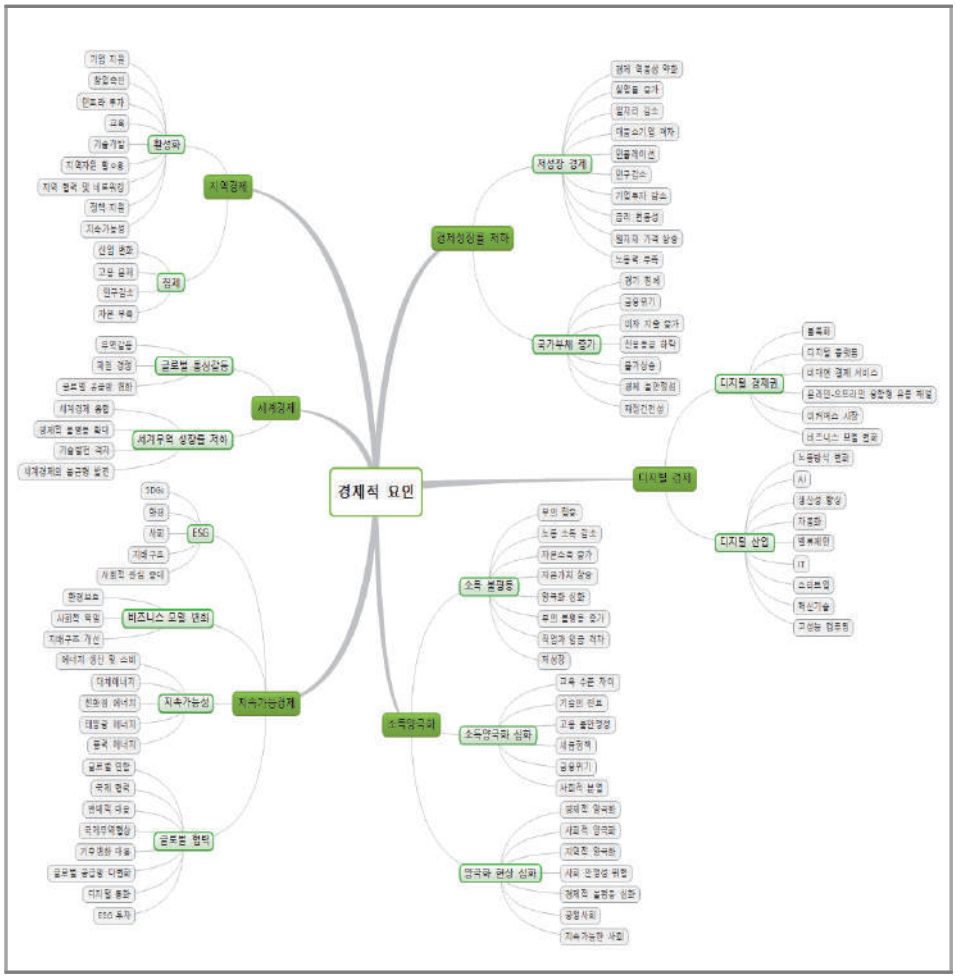


□ 경제적 요인

○ STEEP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중심 토픽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1차 항목은 '디지털 경제', '소득양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구분하였음

- 경제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과 주요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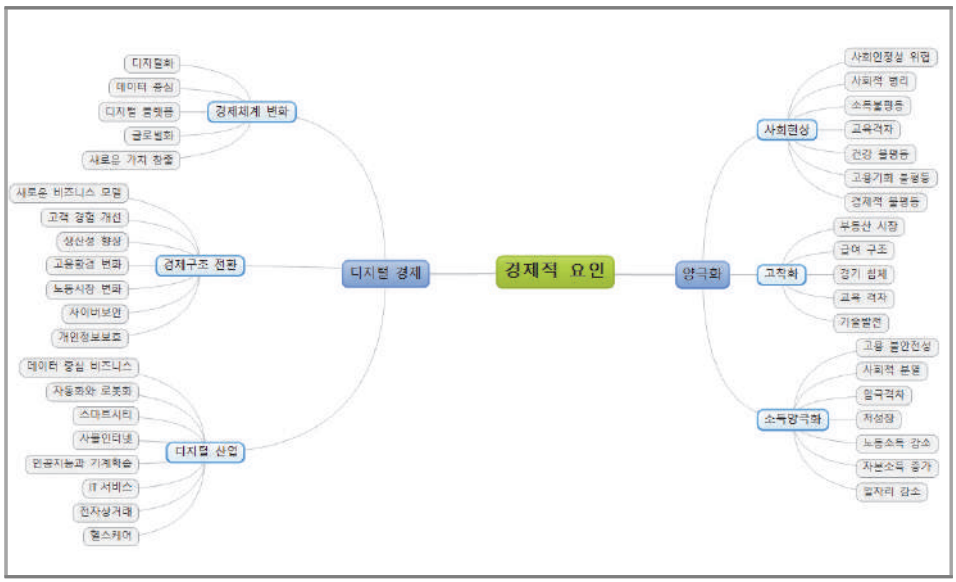
[그림 2-8] 경제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 통합과정을 거쳐 1차 항목으로는 '디지털 경제', '양극화'로 정리·구분되었음
  - 2차 항목으로서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산업', '경제구조 전환', '경제체계 변화'로, '양극화'는 '소득양극화', '고착화', '사회현상'으로 정리되었음

❍ 다음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각 영역별 주요 사항들을 그룹화한 것임

[그림 2-9] 경제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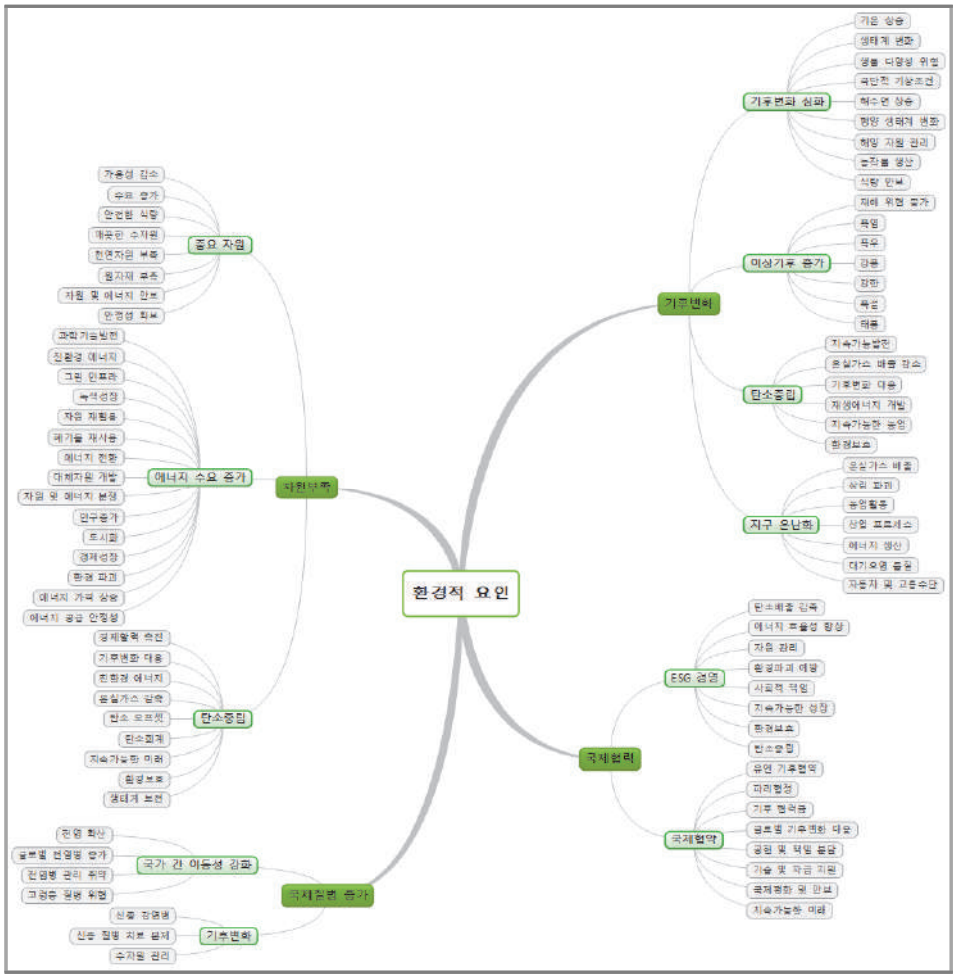


□ 환경적 요인

○ STEEP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중심 토픽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1차 항목은 '기후변화', '자원부족', '국제질병 증가', '국제협력'으로 구분하였음

- 환경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과 주요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2-10] 환경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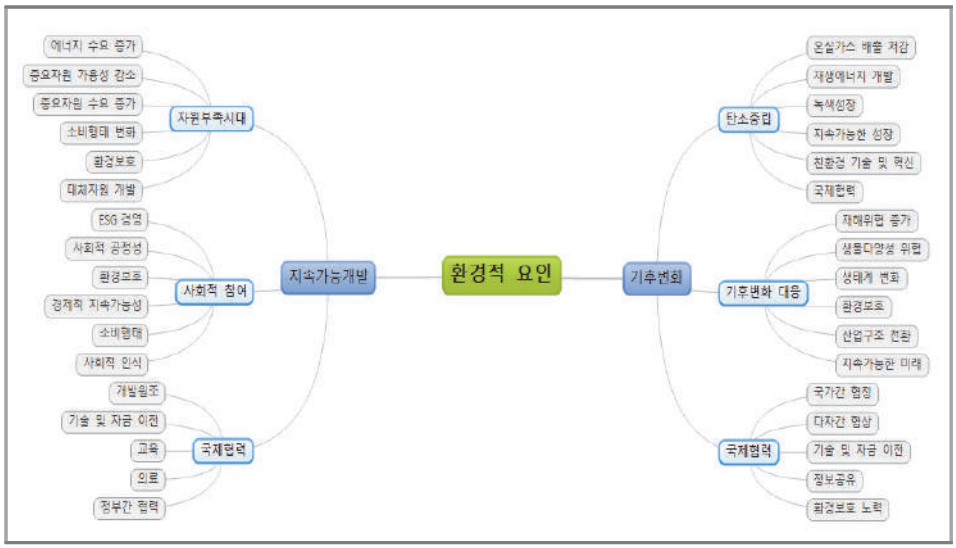


❍ 통합과정을 거쳐 1차 항목으로는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로 정리·구분되었음

- 2차 항목으로서 '기후변화'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으로, '지속가능개발'은 '자원부족시대', '사회적 참여', '국제협력'으로 정리되었음

❍ 다음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각 영역별 주요 사항들을 그룹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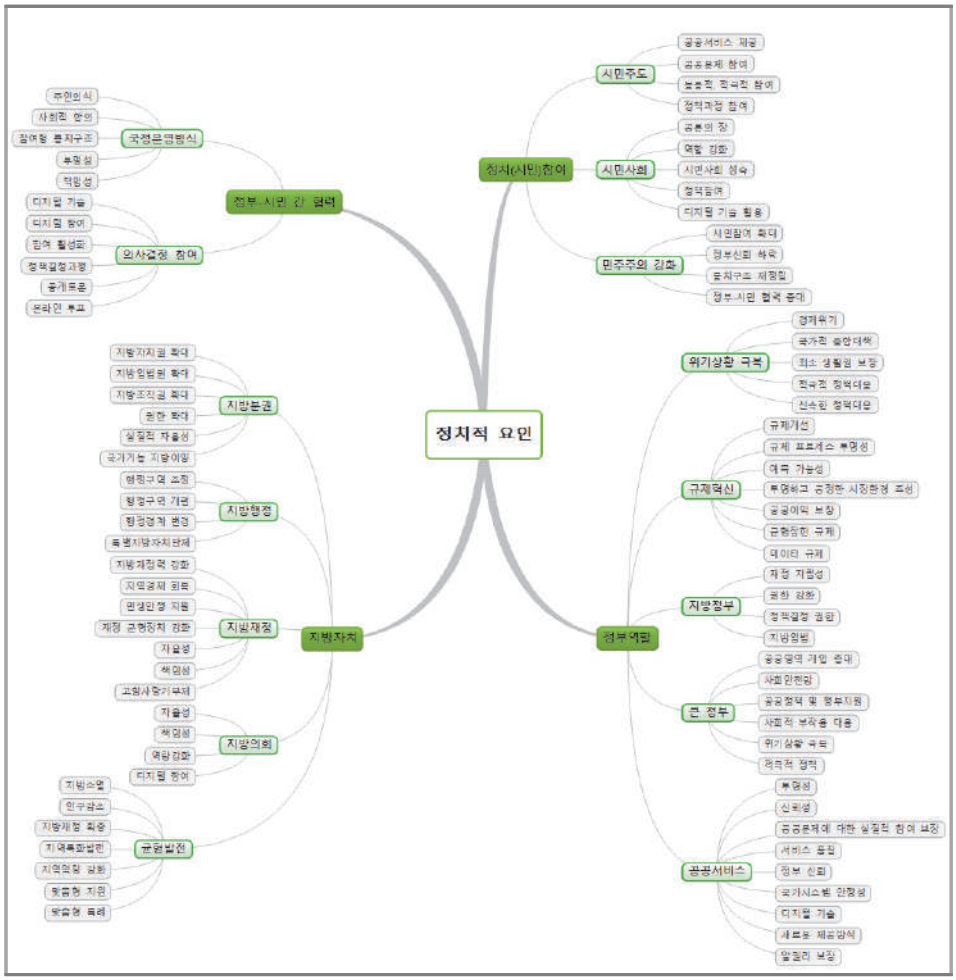
[그림 2-11] 환경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 정치적 요인

○ STEEP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중심 토픽인 정치적 요인에 대한 1차 항목은 '지방자치', '정부역할', '정치(시민)참여', '정부-시민 간 협력'으로 구분하였음
- 정치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과 주요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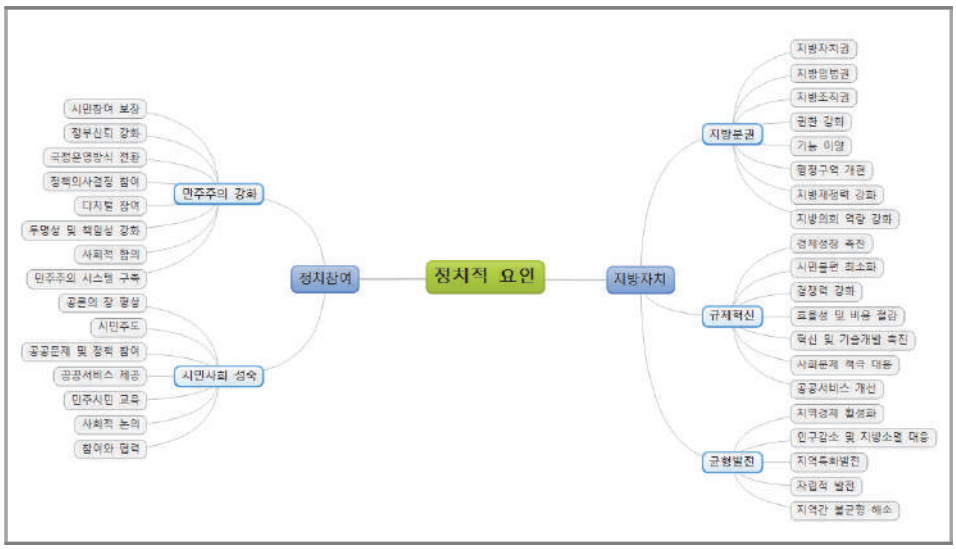
[그림 2-12] 정치적 요인에 대한 1단계 분석



❍ 통합과정을 거쳐 1차 항목으로는 '정치참여', '지방자치'로 정리·구분되었음
  - 2차 항목으로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 강화', '시민사회 성숙'으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규제혁신'으로 정리되었음

❍ 다음은 정치적 요인에 대한 각 영역별 주요 사항들을 그룹화한 것임

[그림 2-13] 정치적 요인에 대한 2단계 분석



□ 분석결과의 종합

○ 퓨처스 휠 기법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요 요인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사회적 요인: 인구구조, 사회갈등, 사이버 범죄
- 기술적 요인: 4차 산업혁명, 사이버 범죄[1)]
- 경제적 요인: 디지털 경제, 양극화
- 환경적 요인: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정치적 요인: 정치참여, 지방자치

○ 미래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STEEP의 각 구성체계가 상호 독립적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주요 키워드)을 최종적으로 제안하였음

[표 2-7]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주요 키워드)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주요 키워드)				
인구구조	사회갈등	사이버 범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양극화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정치참여	지방자치

□ 미래사회 핵심 동인의 거시적 영향

○ 인구구조

- 인구구조는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및 교육 시스템과 가족구조, 사회복지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과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증가,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쳐 자원 소모와 환경파괴에 영향을 미친다.

1) 기술적 요인의 디지털 역기능은 사이버 범죄로 통합하였다. 디지털 역기능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해킹, 개인정보보호, 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과 방향성이 유사한 사이버 범죄로 통합하였다.

❍ 사회갈등

• 사회갈등은 사회, 경제, 정치, 국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사회갈등은 사회적 불안과 불안정, 사회적 분열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사회갈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 투자 및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 사회갈등은 정책결정 지연, 정부기능 저하, 정치적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영향) 사회갈등은 개인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 무력감 등 정신적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영향) 사회갈등은 민주주의 기반 약화, 주변 국가의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 사이버 범죄

• 사이버 범죄는 사회, 경제, 정치, 개인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사이버 범죄는 사회적 신뢰 수준, 불안감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사이버 범죄는 재정 손실 초래, 지식 재산 침해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 사이버 범죄는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위협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영향) 사이버 범죄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심리적 피해 등에 영향을 미친다.

❍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은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4차 산업혁명은 교육과 기술 접근성, 의사소통과 연결, 디지털 격차, 사이버 보안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일자리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와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영향)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영향) 4차 산업혁명은 국제협력, 전략적 경쟁 등에 영향을 미친다.

❍ 디지털 경제

• 디지털 경제는 사회, 경제, 환경, 개인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디지털 경제는 사회문화, 라이프 스타일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디지털 경제는 경제성장과 혁신, 생산성 향상, 일자리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영향) 디지털 경제는 유통구조를 축소하여 환경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영향) 디지털 경제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역량강화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영향) 디지털 경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 양극화

• 양극화는 사회, 경제, 정치, 개인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양극화는 사회 불안과 불평등, 범죄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양극화는 경제성장 저해,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 양극화는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 야기,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영향) 양극화는 교육격차, 개인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사회, 경제, 환경, 개인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기후변화는 생활방식, 사회적 불균형 심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기후변화는 자원부족, 재해로 인한 손실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 기후변화는 정치적 논쟁과 협상,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영향) 기후변화는 생태계 변화, 자연재해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 영향) 기후변화는 개인건강, 전염병, 새로운 질병 등의 위협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영향) 기후변화는 국제정치 및 협력, 정치적 분쟁 등에 영향을 미친다.

❍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개발은 사회, 경제, 환경, 국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개발은 사회적 공정성 촉진, 사회적 불평등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지속가능개발은 경제성장 지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영향) 지속가능개발은 환경보호,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영향) 지속가능개발은 국제협력 촉진 및 국제정치 등에 영향을 미친다.

❍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사회, 경제, 정치, 국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정치참여는 사회적 불만 및 갈등 조절, 사회적 안정 및 통합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정치참여는 경제적 균형과 분배, 조세정책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 정치참여는 성숙한 정치문화와 가치관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영향) 정치참여는 외교정책 및 국제협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

❍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진흥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영향) 지방자치는 지역경제발전, 지역 인프라, 지방재정 확충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간 협력, 공동문제 해결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적 영향) 지방자치는 지역환경보호 및 지속가능개발 촉진 등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영향) 지방자치는 다른 국가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KRIL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제3장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제1절 분석의 틀
제2절 미래사회 주요 이슈
제3절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제4절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제3장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제1절 분석의 틀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을 위해 정성적·정량적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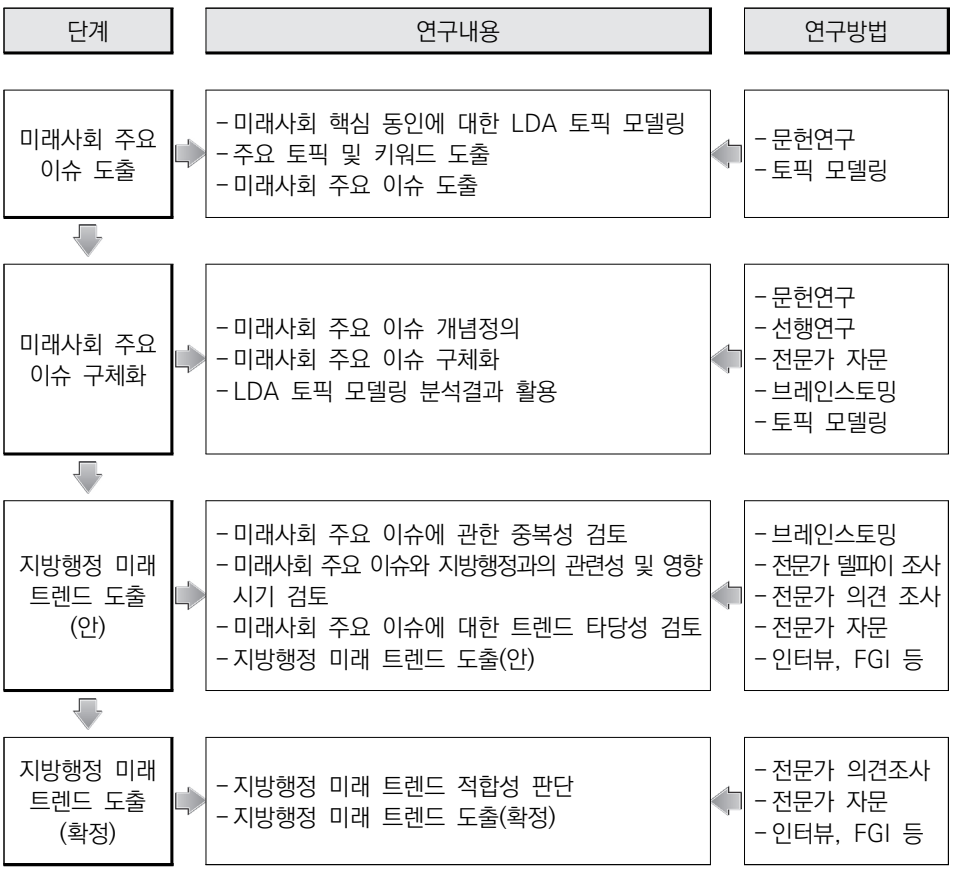
❍ 퓨처스 휠 기법을 통해 도출된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을 중심으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음
- 이를 위해 미래사회 핵심 동인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요 토픽 및 키워드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음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하였음
- 미래사회 핵심 동인을 키워드로 설정하여 학술논문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음

❍ 미래사회 주요 이슈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였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사회 주요 이슈와 지방행정과의 관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였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확정하였음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의 적합성, 영향시기 등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그림 3-1] 분석설계 구조: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제2절 미래사회 주요 이슈

1. 분석 개요

1) 토픽 모델링

❍ 토픽 모델링이란 대량의 문서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구조를 파악하고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확률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조화 되어있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단어의 동시출현 패턴을 통해 주제를 추출함(문길성, 2021)

❍ 대량의 문서가 주어졌을 때 의미 있는 주제를 발굴하거나 유사한 단어를 하나의 말뭉치로 분류함으로써 관련 있는 단어를 집단화하여 분석할 수 있음

❍ 다량의 자연어를 확률적·통계적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질적, 양적 연구의 장점을 갖춘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이성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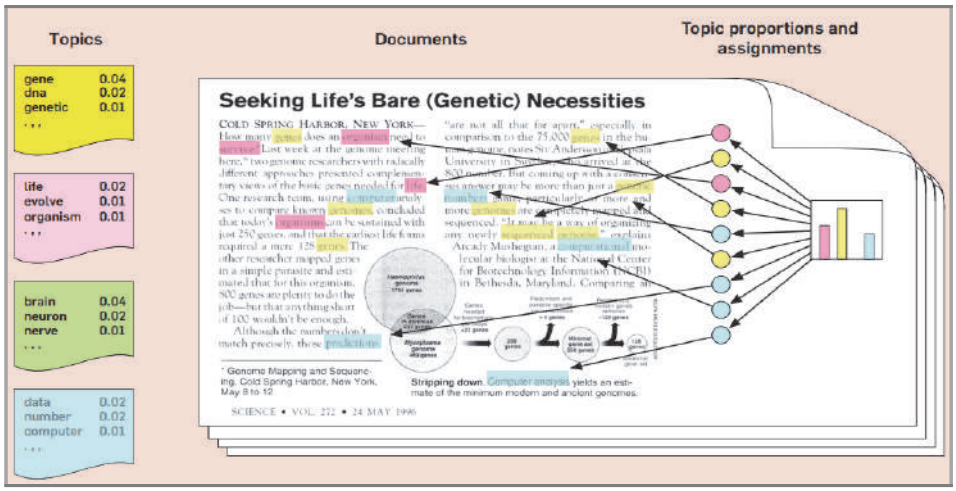
2) LDA 토픽모델링

❍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확률적 생성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군집 분석방법 중 하나로, 문서 집합 내 단어들에 대한 디리클레(dirichlet) 분포를 통하여 지정한 수만큼의 토픽을 생성함(박주섭 외, 2017)
-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LDA 알고리즘은 긴 문서에 적용될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문길성, 2021),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뉴스기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서별 토픽 분포와 토픽별 단어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관계를 갖는 단어들은 하나의 토픽으로 묶이고, 묶여 있는 단어들을 통해 잠재된 토픽을 추론할 수 있음(남춘호, 2016)

❍ LDA의 기본 가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각각의 토픽에는 다양한 단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함(왼쪽)
- 각각의 문서 또한 여러 개의 토픽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오른쪽)
- 즉, 한 문서 내에는 여러 개의 토픽이 존재하며 한 토픽 내에도 여러 개의 단어가 존재함

[그림 3-2] 잠재디리클레할당의 기본 가정에 대한 직관적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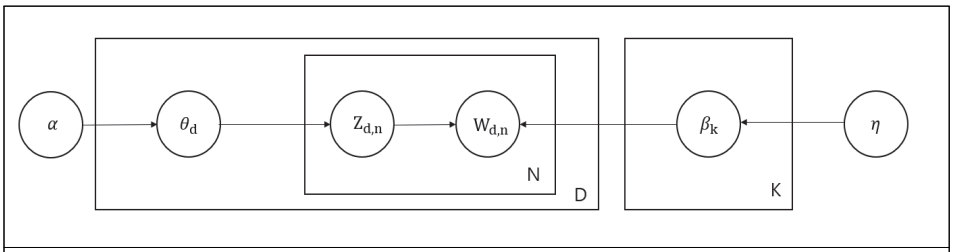


출처: Blei(2012)

❍ LDA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단어가 토픽에 할당될 사전확률 η로부터 k개 토픽에 대해 각 단어들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해 β를 추정함
- 사전확률 α로부터 각 문서에 대해 문서별 토픽 분포θ를 샘플링함
- 토픽할당(Z)을 통해 단어를 할당하고 β분포에 따라 토픽을 선정함
-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의 빈도를 통해 실제 단어(W)가 선정됨
- $W_{d,n}$를 제외한 나머지 원들은 잠재변수를 나타내며, 사각형 모형은 계속해서 해당 과정이 반복됨을 의미함

[그림 3-3] 잠재디리클레할당 그래픽 모델



D : 문서집합
d : 개별문서
K : 토픽의 수
β_x : k번째 토픽의 단어 분포 확률
θ_d : 문서d에 대한 토픽 비율
$Z_{d,n}$: 문서d의 n번째 단어에 대한 토픽 할당
$W_{d,n}$: 문서d에서 관찰되어진 n번째 단어(관측변수)
α : 토픽분포의 사전확률
η : 단어가 토픽에 할당된 사전확률

출처: Blei(2012)

3) 토픽 모델링을 위한 수집자료

❍ 수집 채널 및 대상: 네이버 뉴스를 통해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국내 언론사 전체

❍ 수집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수집 키워드: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주요 키워드)

[표 3-1] 토픽 모델링을 위한 수집 키워드: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주요 키워드)

수집 키워드				
인구구조	사회갈등	사이버 범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양극화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정치참여	지방자치

2. 미래사회 주요 이슈 관련 토픽 모델링 결과

1) 자료량 분석

❍ 토픽 모델링을 위해 수집·활용한 자료량은 뉴스기사 총 221,331건임
- 지방자치가 80,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후변화 63,787건, 4차 산업혁명 39,092건, 사회갈등 9,091건, 디지털 경제 7,9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 수집 키워드와 자료량: 뉴스기사

(단위: 건)

수집 키워드	자료량
인구구조	6,334
사회갈등	9,091
사이버 범죄	4,118
4차 산업혁명	39,092
디지털 경제	7,946
양극화	5,868
기후변화	63,787
지속가능개발	998
정치참여	3,874
지방자치	80,223
합계	**221,331**

❍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위해 정제기준을 수립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 (1차) 중복 및 스팸 데이터 제거
- (2차) Mecab-ko[2]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형태소 분석
- (3차) 조사, 어미, 고유명사, 복합명사 등 분석에 불필요한 불용어 제거

2) 일본어 형태소 분석기 'mecab'을 한국어 분석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것으로,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를 활용하여 학습하였다.

[표 3-3]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위한 정제기준: 불용어 목록

분석제외 키워드				
한자 (學敎, 論議, 國民, 大韓民國 등)	기관명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증시 관련 (상한가, 하한가, 시총, 거래량 등)	이벤트 홍보 (사은품, 신제품, 체험단 등)	인사발령 (취임식, 선임, 위촉, 발령 등)
특수문자 (!, ", $, %, &, ', (,*, +, - 등)	인물명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운동선수, 연예인 이름 등)	표창 및 행사 관련 (대통령상, 표창장 수여, 장관상, 축사, 개최 등)	지역명 (서울, 부산, 광진구, 포항시 등)	조사, 어미 등 (은, 는, 이, 가, 물론, 또한, 그러나, 했다. 한다. 등)

[표 3-4] 토픽 모델링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위한 정제기준: 분석제외 키워드 예시

분석제외 키워드 예시				
가까스로	남짓	불구하고	에 있다.	하기 위하여
가령	너	불문하고	여기	하든지
각	너희	비교적	여러분	하면서
각각	너희들	비로소	외에도	하물며
각자	네	비슷하다	요컨대	하지 않는다면
각종	넷	비하면	위하여	하지만
말하자면	년	비록	으로	한 후
같다	누구	상대적으로	인하여	해도 좋다
같이	다른	습니다.	으로써	했다
개의치 않고	다시 말하면	시작하여	을	혹은
거니와	다음에	아니라면	이러한	훨씬
다만	단지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이	힙입어
거의	당신	알 수 있다.	일 것이다.	하기 보다는
것	대하여	앞에서	입장에서	네이버
것과 같이	더구나	어느	입각하여	카카오

분석제외 키워드 예시				
것들	더불어	어떻게	제각기	윤석열
게다가	더욱이	언제	제외하고	손흥민
공동으로	뒤이어	얼마	중에서	강남구
겨우	때문에	에 달려 있다	통하여	제주도
견지에서	또한	에 대해	총체적으로	%
결과에 이르다	좀	의거하여	하게 될 것이다.	&

2) 토픽 모델링 결과

(1) 인구구조

□ 빈도분석

○ '인구구조'를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고령화'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 '고용', '청년', '대학', '인구감소', '복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인구구조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인구감소와 지역의 역할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5] 빈도분석 결과: 인구구조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고령화	10,296	26	이민	936
2	저출산	6,273	27	세금	927
3	고용	5,421	28	건강보험	913
4	청년	5,159	29	경제활동	905
5	대학	3,708	30	정년	882
6	인구감소	3,702	31	잠재성장률	878
7	복지	3,093	32	로봇	867
8	의료	2,676	33	베이비붐세대	840
9	인플레이션	1,696	34	중소기업	835
10	외국인	1,455	35	지방소멸	831
11	농업	1,428	36	인구절벽	829
12	AI	1,388	37	실업	816
13	학생	1,384	38	육아	745
14	병원	1,383	39	기초연금	728
15	생산가능인구	1,373	40	노동력	718
16	디지털	1,337	41	근로시간	660
17	정년연장	1,324	42	소득대체	658
18	1인가구	1,322	43	스타트업	655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9	임금	1,308	44	장애	653
20	지속가능개발	1,304	45	관광	644
21	국가채무	1,223	46	아동	633
22	변화대응	1,083	47	육아휴직	629
23	물가	1,055	48	시니어	609
24	은퇴	1,051	49	양극화	602
25	제조업	984	50	취약계층	596

[그림 3-4]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인구구조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인구구조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 1은 '보험', '교육', '추진', '대책', '제도', '계획', '학생', '노인', '개편', '고령화' 키워드로 묶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체제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인구구조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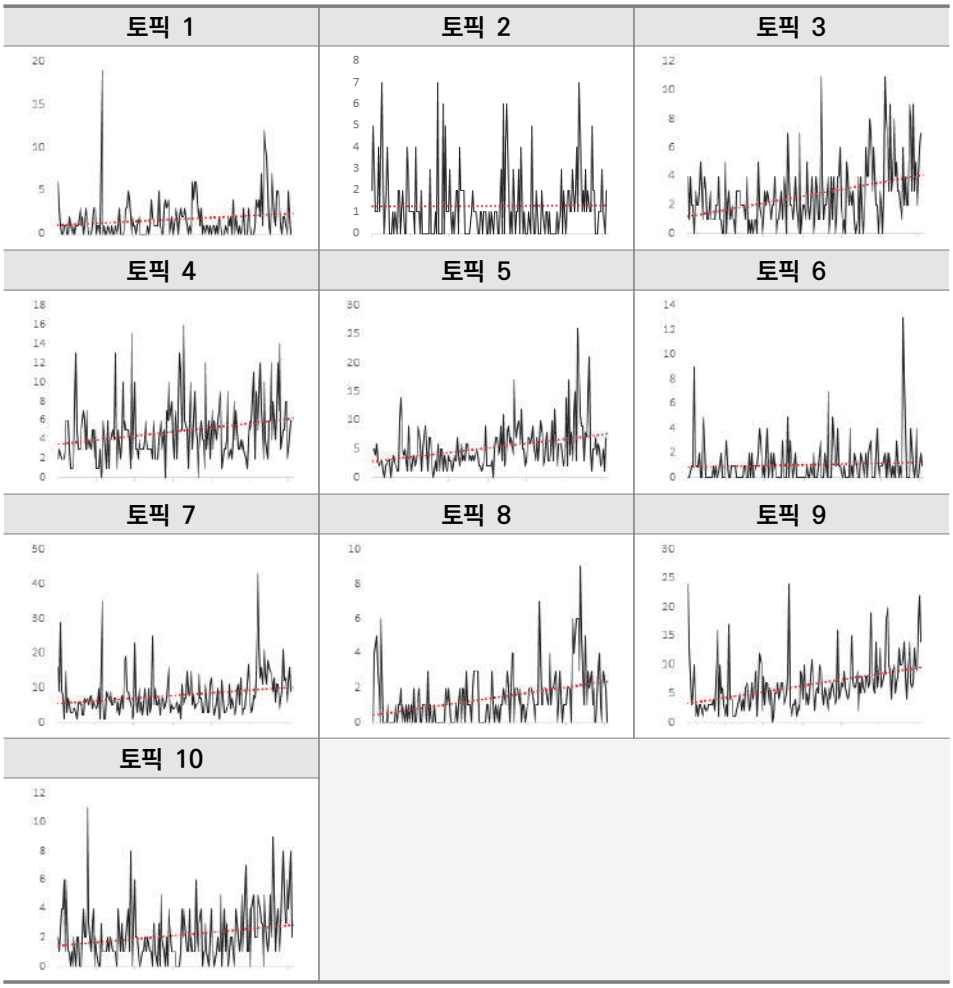
[표 3-6]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인구구조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보험	2	규제	3	의료	4	지역	5	재정
	교육		정책		의사		청년		연금
	추진		기업		정책		도시		연금개혁
	대책		대책		병원		계획		보험료
	제도		지역		인력		정책		적자
	계획		추진		진료		주택		대책
	학생		성장		서비스		인구감소		부담
	노인		개편		건강		지방소멸		인상
	개편		안정		지역		대응		고령화
	고령화		미래		보건		대책		대비
6	결혼	7	정책	8	금리	9	교육	10	서비스
	고령화		고용		인플레이션		대학		배송
	대비		경제		물가		기업		1인 가구
	자연감소		코로나19		노동		추진		소비
	미래		일자리		고용		미래		로봇
	출생		인력		정년연장		혁신		트렌드
	초혼		성장		재정		기술		반려동물
	이동		대책		부담		대응		기술
	코로나19		취업자		노동시장		지역		문화
	노인		인구감소		임금		강화		코로나19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인구구조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3, 토픽 5, 토픽 8, 토픽 9의 노출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5]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인구구조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276		6	0.0052	
2	0.0000		7	0.0511	
3	0.1404	증가	8	0.1263	증가
4	0.061		9	0.1612	증가
5	0.1285	증가	10	0.0437	

(2) 사회갈등

□ 빈도분석

❍ ‘사회갈등’을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갈등’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교육’, ‘여성’, ‘문화’, ‘언론’, ‘노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사회갈등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 심화, 바람직한 사회문화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7] 빈도분석 결과: 사회갈등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갈등	19,321	26	시위	2,006
2	정치	14,878	27	권력	1,998
3	교육	5,059	28	에너지	1,982
4	여성	4,576	29	혐오	1,970
5	문화	3,851	30	최저임금	1,951
6	언론	3,594	31	일자리	1,950
7	노동	3,199	32	가족	1,904
8	환경	3,182	33	양극화	1,903
9	청년	3,033	34	고용	1,886
10	공정	2,973	35	남성	1,735
11	평등	2,913	36	온라인	1,547
12	통합	2,906	37	장애	1,526
13	차별	2,711	38	여론	1,489
14	도시	2,565	39	파업	1,462
15	정당	2,485	40	AI	1,451
16	경찰	2,445	41	의식	1,429
17	세대	2,394	42	간호법	1,382
18	여야	2,349	43	인권	1,364
19	소득	2,340	44	분열	1,349
20	대학	2,310	45	범죄	1,338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21	집회	2,282	46	기후변화	1,305
22	입법	2,251	47	이념	1,304
23	학교	2,086	48	여론조사	1,282
24	소통	2,043	49	공무원	1,263
25	복지	2,012	50	중소기업	1,243

[그림 3-6]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사회갈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사회갈등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 1은 '기업',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개혁', '노사', '인플레이션', '물가' 키워드로 묶여 노사관계 및 경제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사회갈등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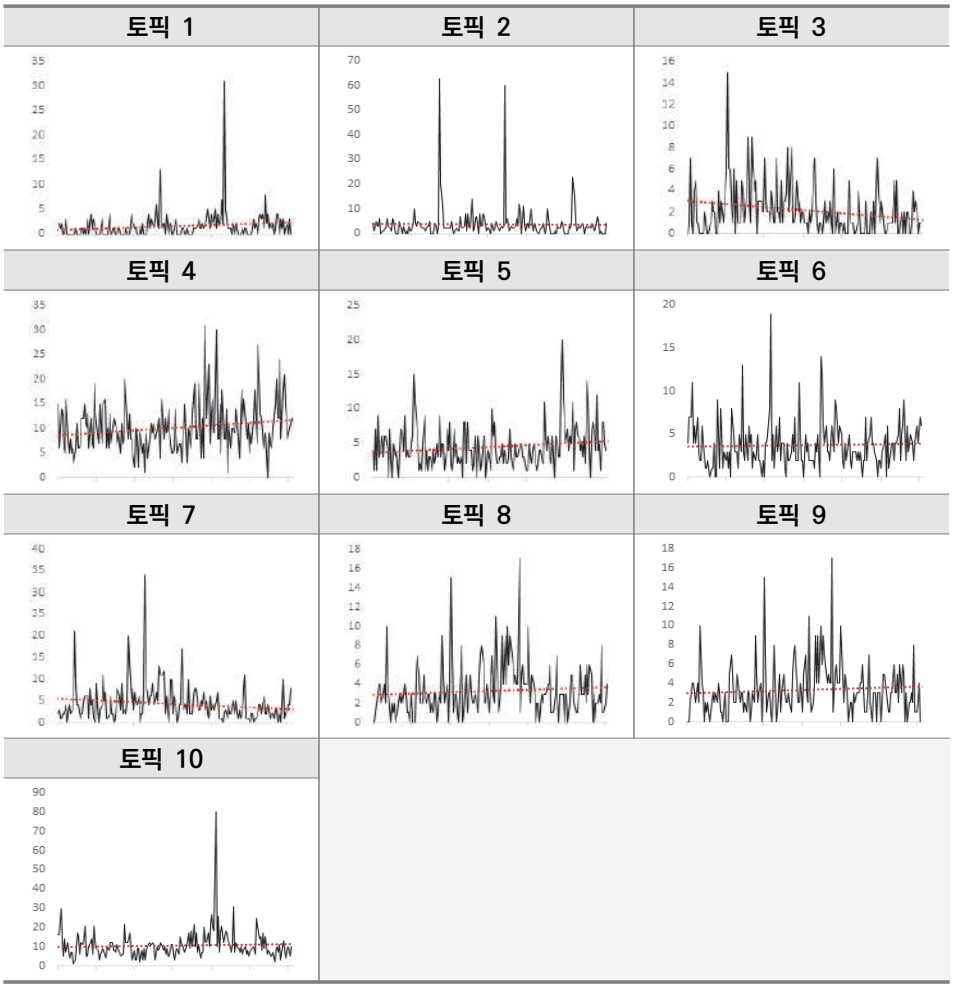
[표 3-8]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사회갈등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기업	2	정치	3	부동산	4	정치	5	지역
	최저임금		선거		주택		책임		문화
	인상		정당		종부세		비판		코로나19
	중소기업		국민통합		법안		민주주의		대책
	근로자		여야		세금		정책		시민
	연금		시민		권익		경제		댓글
	개혁		개혁		토지		선거		운동
	노사		민주주의		아파트		역할		책임
	인플레이션		권력		임차인		시민		참여
	물가		민생		과세		대화		혐오
6	원자력 발전	7	여성	8	코로나19	9	정책	10	노조
	정책		차별		에너지		경제		노동
	반려동물		청년		교육		기업		파업
	세대		지역		재생에너지		성장		택시
	문화		남성		학교		코로나19		노동자
	지역		대책		지역		규제		의료
	가족		평등		전력		미래		집회
	교육		차별 금지법		탄소중립		혁신		의사
	이민		반대		비용		환경		불법
	통일		혐오		기후변화		지역		반대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사회갈등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4의 노출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토픽 3, 토픽 7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7]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사회갈등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307		6	0.0013	
2	0.0003		7	0.0261	감소
3	0.0466	감소	8	0.008	
4	0.0335	증가	9	0.0059	
5	0.0254		10	0.0041	

(3) 사이버 범죄

□ 빈도분석

❍ '사이버 범죄'를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가상자산'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안', '해킹', '피해자', '랜섬웨어', '여성', '청소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사이버 범죄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이버 보안, 안전한 사회 구현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9] 빈도분석 결과: 사이버 범죄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가상자산	5,760	26	단속	952
2	보안	4,815	27	보이스피싱	898
3	해킹	3,855	28	다크웹	897
4	피해자	3,810	29	악용	868
5	랜섬웨어	2,907	30	블록체인	780
6	여성	1,628	31	문자	748
7	청소년	1,599	32	사칭	743
8	해커	1,563	33	몸캠피싱	728
9	예방	1,506	34	메타버스	724
10	사이버공격	1,499	35	안보	719
11	n번방	1,475	36	도박	628
12	텔레그램	1,471	37	은행	623
13	처벌	1,386	38	결제	591
14	디지털성범죄	1,334	39	공조	581
15	교육	1,254	40	스마트폰	580
16	피싱	1,187	41	ChatGPT	545
17	클라우드	1,187	42	동영상	544
18	플랫폼	1,162	43	메시지	534
19	아동	1,133	44	촬영	525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20	협박	1,067	45	커뮤니티	524
21	성착취물	1,050	46	학교	509
22	SNS	1,025	47	채팅	509
23	탈취	1,001	48	비대면	503
24	마약	986	49	사이버위협	498
25	게임	982	50	박사방	470

[그림 3-8]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사이버 범죄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사이버 범죄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1은 '경찰', '범죄', '공공', '치안', '사건', '안전', '인권', '지능', '공격', '대응' 키워드로 묶여 사이버 범죄 대응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사이버 범죄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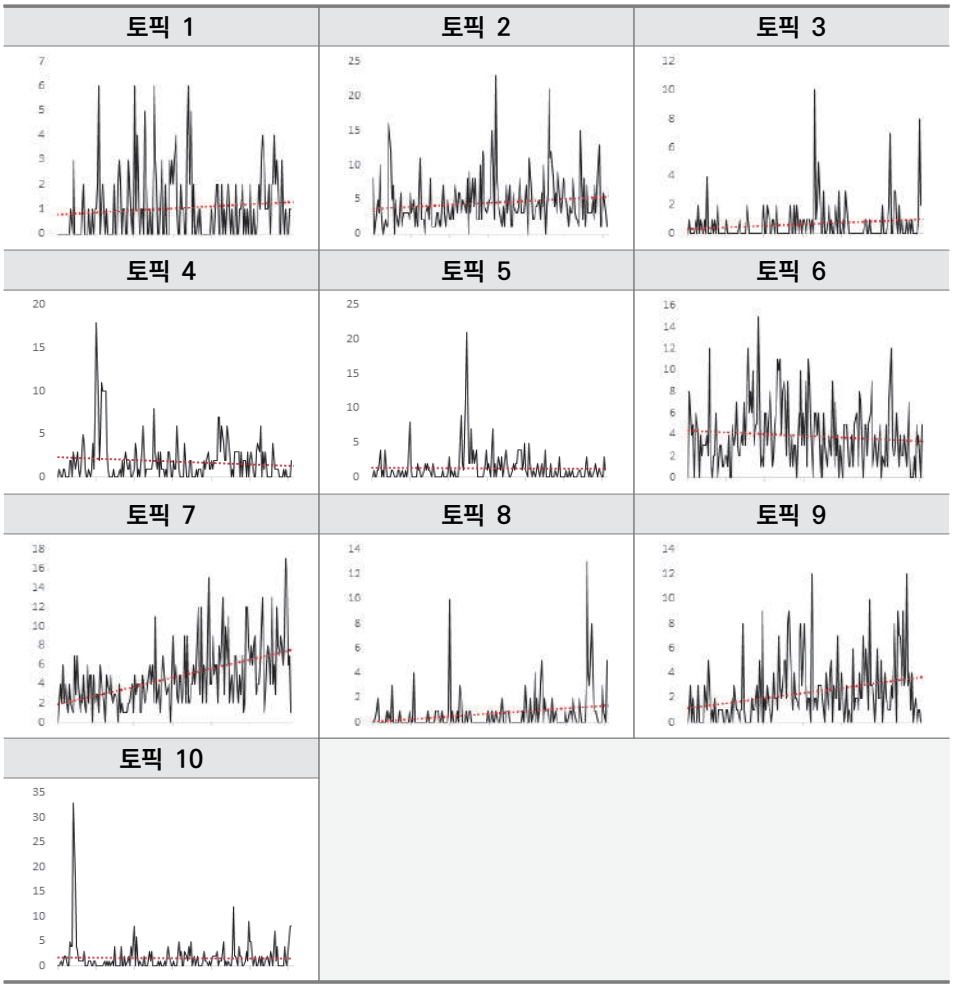
[표 3-10]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사이버 범죄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경찰	2	피해자	3	사이버 테러	4	보이스 피싱	5	해커
	범죄		사기		인력		여성		공격
	공공		안전		강화		처벌		랜섬웨어
	치안		신고		대응		피해자		해킹
	사건		SNS		대책		예방		사이버 보안
	안전		로맨스캠		가상화폐		아동		공급망
	인권		사이트		해킹		대응		사이버 공격
	지능		처벌		역량강화		마약		처벌
	공격		텔레그램		전담		대책		법안
	대응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수사		청소년		시스템
6	랜섬웨어	7	보안	8	불법	9	검거	10	피해자
	보안		기술		콘텐츠		구속		대응
	공격		위험		유통		사기		불법 촬영물
	해킹		안전		저작권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유출		대응		사이트		사건		추적
	개인정보		탈취		차단		불법		방지법
	해커		사이버 공격		미디어		보이스 피싱		검열
	데이터		시스템		삭제		유포		대책
	피해자		교육		유포		단속		성착취물
	대응		보호		침해		영상물		삭제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사이버 범죄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3, 토픽 7, 토픽 8의 노출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토픽 4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9]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사이버 범죄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121		6	0.0093	
2	0.0177		7	0.2527	증가
3	0.0224	증가	8	0.0558	증가
4	0.0124	감소	9	0.0833	
5	0.001		10	0.0002	

(4) 4차 산업혁명

□ 빈도분석

❍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AI'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 '대학', '혁신',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4차 산업혁명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인재양성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11] 빈도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AI	64,057	26	제품	11,392
2	교육	63,908	27	첨단	11,317
3	대학	46,619	28	행정	10,794
4	혁신	40,598	29	온라인	10,793
5	데이터	27,357	30	중소기업	10,582
6	디지털	25,102	31	콘텐츠	10,481
7	플랫폼	20,243	32	스타트업	10,321
8	융합	18,604	33	의료	10,302
9	학교	16,095	34	인프라	10,153
10	일자리	15,615	35	학과	10,095
11	S/W	15,361	36	경쟁	10,047
12	스마트	15,155	37	인재	9,620
13	로봇	14,893	38	농업	9,473
14	청년	14,745	39	공정	9,239
15	창업	14,298	40	학습	9,146
16	인재양성	14,201	41	취업	9,099
17	경쟁력	13,491	42	복지	8,550
18	빅데이터	13,058	43	자동차	8,426
19	시민	12,966	44	메타버스	8,048
20	규제	12,719	45	ICT	8,012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21	안전	12,576	46	에너지	7,950
22	과학기술	12,398	47	체험	7,921
23	역량	11,890	48	클라우드	7,868
24	기본소득	11,679	49	전공	7,820
25	드론	11,550	50	게임	7,541

[그림 3-10]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4차 산업혁명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1은 '교육', '문화', '메타버스', '콘텐츠', '청년', '참여', '기술', '디지털', '미래', 'AI' 키워드로 묶여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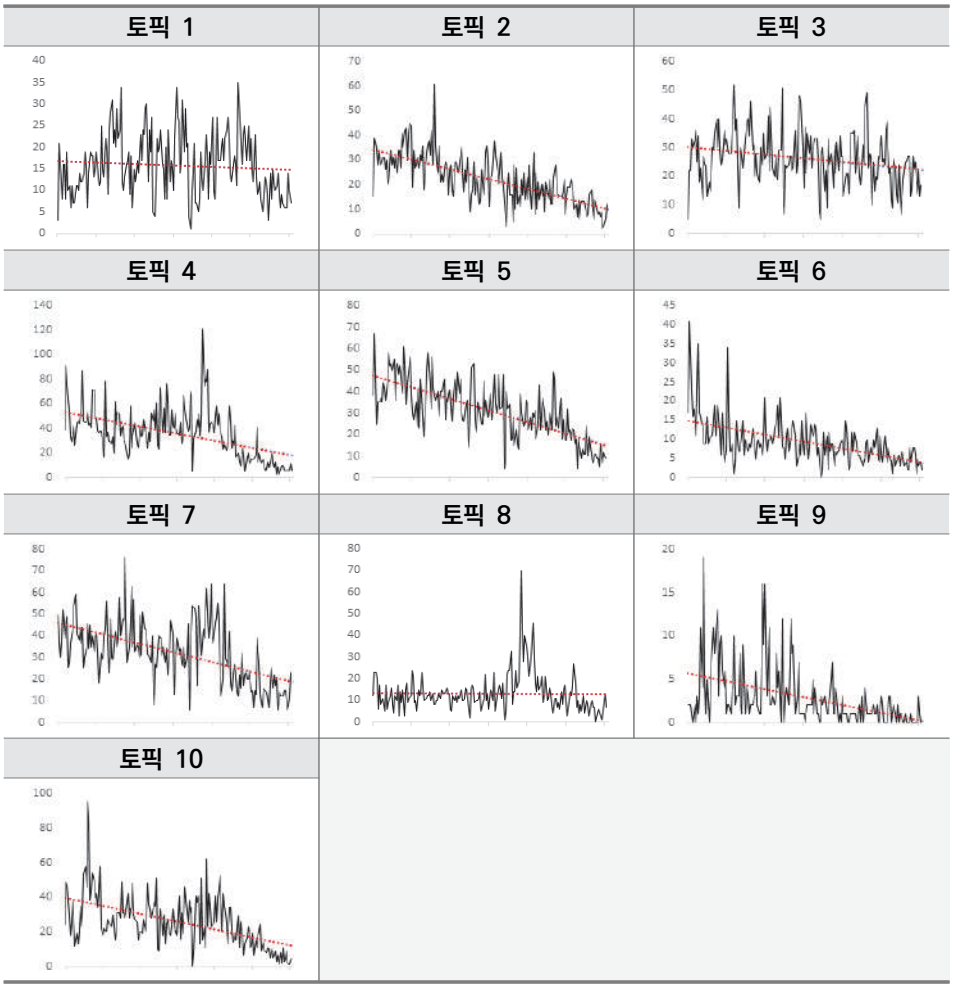
[표 3-12] LDA 토픽 모델링 결과: 4차 산업혁명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교육	2	AI	3	대학	4	정치	5	서비스
	문화		기술		교육		정책		플랫폼
	메타버스		로봇		인재양성		코로나19		시스템
	콘텐츠		빅데이터		융합		미래		디지털
	청년		시스템		기술		개혁		클라우드
	참여		혁신		AI		역할		5G
	기술		스마트 팩토리		지역		공정		블록체인
	디지털		융합		혁신		책임		혁신
	미래		서비스		산학협력		일자리		보안
	AI		미래		미래		규제		미래
6	드론	7	지역	8	교육	9	코로나19	10	경제
	데이터		도시		대학		문화		정책
	스타트업		추진		교육청		재원		규제
	창업		계획		학습		콘텐츠		일자리
	벤처기업		조성		미래		정책		혁신
	특허		시민		과학기술		보편		성장
	혁신		유치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식재산		정책		혁신		효과		글로벌
	기술		미래		원격수업		대비		대응
	개인정보		스마트 시티		미래교육		경제		협력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2, 토픽 5, 토픽 6, 토픽 7의 노출 빈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1]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067		6	0.3004	감소
2	0.4885	감소	7	0.3018	감소
3	0.0593		8	0.0000	
4	0.2563		9	0.2106	
5	0.5052	감소	10	0.2828	

(5) 디지털 경제

□ 빈도분석

❍ '디지털 경제'를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플랫폼'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데이터', 'AI', '혁신', '글로벌', '규제', '협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디지털 경제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규제개선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13] 빈도분석 결과: 디지털 경제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플랫폼	10,739	26	결제	2,071
2	데이터	9,599	27	네트워크	2,005
3	AI	8,781	28	창업	1,993
4	혁신	7,875	29	빅데이터	1,855
5	글로벌	7,328	30	소상공인	1,830
6	규제	7,032	31	4차산업혁명	1,761
7	협력	6,608	32	은행	1,691
8	가상자산	5,147	33	온라인플랫폼	1,673
9	경쟁	4,503	34	청년	1,654
10	스타트업	4,110	35	유통	1,627
11	교육	3,678	36	행정	1,559
12	중소기업	3,318	37	의료	1,542
13	일자리	3,312	38	표준	1,479
14	클라우드	3,004	39	nft	1,457
15	블록체인	2,849	40	디지털뉴딜	1,423
16	디지털전환	2,737	41	에너지	1,360
17	메타버스	2,720	42	여성	1,352
18	경쟁력	2,555	43	모바일	1,314
19	벤처기업	2,536	44	포스트코로나	1,306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20	비대면	2,443	45	자동차	1,296
21	S/W	2,379	46	개인정보	1,276
22	한국판뉴딜	2,361	47	제조업	1,261
23	ICT	2,361	48	데이터센터	1,199
24	5G	2,238	49	인재양성	1,179
25	IPET	2,201	50	건설	1,158

[그림 3-12]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디지털 경제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디지털 경제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1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서비스', '배달', '결제',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쇼핑', '청년', '유통' 키워드로 묶여 디지털 시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디지털 경제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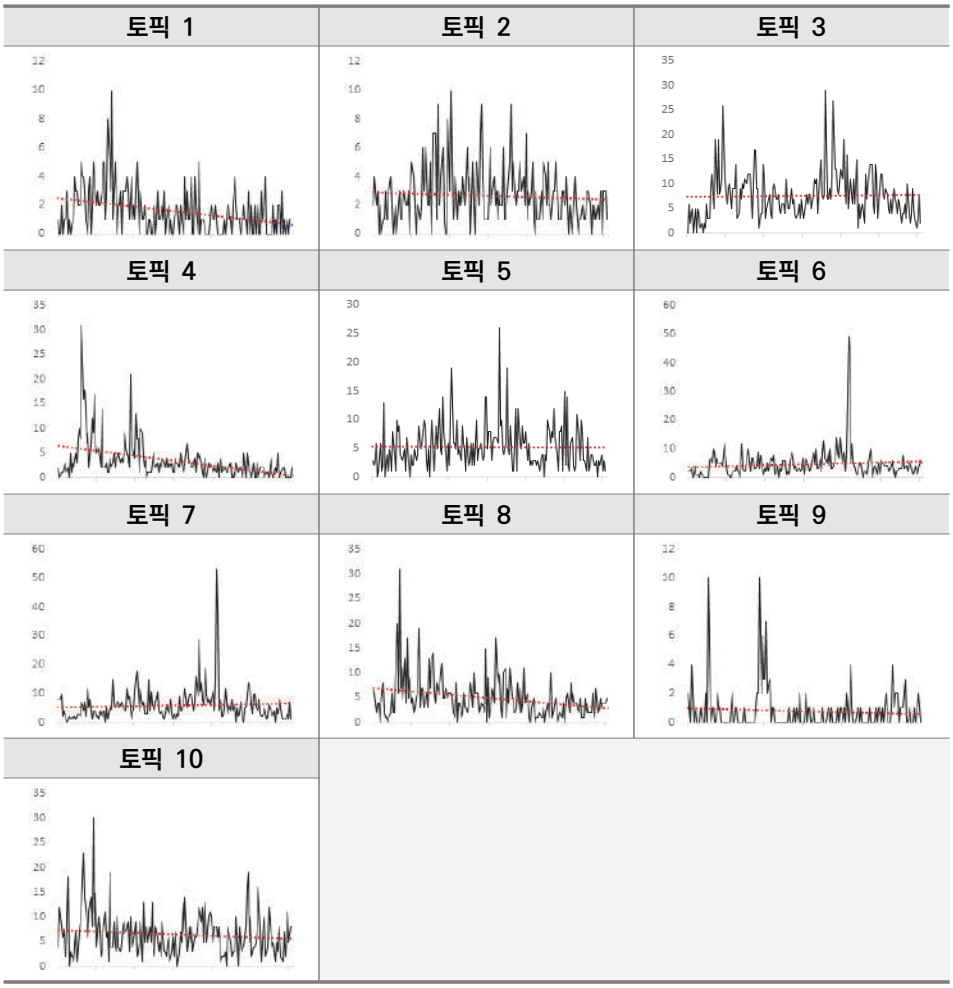
[표 3-14] LDA 토픽 모델링 결과: 디지털 경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소상공인	2	가상화폐	3	데이터	4	코로나19	5	플랫폼
	코로나19		규제		AI		정책		기업
	서비스		비트코인		클라우드		일자리		규제
	배달		인터넷		혁신		고용		공정
	결제		거래		S/W		도시		소비자
	비대면		결제		5G		대비		보호
	라이브 커머스		가치		ICT		미래		성장
	쇼핑		자산		인프라		기업		독점
	청년		시스템		미래		교육		혁신
	유통		블록체인		디지털 전환		전환		법안
6	추진	7	정책	8	협력	9	AI	10	서비스
	정책		협력		강화		기술		플랫폼
	참여		국가		전환		청년		스타트업
	국가		정치		추진		정책		혁신
	공급망		글로벌		대응		미래		규제
	계획		미래		혁신		글로벌		글로벌
	한국판 뉴딜		강화		성장		성장		성장
	지역		성장		대비		협력		벤처기업
	글로벌		참여		계획		교육		정책
	협력		주도		미래		혁신		창업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디지털 경제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1, 토픽 4, 토픽 8의 노출 빈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3]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디지털 경제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1118	감소	6	0.0009	
2	0.0058		7	0.0042	
3	0.0003		8	0.0826	감소
4	0.1918	감소	9	0.0056	
5	0.0003		10	0.0151	

⑹ 양극화

□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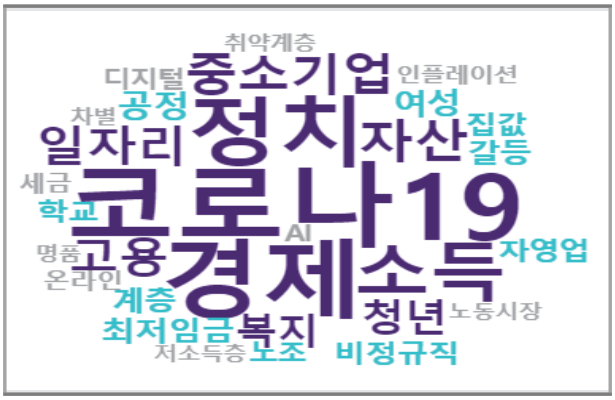
❍ '양극화'를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코로나19'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정치', '소득', '자산', '중소기업', '일자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양극화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문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15] 빈도분석 결과: 양극화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코로나19	11,821	26	노동시장	910
2	경제	10,364	27	저소득층	885
3	정치	8,104	28	명품	882
4	소득	6,073	29	취약계층	880
5	자산	3,481	30	차별	879
6	중소기업	3,170	31	의료	873
7	일자리	2,985	32	건설	857
8	고용	2,935	33	서민	821
9	청년	2,337	34	주거	817
10	복지	2,188	35	재난지원금	816
11	공정	1,745	36	정규직	791
12	여성	1,532	37	규제완화	769
13	최저임금	1,516	38	물가	745
14	계층	1,441	39	빈곤	740
15	갈등	1,425	40	고령화	715
16	비정규직	1,395	41	경쟁력	712
17	학교	1,368	42	다주택	704
18	집값	1,330	43	취업	641
19	자영업	1,305	44	연봉	632
20	노조	1,208	45	가격상승	628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21	디지털	1,118	46	데이터	616
22	AI	1,113	47	콘텐츠	610
23	온라인	1,094	48	경제성장	610
24	세금	1,084	49	학력	588
25	인플레이션	950	50	부채	584

[그림 3-14]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양극화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양극화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1은 '코로나19', '지역', '교육', '학생', '대학', '학교', '학습', '학력', '수업', '심화' 키워드로 묶여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양극화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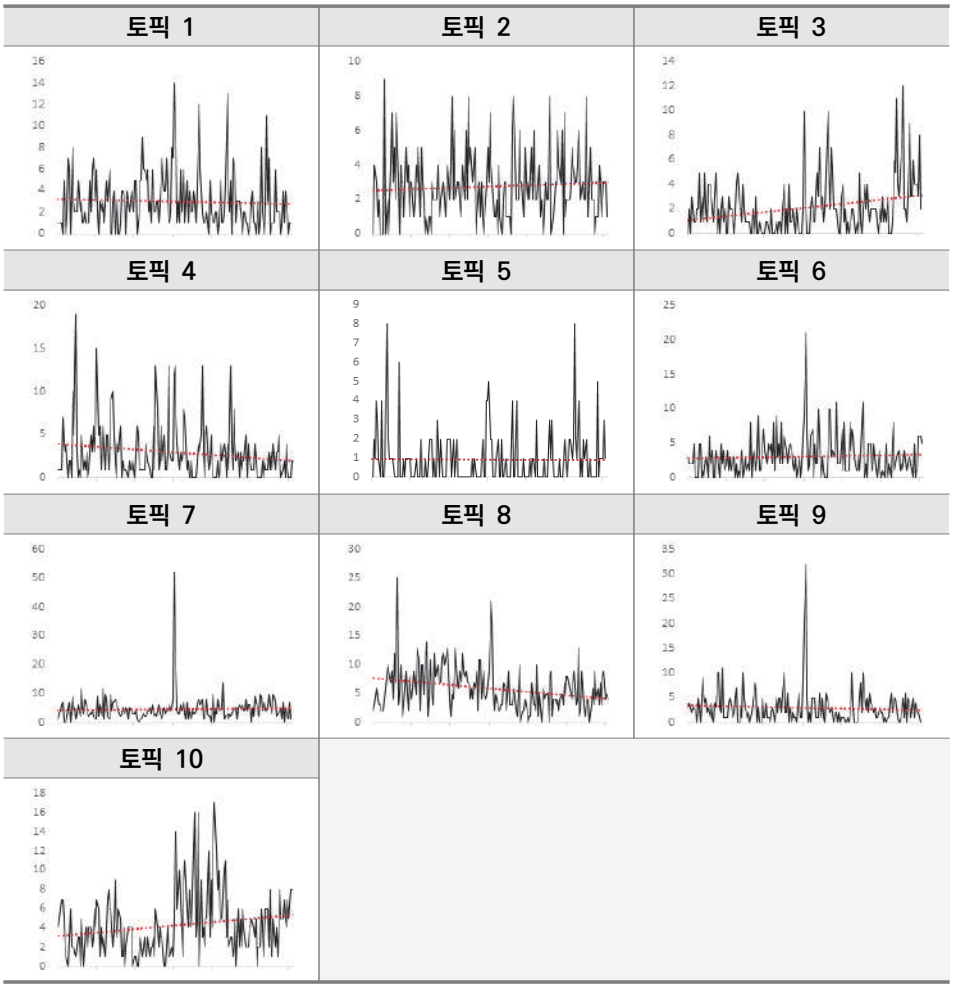
[표 3-16]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양극화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코로나19	2	기업	3	분양	4	경제	5	최저임금
	지역		중소기업		청약		정치		인상
	교육		금리		지역		부동산		상속세
	학생		경제		코로나19		선거		경제
	대학		자금		공급		국가		정치
	학교		코로나19		아파트		코로나19		노인
	학습		대출		미분양		공정		코로나19
	학력		채권		규제		지역		뉴딜
	수업		신용		부동산		공약		기업
	심화		ESG경영		주택		주택		미래
6	경제	7	정치	8	코로나19	9	노동	10	아파트
	정책		소득		소비		노동자		부동산
	코로나19		기본소득		경제		청년		주택
	기업		정책		매출		비정규직		지역
	대책		경제		고용		임금		가격
	지역		민주주의		자산		노조		거래
	고용		코로나19		일자리		평등		대출
	중소기업		갈등		회복		코로나19		수요
	복지		미래		소득		해소		집값
	일자리		분배		성장		노동시장		기록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양극화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3, 토픽 10의 노출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토픽 4, 토픽 8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5]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양극화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022		6	0.0024	
2	0.0045		7	0.0026	
3	0.0699	증가	8	0.0705	감소
4	0.311	감소	9	0.0061	
5	0.0000		10	0.0372	증가

(7) 기후변화

□ 빈도분석

❍ '기후변화'를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협력'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에너지', '탄소중립', '도시', 'ESG', '원자력발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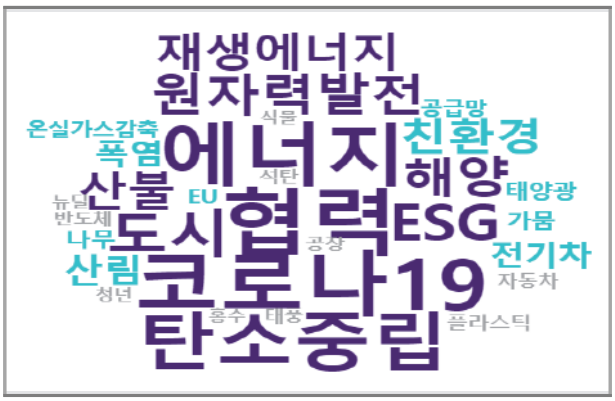
- 즉, 기후변화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자원과 탄소중립 실천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17] 빈도분석 결과: 기후변화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협력	50,951	26	태풍	9,649
2	코로나19	47,408	27	식물	9,519
3	에너지	45,904	28	홍수	9,501
4	탄소중립	41,887	29	청년	9,464
5	도시	30,894	30	뉴딜	9,364
6	ESG	30,391	31	학교	9,185
7	원자력발전	26,627	32	이산화탄소	9,089
8	해양	25,903	33	인플레이션	8,972
9	산불	23,268	34	배터리	8,957
10	재생에너지	23,137	35	규제	8,594
11	친환경	22,275	36	데이터	8,502
12	산림	18,347	37	식량	8,338
13	폭염	15,855	38	동물	8,186
14	전기차	15,456	39	미세먼지	8,184
15	나무	11,906	40	화석연료	8,118
16	가뭄	11,551	41	지구온난화	7,514
17	EU	11,510	42	일자리	7,456
18	태양광	11,229	43	캠페인	7,289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9	온실가스감축	10,631	44	원자력	7,275
20	공급망	10,580	45	폭우	6,990
21	플라스틱	10,302	46	바이오	6,914
22	자동차	10,000	47	AI	6,826
23	공장	9,810	48	풍력	6,516
24	반도체	9,681	49	쓰레기	6,481
25	석탄	9,667	50	탄소배출량	6,247

[그림 3-16]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기후변화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기후변화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1은 '코로나19', '정치', '경제', '정책', '현실', '국가', '대비', '성장', '미래', '대응' 키워드로 묶여 미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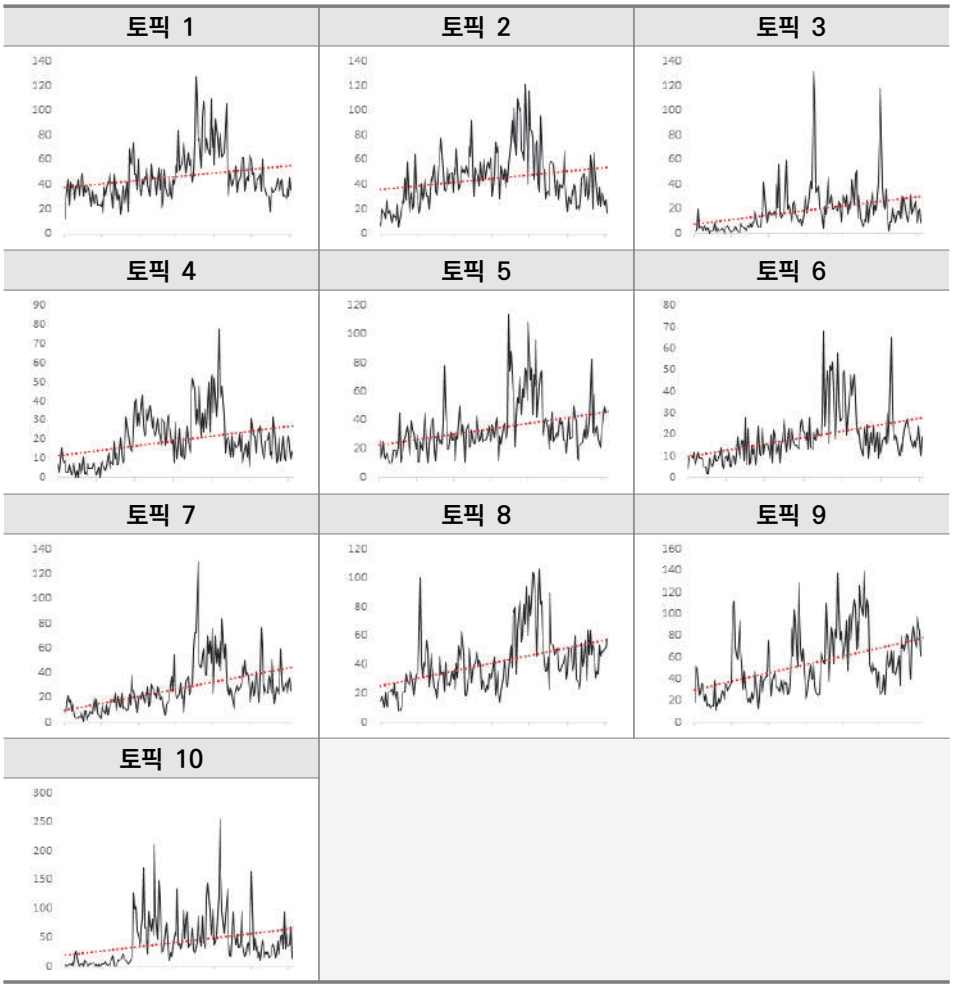
[표 3-18]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기후변화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코로나19	2	탄소중립	3	대응	4	ESG	5	도시
	정치		에너지		경제		실천		시민
	경제		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협약		참여		교육
	정책		감축		글로벌		가치		문화
	현실		계획		기금		학교		지역
	국가		전환		정책		교육		공원
	대비		대응		책임		성과		미래
	성장		환경		참여		미래		환경
	미래		온실가스		노력		환경교육		공간
	대응		전력		협력		책임		생활
6	제품	7	기술	8	산림	9	산불	10	협력
	기술		협력		지역		폭염		정상회의
	친환경		기업		해양		기온		경제
	데이터		연구		환경		기상		평화
	소비자		혁신		추진		가뭄		국가
	플랫폼		추진		계획		예측		안보
	소비		미래		대응		태풍		대화
	시스템		과학기술		조성		지구 온난화		코로나19
	캠페인		경제		안전		홍수		대응
	적용		글로벌		대책		날씨		강화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기후변화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6, 토픽 7, 토픽 8의 노출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7]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기후변화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699		6	0.1948	증가
2	0.0539		7	0.2907	증가
3	0.1204		8	0.2097	증가
4	0.1124		9	0.228	
5	0.128		10	0.0946	

⑻ 지속가능개발

□ 빈도분석

❍ '지속가능개발'을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ESG경영'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협력', '글로벌', '코로나19',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지속가능개발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ESG 경영의 실천, 사회 전반의 참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19] 빈도분석 결과: 지속가능개발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ESG경영	2,071	26	소비자	186
2	협력	1,596	27	사회공헌	180
3	글로벌	1,583	28	소재	165
4	코로나19	1,323	29	학교	165
5	기후변화	1,156	30	창업	162
6	교육	960	31	역량강화	159
7	에너지	592	32	온실가스	156
8	혁신	586	33	ICT	147
9	탄소중립	441	34	임팩트	147
10	개발협력	440	35	관광	142
11	청년	417	36	장애	140
12	산림	389	37	아동	139
13	디지털	361	38	녹색성장	137
14	플라스틱	306	39	마을	135
15	탄소	295	40	협동조합	131
16	파트너십	282	41	새마을운동	131
17	캠페인	278	42	식량안보	130
18	청소년	268	43	성평등	130
19	스타트업	236	44	이니셔티브	126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20	데이터	234	45	사회경제	121
21	재생에너지	231	46	바이오	119
22	빈곤	230	47	공급망	118
23	평등	219	48	중소기업	117
24	수소	194	49	취약계층	116
25	포용	187	50	벤처기업	115

[그림 3-18]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지속가능개발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1은 '기업', '코로나19', '환경', '기술', '교육', '기후변화', 'ESG경영', '에너지', '협력', '전세계' 키워드로 묶여 ESG와 관련된 대응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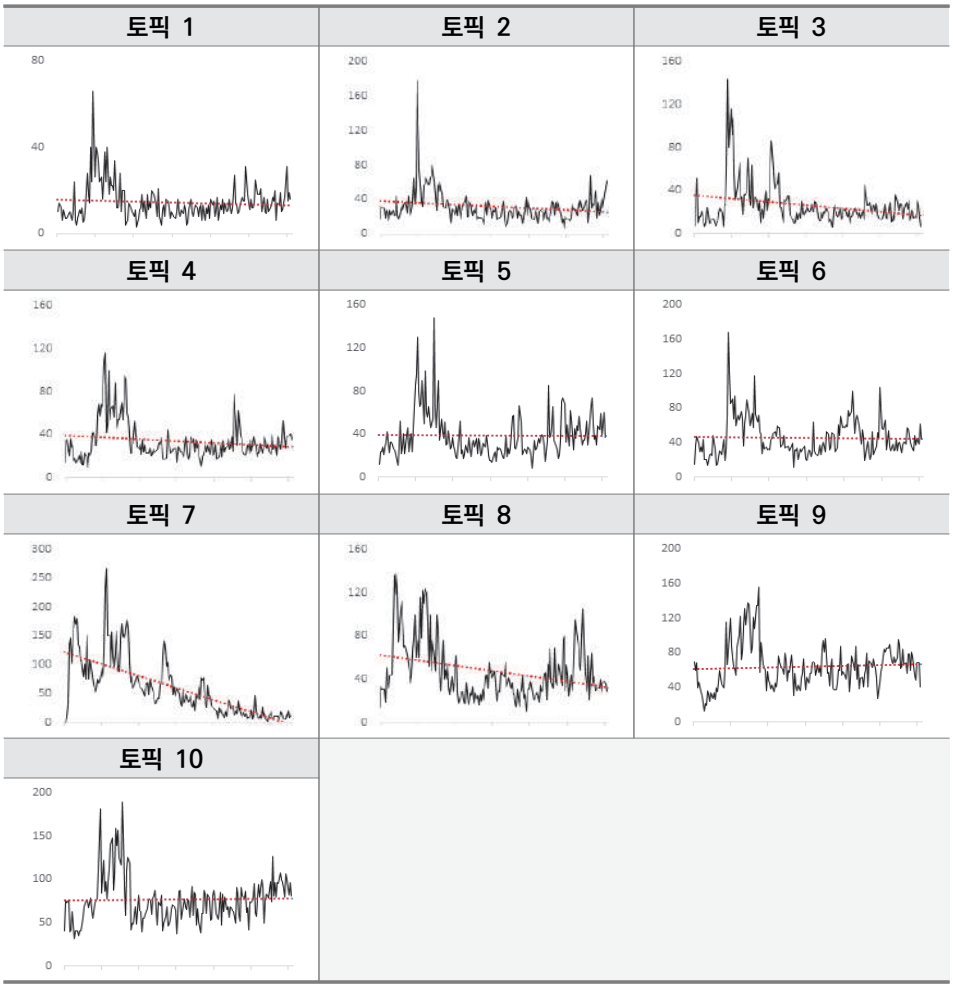
[표 3-20]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지속가능개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기업	2	기업	3	ESG경영	4	코로나19	5	글로벌
	코로나19		정책		협력		대응		코로나19
	환경		글로벌		기업		계획		기후변화
	기술		협력		코로나19		국가		협력
	교육		경제		기후변화		교육		대응
	기후변화		국가		친환경		활동		혁신
	ESG경영		기술		대응		정책		국가
	에너지		지역		추진		캠페인		기술
	협력		계획		노력		지역		참여
	전세계		미래		참여		참여		정책
6	ESG경영	7	기업	8	청년	9	지역	10	협력
	기업		대학		교육		글로벌		미래
	글로벌		경제		문화		협력		대응
	환경		국가		시민		코로나19		지역
	기후변화		코로나19		협력		참여		추진
	협력		정책		참여		도시		활동
	국가		협력		지역		여성		합의
	교육		지역		청소년		청소년		이행
	지역		기술		추진		문화		교류
	경제		교육		활동		노력		시민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2, 토픽 10의 노출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토픽 4, 토픽 8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9]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지속가능개발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02		6	0.0033	
2	0.0073	증가	7	0.0000	
3	0.0042		8	0.0084	감소
4	0.0094	감소	9	0.0003	
5	0.0064		10	0.0082	증가

⑼ 정치참여

□ 빈도분석

❍ ‘정치참여’를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여성’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선거’, ‘청년’, ‘정당’,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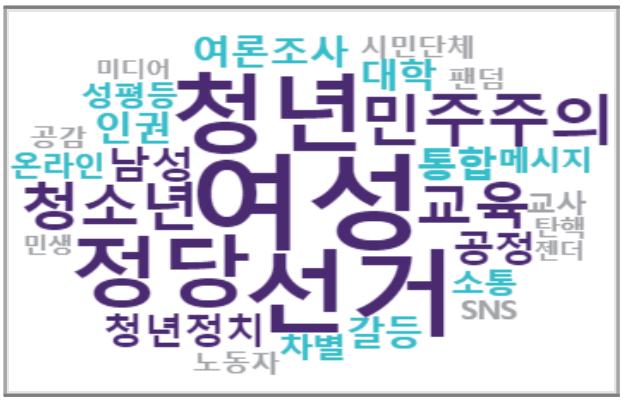
- 즉, 정치참여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성과 청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선거와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 민주시민 교육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21] 빈도분석 결과: 정치참여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여성	9,998	26	팬덤	604
2	선거	8,083	27	탄핵	496
3	청년	7,026	28	미디어	475
4	정당	5,838	29	젠더	469
5	민주주의	2,908	30	민생	461
6	청소년	2,585	31	간담회	455
7	교육	2,428	32	청원	454
8	남성	1,425	33	정치개혁	446
9	공정	1,263	34	문제해결	440
10	청년정치	1,213	35	일자리	432
11	통합	1,159	36	기후변화	418
12	인권	1,121	37	사전투표	416
13	여론조사	1,120	38	촛불	410
14	갈등	1,064	39	참정권	383
15	대학	1,051	40	페미니즘	381
16	소통	806	41	인터넷	378
17	차별	803	42	리더십	374
18	성평등	763	43	TV	367
19	온라인	742	44	디지털	365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20	메시지	727	45	청년정책	357
21	교사	678	46	대학생	355
22	SNS	639	47	영향력	349
23	노동자	626	48	독재	346
24	시민단체	617	49	팬덤정치	345
25	공감	610	50	검찰개혁	333

[그림 3-20]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정치참여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정치참여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1은 '정치', '시민', '청원', '참여', '민주주의', '선거', '제도', '권력', '정책', '정당' 키워드로 묶여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정치참여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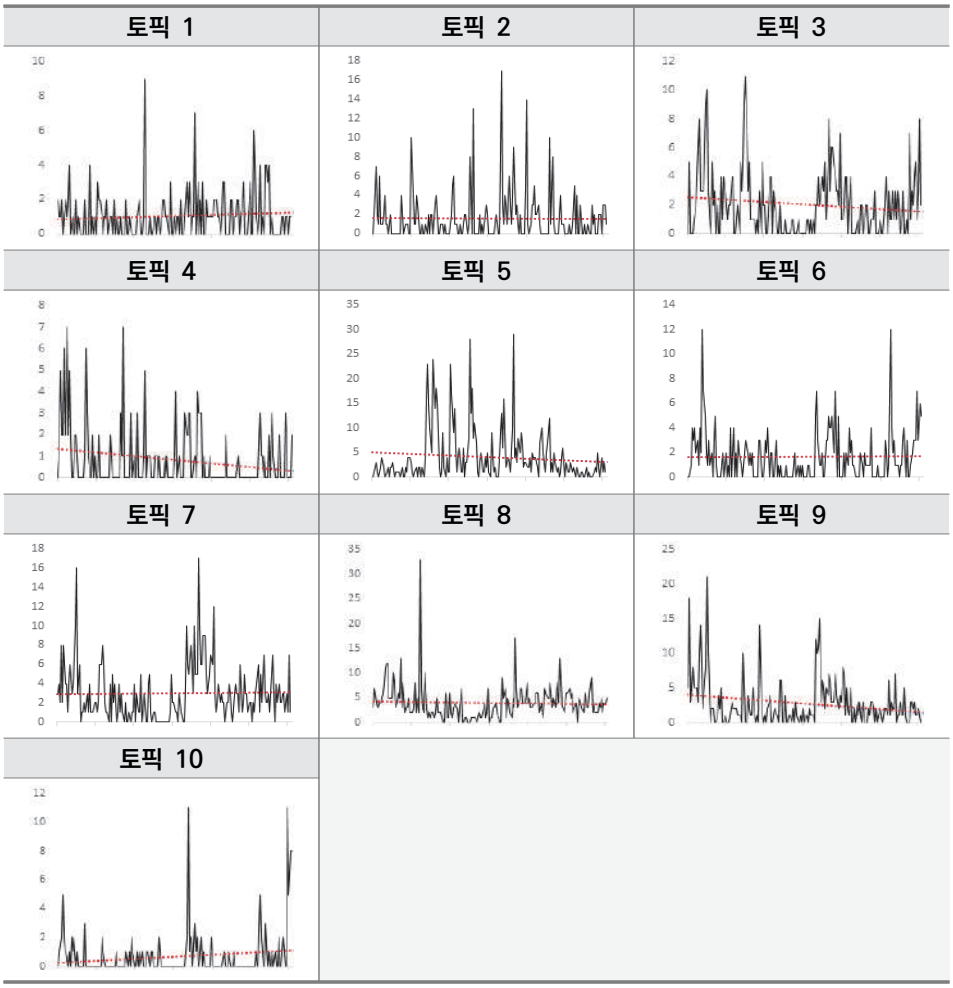
[표 3-22]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정치참여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정치	2	사건	3	여성	4	정치	5	정책
	시민		여성		투표		참여		비판
	청원		청년		남성		선거		선거
	참여		공정		선거		비판		역할
	민주주의		권력		지역		정책		경제
	선거		역할		정책		청년		보수
	제도		인권		진보		개혁		정치중립
	권력		가치		보수		활동		부동산
	정책		시민		가산점		투표		지역
	정당		투표		20대		시민		책임
6	선거	7	청년	8	여성	9	청소년	10	선거
	활동		선거		정책		교육		민주주의
	정책		지역		시민		청년		정신
	혁신		청년정치		청년		민주주의		권력
	개혁		투표		지역		지역		시민
	시민		민주주의		활동		학생		역할
	청소년		유권자		민주주의		연령		민주운동
	교육		시민		교육		활동		지역
	통합		활동		20대		시민		문화
	투표		지방선거		역할		학교		소통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정치참여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10의 노출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토픽 4, 토픽 9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21]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정치참여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073		6	0.0002	
2	0.0000		7	0.0003	
3	0.018		8	0.0031	
4	0.0447	감소	9	0.0467	감소
5	0.0113		10	0.0244	증가

(10) 지방자치

□ 빈도분석

❍ ‘지방자치’를 키워드로 하는 빈도분석 결과, ‘교육’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안전’, ‘예산’, ‘참여’, ‘주택’, ‘문화’, ‘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지방자치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교육자치, 시민들의 안전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책 참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23] 빈도분석 결과: 지방자치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1	교육	38,004	26	소득	10,430
2	안전	33,002	27	식품	10,307
3	예산	32,356	28	보건	10,290
4	참여	30,996	29	지원금	10,149
5	주택	29,450	30	청소년	9,951
6	문화	26,256	31	외국인	8,668
7	학교	23,357	32	AI	8,188
8	공무원	22,338	33	보조금	8,069
9	대학	22,112	34	축제	8,017
10	병원	21,165	35	지역사회	7,849
11	청년	20,393	36	노인	7,623
12	의료	18,872	37	중소기업	7,603
13	복지	17,767	38	수소	7,550
14	조례	17,182	39	질병	7,550
15	관광	15,745	40	폐기물	7,399
16	여성	15,668	41	소상공인	7,348
17	장애	15,197	42	지역경제	7,306
18	공공기관	13,743	43	전기차	7,178
19	일자리	12,534	44	재난안전	7,014
20	온라인	12,118	45	데이터	6,854

순위	키워드	빈도(TF)	순위	키워드	빈도(TF)
21	농업	12,091	46	자치경찰	6,687
22	도로	11,512	47	자치분권	6,559
23	아동	10,848	48	공장	6,449
24	고용	10,751	49	에너지	6,391
25	마을	10,509	50	자동차	6,378

[그림 3-22]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지방자치



□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지방자치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총 10개의 토픽 그룹을 설정하여 각 주제들의 묶음 키워드들을 도출하였음

- 예를 들어, 토픽1은 '여성', '피해자', '사건', '가족', '스토킹', '보호', '범죄', '인권', '차별', '예방' 키워드로 묶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인구구조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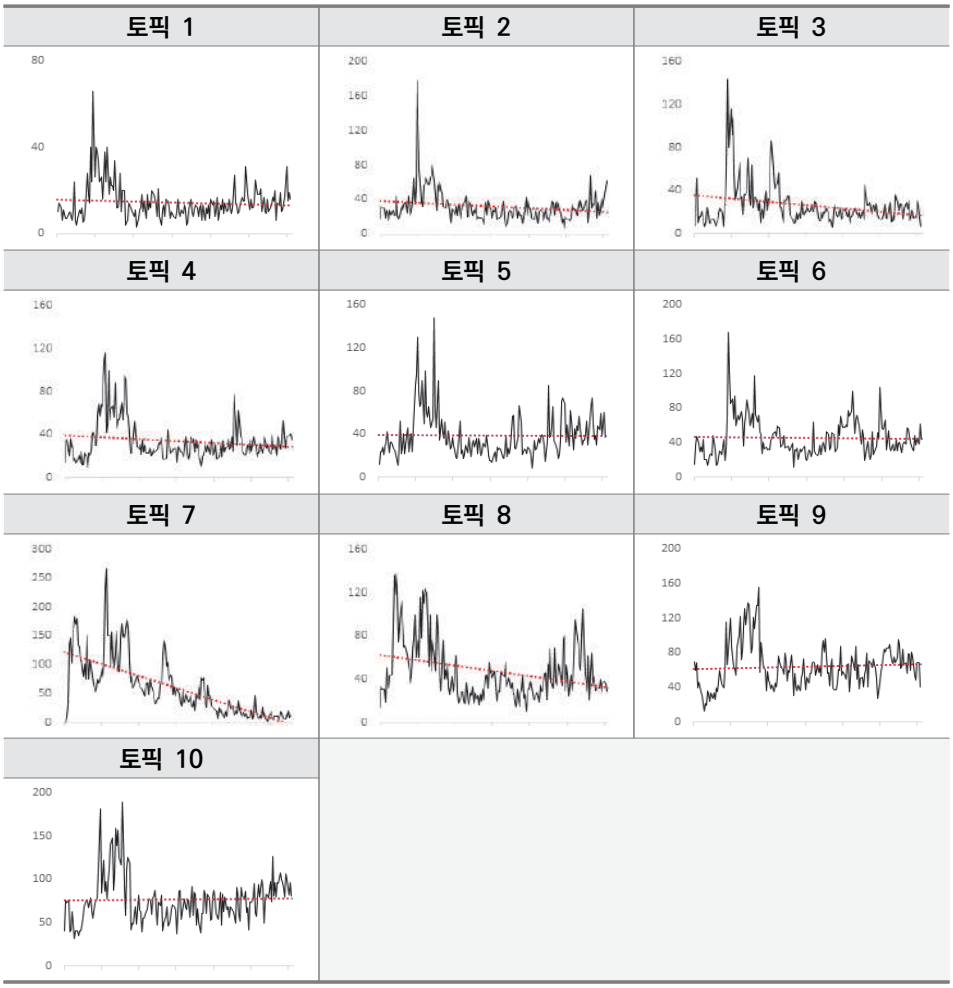
[표 3-24]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지방자치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토픽	키워드
1	여성	2	출생	3	대책	4	이행	5	대학
	피해자		아동		주택		탄소중립		교육
	사건		출산		아파트		강화		학교
	가족		보호		계획		조치		대응
	스토킹		제도		규제		계획		교육부
	보호		서비스		부동산		개선		지역
	범죄		동물		정비		ESG경영		교육청
	인권		복지		재건축		대책		자치단체
	차별		부부		공공		공공기관		계획
	예방		가족		민간		기후변화		체계
6	조례	7	코로나19	8	예산	9	정책	10	지역
	행정		의료		재정		문화		기업
	정치		병원		고향사랑 기부제		청년		추진
	공무원		방역		정책		시민		계획
	개정		의료기관		답례품		행정		조성
	선거		대책		기금		참여		서비스
	책임		진료		대책		활동		기술
	규정		조치		제도		협력		유치
	권한		감염병		보조금		노력		혁신
	시민		체계		지원금		역할		협력

□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 지방자치에 관한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 결과, 향후 뉴스기사에서 토픽 9의 노출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토픽 3, 토픽 7, 토픽 8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23] 토픽별 선형 추세 분석결과: 지방자치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토픽	결정계수(R^2)	증가/감소
1	0.0094		6	0.0015	
2	0.0417		7	0.5251	감소
3	0.0742	감소	8	0.103	감소
4	0.0318		9	0.0028	증가
5	0.0001		10	0.0005	

제3절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1. 분석 개요

□ 분석개요

❍ 미래 지방행정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였음

❍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

-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별 구성 키워드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기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여 KCI에 등록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술논문의 국문초록과 키워드를 검토하여 미래사회 주요 이슈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활용하였음
-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를 위해 수집·활용한 자료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발간된 학술논문이며, 자료량은 총 25,622건임
- 4차 산업혁명이 5,0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갈등 4,285건, 지방자치 3,854건, 기후변화 3,0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25] 수집 키워드와 자료량: 학술논문

수집 키워드	자료량
인구구조	1,306
사회갈등	4,285
사이버 범죄	365
4차 산업혁명	5,031
디지털 경제	1,285
양극화	1,145
기후변화	3,099

수집 키워드	자료량
지속가능개발	2,844
정치참여	2,408
지방자치	3,854
합계	**25,622**

❍ LDA 토픽 모델링

- 10개의 미래사회 핵심 동인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여 토픽별 키워드와 선행연구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각 토픽별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인구구조’, ‘사회갈등’, ‘사이버 범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양극화’,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정치참여’, ‘지방자치’ 키워드별로 각각 10개의 토픽에 대한 토픽명을 개념화 하였음
- 토픽 모델링에서의 토픽명은 해당 키워드들을 고려하여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설정하였으며, 중복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을 구체화하였음

2.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1) 인구구조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인구구조'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저출산·고령화 종합 대응체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혁신', '지역 보건·의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고령화 대비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구조 변화 대응', '인구감소 맞춤형 일자리', '국민경제 활력',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서비스'로 정의되었음

[표 3-26]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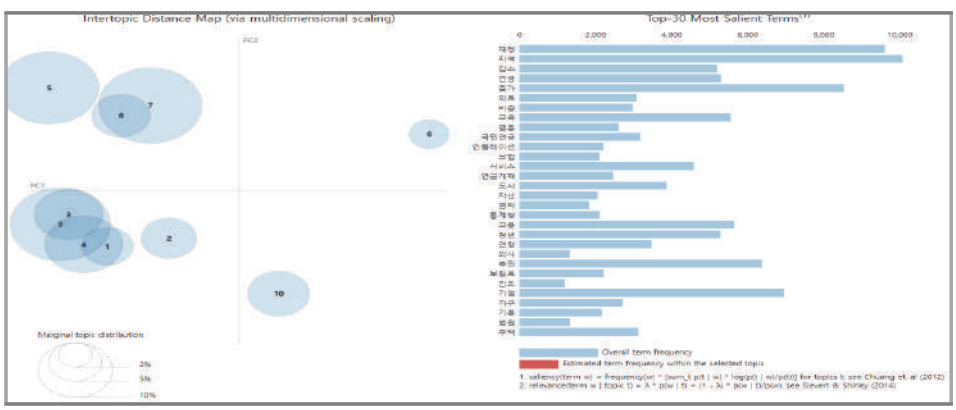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저출산·고령화 종합 대응체제	보험, 교육, 추진, 대책, 제도, 계획, 학생, 노인, 개편, 고령화	기정훈(2020), 김정화(2021), 이호근(2021) 등
(토픽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혁신	규제, 정책, 기업, 대책, 지역, 추진, 성장, 개편, 안정, 미래	고윤성(2020), 이척희 외(2021), 황이경 외(2023) 등
(토픽 3) 지역 기반 보건·의료	의료, 의사, 정책, 병원, 인력, 진료, 서비스, 건강, 지역, 보건	박연성 외(2022), 한정원(2022), 주시연 외(2023) 등
(토픽 4)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지역, 청년, 도시, 계획, 정책, 주택,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 대책	문병효(2021), 이원도 외(2023), 이대웅(2023) 등
(토픽 5) 고령화 대비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 연금, 연금개혁, 보험료, 적자, 대책, 부담, 인상, 고령화, 대비	김상호(2021), 오건호(2021), 노한장(2023) 등
(토픽 6) 사회구조 변화 대응	결혼, 고령화, 대비, 자연감소, 미래, 출생, 초혼, 이동, 코로나19, 노인	이호근(2021), 박종훈(2022), 이원도 외(2023) 등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7) 인구감소 맞춤형 일자리	정책, 고용, 경제, 코로나19, 일자리, 인력, 성장, 대책, 취업자, 인구감소	김종윤 외(2020), 박준우 외(2021), 이원도 외(2023) 등
(토픽 8) 국민경제 활력	금리, 인플레이션, 물가, 노동, 고용, 정년연장, 재정, 부담, 노동시장, 임금	장현우 외(2020), 허준영(2021), 임석회 외(2022) 등
(토픽 9) 지역인재 및 지역발전 생태계	교육, 대학, 기업, 추진, 미래, 혁신, 기술, 대응, 지역, 강화	장세영(2020), 이길재 외(2021), 신하영 외(2022) 등
(토픽 10)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서비스	서비스, 배송, 1인가구, 소비, 로봇, 트렌드, 반려동물, 기술, 문화, 코로나19	이진홍 외(2020), 어광수 외(2020), 권용식(2021)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인구구조'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저출산·고령화 종합 대응체제(토픽 1)', '지역 보건·의료(토픽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토픽 4)',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토픽 9)'
- '고령화 대비 재정의 지속가능성(토픽 5)', '인구감소 맞춤형 일자리(토픽 7)', '국민경제 활력(토픽 8)'

[그림 3-24]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인구구조



2) 사회갈등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사회갈등'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상생의 경제개혁', '통합과 협치', '국민 주거안정', '정치적 책임성 및 신뢰', '지역주민(시민) 참여 정치문화', '사회적 합의 기제', '공정한 양성평등', '미래 예상갈등 선제적 대응',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공정한 노사관계'로 정의되었음

[표 3-27]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사회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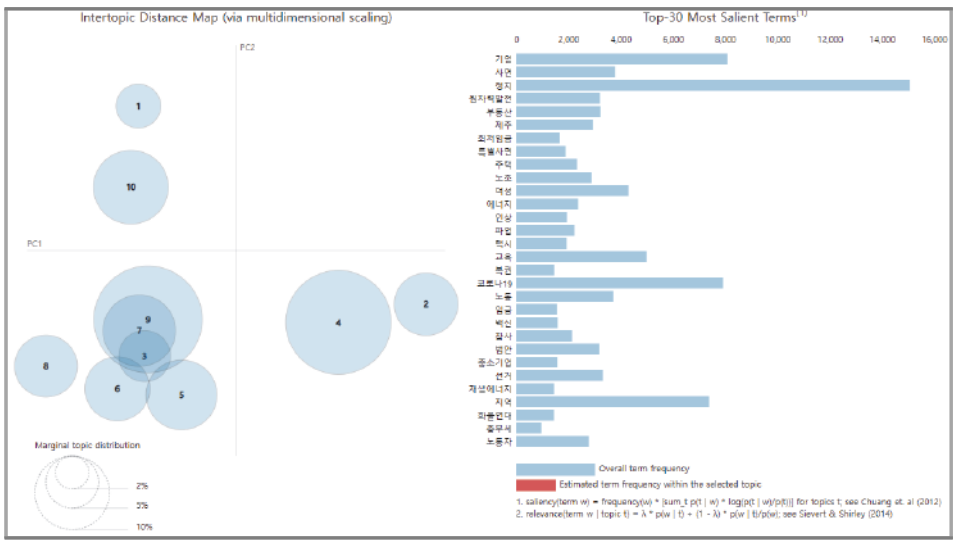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상생의 경제개혁	기업,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연금, 개혁, 노사, 인플레이션, 물가	임무송(2021), 오석영 외(2021), 송해순(2022) 등
(토픽 2) 통합과 협치	정치, 선거, 정당, 국민통합, 여야, 시민, 개혁, 민주주의, 권력, 민생	이승모 외(2020), 박미옥(2022), 윤건(2023) 등
(토픽 3) 국민 주거안정	부동산, 주택, 종부세, 법안, 세금, 권익, 토지, 아파트, 임차인, 과세	민유기(2021), 조가은 외(2022), 전현숙 외(2022) 등
(토픽 4) 정치적 책임성 및 신뢰	정치, 책임, 비판, 민주주의, 정책, 경제, 선거, 역할, 시민, 대화	심승환(2020), 고대유(2022), 이승모(2022) 등
(토픽 5) 지역주민(시민) 참여 정치문화	지역, 문화, 코로나19, 대책, 시민, 댓글, 운동, 책임, 참여, 혐오	문인철(2021), 최순종(2022), 김진영(2022) 등
(토픽 6) 사회적 합의 기제	원자력발전, 정책, 반려동물, 세대, 문화, 지역, 가족, 교육, 이민, 통일	임채광(2020), 송명섭(2022), 이재현(2023) 등
(토픽 7) 공정한 양성평등	여성, 차별, 청년, 지역, 남성, 대책, 평등, 차별금지법, 반대, 혐오	홍지아(2022), 노기우(2022), 구본상(2023) 등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8) 미래 예상갈등 선제적 대응	코로나19, 에너지, 교육, 재생에너지, 학교, 지역, 전력, 탄소중립, 비용, 기후변화	변종헌(2021), 김윤정(2022), 장창석 외(2023) 등
(토픽 9)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정책, 경제, 기업, 성장, 코로나19, 규제, 미래, 혁신, 환경, 지역	오민지(2022), 황성수 외(2022), 이민윤 외(2023) 등
(토픽 10) 공정한 노사관계	노조, 노동, 파업, 택시, 노동자, 의료, 집회, 의사, 불법, 반대	최재성(2020), 정고은(2023), 조규준 외(2023)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사회갈등'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국민 주거안정(토픽 3)', '지역주민(시민) 참여 정치문화(토픽 5)', '사회적 합의 기제(토픽 6)', '공정한 양성평등(토픽 7)', '지속가능한 시장경제(토픽 9)'

[그림 3-25]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사회갈등



3) 사이버 범죄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사이버 범죄'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사이버 범죄 보호시스템', '사이버 범죄 대응력', '사이버보안 역량', '피해자 예방 및 안심 생활환경', '사이버위협 대응 및 예방체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디지털사회', '사이버 범죄 근절', '사이버 범죄 피해자 보호'로 정의되었음

[표 3-28]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사이버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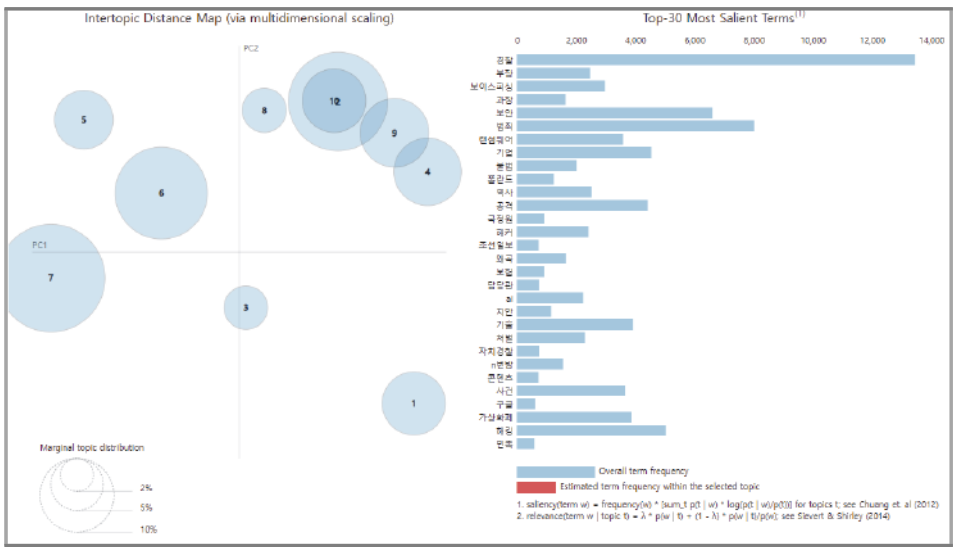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사이버 범죄 보호시스템	경찰, 범죄, 공공, 치안, 사건, 안전, 인권, 지능, 공격, 대응	권지혜(2020), 임명임 외(2020), 선종수(2023) 등
(토픽 2) 사이버 범죄 대응력	피해자, 사기, 안전, 신고, SNS, 로맨스캠, 사이트, 처벌,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강희영(2020), 함영욱 외(2020), 정도희(2023) 등
(토픽 3) 사이버보안 역량	사이버테러, 인력, 강화, 대응, 대책, 가상화폐, 해킹, 역량강화, 전담, 사이버수사	조기영(2020), 김동준 외(2020), 김진혁(2021) 등
(토픽 4) 피해자 예방 및 안심 생활환경	보이스피싱, 여성, 처벌, 피해자, 예방, 아동, 대응, 마약, 대책, 청소년	조희원 외(2022), 오정용 외(2022), 정완(2022) 등
(토픽 5) 사이버위협 대응 및 예방체계	해커, 공격, 랜섬웨어, 해킹, 사이버보안, 공급망, 사이버공격, 처벌, 법안, 시스템	한상암 외(2020), 오삼광(2023), 이경열 외(2023) 등
(토픽 6)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랜섬웨어, 보안, 공격, 해킹, 유출, 개인정보, 해커, 데이터, 피해자, 대응	신영진(2020), 김현우(2021), 유동현 외(2021) 등
(토픽 7)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보안, 기술, 위험, 안전, 대응, 탈취, 사이버공격, 시스템, 교육, 보호	김한균(2020), 허진성(2020), 김두상(2021) 등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8) 안전한 디지털사회	불법, 콘텐츠, 유통, 저작권, 사이트, 차단, 미디어, 삭제, 유포, 침해	장윤진 외(2020), 박호정(2020), 이원상(2022) 등
(토픽 9) 사이버 범죄 근절	검거, 구속, 사기, 처벌, 사건, 불법, 보이스피싱, 유포, 단속, 영상물	윤지영(2021), 김재경(2022), 강나래(2022) 등
(토픽 10) 사이버 범죄 피해자 보호	피해자, 대응,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추적, 방지법, 검열, 대책, 성착취물, 삭제	선은애(2020), 이은영(2021), 이원상(2023)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사이버 범죄'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사이버 범죄 대응력(토픽 2)', '사이버 범죄 근절(토픽 9)', '사이버 범죄 피해자 보호(토픽 10)'

[그림 3-26]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사이버 범죄



4) 4차 산업혁명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4차 산업혁명'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디지털전환 사회', '미래 핵심 기술혁신', '디지털인재',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체제', '디지털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 '디지털혁신 성장', '디지털전환 인프라', '디지털(혁신) 교육', '디지털혁신 생태계', '디지털 신산업'으로 정의되었음

[표 3-29]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4차 산업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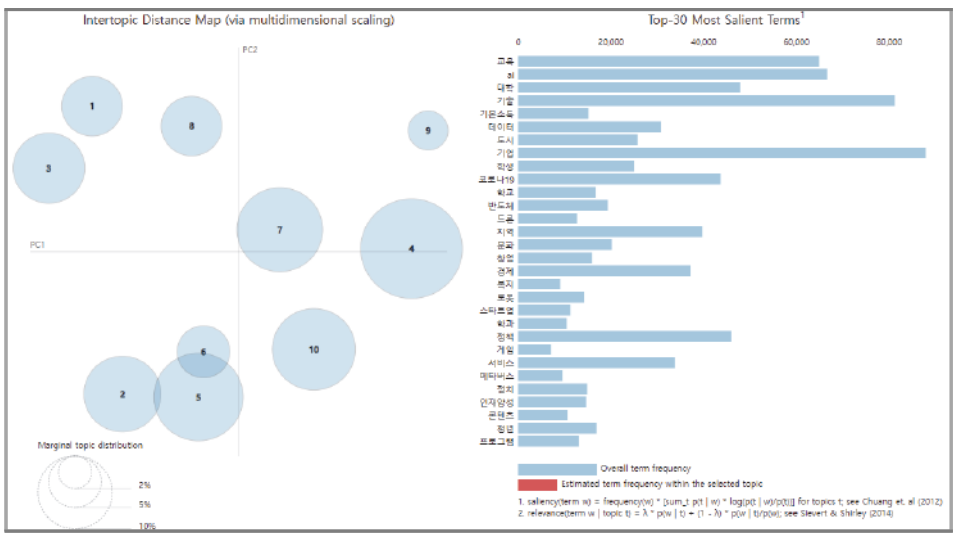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디지털전환 사회	교육, 문화, 메타버스, 콘텐츠, 청년, 참여, 기술, 디지털, 미래, AI	신상기 외(2022), 신창식(2022), 임상호(2023) 등
(토픽 2) 미래 핵심 기술혁신	AI, 기술, 로봇, 빅데이터, 시스템, 혁신, 스마트팩토리, 융합, 서비스, 미래	최두원(2020), 조한솔 외(2021), 라혜정 외(2021) 등
(토픽 3) 디지털인재	대학, 교육, 인재양성, 융합, 기술, AI, 지역, 혁신, 산학협력, 미래	고경일(2021), 박주경 외(2021), 선종수(2022) 등
(토픽 4)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체제	정치, 정책, 코로나19, 미래, 개혁, 역할, 공정, 책임, 일자리, 규제	송영현(2020), 황준성(2021), 박세훈(2021) 등
(토픽 5) 디지털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디지털, 클라우드, 5G, 블록체인, 혁신, 보안, 미래	김원(2020), 김승래(2021), 조재우(2021) 등
(토픽 6) 디지털 혁신성장	드론, 데이터, 스타트업, 창업, 벤처기업, 특허, 혁신, 지식재산, 기술, 개인정보	신용덕(2020), 한광호 외(2021)
(토픽 7) 디지털전환 인프라	지역, 도시, 추진, 계획, 조성, 시민, 유치, 정책, 미래, 스마트시티	김은비 외(2020), 이재현(2020), 방민석(2022) 등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8) 디지털(혁신) 교육	교육, 대학, 교육청, 학습, 미래,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원격수업, 미래교육	서유정 외(2021), 신만철(2021), 이영주(2022) 등
(토픽 9) 디지털혁신 생태계	코로나19, 문화, 재원, 콘텐츠, 정책, 보편, 일자리, 효과, 대비, 경제	김종세(2020), 김승래(2021), 이혜원(2022) 등
(토픽 10) 디지털 신산업	경제, 정책, 규제, 일자리, 혁신, 성장, 고용, 글로벌, 대응, 협력	임보영 외 (2020), 노규성(2020), 신현주(2020)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4차 산업혁명'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미래 핵심 기술혁신(토픽 2)', '디지털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토픽 5)', '디지털 혁신성장(토픽 6)'

[그림 3-27] LDA 토픽 모델링 결과: 4차 산업혁명



5) 디지털 경제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디지털 경제'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디지털 플랫폼 시장',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디지털 혁신기술 및 인프라', '디지털전환 대응 일자리', '디지털 경제 공정시장',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글로벌 디지털경제 네트워크', '디지털전환 추진 및 대응', '디지털 혁신성장', '신정장동력 플랫폼'으로 정의되었음

[표 3-30]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디지털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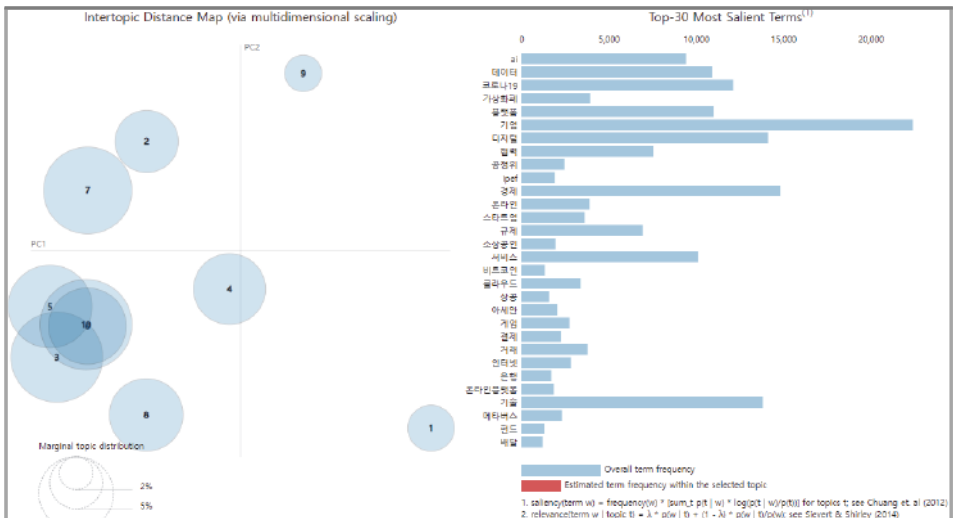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디지털 플랫폼 시장	소상공인, 코로나19, 서비스, 배달, 결제,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쇼핑, 청년, 유통	이건수(2022) 최재섭(2022), 등
(토픽 2)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가상화폐, 규제, 비트코인, 인터넷, 거래, 결제, 가치, 자산, 시스템, 블록체인	송영현(2021), 홍준호(2021), 권오익 외(2022) 등
(토픽 3) 디지털 혁신기술 및 인프라	데이터, AI, 클라우드, 혁신, S/W, 5G, ICT, 인프라, 미래, 디지털전환	민서현 외(2021), 이상근(2023) 등
(토픽 4) 디지털전환 대응 일자리	코로나19, 정책, 일자리, 고용, 도시, 대비, 미래, 기업, 교육, 전환	김소영(2020), 장희은 외(2020). 김승래(2021) 등
(토픽 5) 디지털 경제 공정시장	플랫폼, 기업, 규제, 공정, 소비자, 보호, 성장, 독점, 혁신, 법안	김신언(2020), 송강직(2020), 정혜련(2022) 등
(토픽 6) 디지털 경제 활성화	추진, 정책, 참여, 국가, 공급망, 계획, 한국판뉴딜, 지역, 글로벌, 협력	장윤희(2020), 김범준 외(2021), 유수동 외(2022) 등
(토픽 7) 글로벌 디지털경제 네트워크	정책, 협력, 국가, 정치, 글로벌, 미래, 강화, 성장, 참여, 주도	민성기(2022), 정성문 외(2022), 조성제(2022) 등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8) 디지털전환 추진 및 대응	협력, 강화, 전환, 추진, 대응, 혁신, 성장, 대비, 계획, 미래	전승화 외(2020), 변승혁(2020), 선종수(2022) 등
(토픽 9) 디지털 혁신성장	AI, 기술, 청년, 정책, 미래, 글로벌, 성장, 협력, 교육, 혁신	곽진선 외(2022), 김종승(2023) 등
(토픽 10) 신성장동력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혁신, 규제, 글로벌, 성장, 벤처기업, 정책, 창업	김종호(2021), 홍대식(2021)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디지털 경제'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디지털 혁신기술 인프라(토픽 3)', '디지털 경제 공정시장(토픽 5)', '디지털 경제 활성화(토픽 6)', '신정장동력 플랫폼(토픽 10)'

[그림 3-28] LDA 토픽 모델링 결과: 디지털 경제



6) 양극화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양극화'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교육격차 해소 및 양질의 교육기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거격차', '공정한 부동산 시장', '시장중심 혁신성장', '지역산업 창출', '공정한 노동시장', '시장경제 기능 회복', '고용안전망',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정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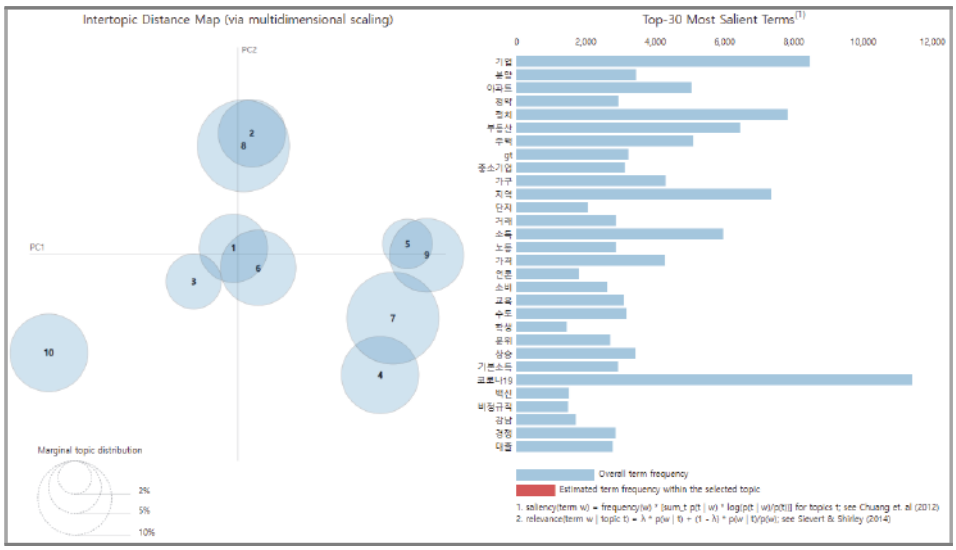
[표 3-31]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양극화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교육격차 해소 및 양질의 교육기회	코로나19, 지역, 교육, 학생, 대학, 학교, 학습, 학력, 수업, 심화	정재훈 외(2021), 고서연 외(2023) 등
(토픽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중소기업, 금리, 경제, 자금, 코로나19, 대출, 채권, 신용, ESG경영	임현철(2021), 유수동 외(2022) 등
(토픽 3) 주거격차	분양, 청약, 지역, 코로나19, 공급, 아파트, 미분양, 규제, 부동산, 주택	박세훈(2022), 맹철규(2022) 등
(토픽 4) 공정한 부동산 시장	경제, 정치, 부동산, 선거, 국가, 코로나19, 공정, 지역, 공약, 주택	서영표(2021), 이진규(2022) 등
(토픽 5) 시장중심 혁신성장	최저임금, 인상, 상속세, 경제, 정치, 노인, 코로나19, 뉴딜, 기업, 미래	송헌재 외(2020), 이혜윤(2021) 등
(토픽 6) 지역산업 창출	경제, 정책, 코로나19, 기업, 대책, 지역, 고용, 중소기업, 복지, 일자리	김미경 외(2022), 이태 외(2023) 등
(토픽 7) 공정한 노동시장	정치, 소득, 기본소득, 정책, 경제, 민주주의, 코로나19, 갈등, 미래, 분배	한승훈(2022), 김병록(2023) 등
(토픽 8) 시장경제 기능 회복	코로나19, 소비, 경제, 매출, 고용, 자산, 일자리, 회복, 소득, 성장	남재욱 외(2020), 송지연(2020) 등
(토픽 9) 고용안전망	노동, 노동자, 청년, 비정규직, 임금, 노조, 평등, 코로나19, 해소, 노동시장	이성호 외(2022), 김진수(2021) 등
(토픽 10) 부동산 시장 안정	아파트, 부동산, 주택, 지역, 가격, 거래, 대출, 수요, 집값, 기록	권연화 외(2020), 김상봉 외(2023)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양극화’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교육격차 해소 및 양질의 교육기회(토픽 1)’, ‘주거격차(토픽 3)’, ‘지역산업 창출(토픽 6)’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토픽 2)’, ‘시장경제 기능 회복(토픽 8)’
- ‘공정한 부동산 시장(토픽 4)’, ‘공정한 노동시장(토픽 7)’
- ‘시장중심 혁신성장(토픽 5)’, ‘고용안전망(토픽 9)

[그림 3-29]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양극화



7) 기후변화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기후변화'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신기후체제 대응', '탄소중립 이행',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 '기후변화 적응역량', '녹색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혁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기후변화 국제협력'으로 정의되었음

[표 3-32]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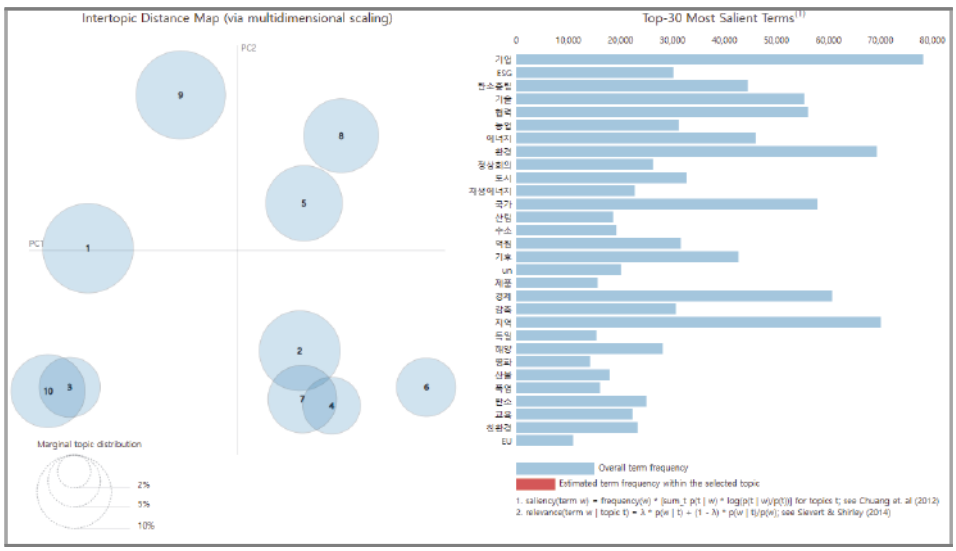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신기후체제 대응	코로나19, 정치, 경제, 정책, 현실, 국가, 대비, 성장, 미래, 대응	박지혜(2020), 유나리 외(2020), 서현정(2022)
(토픽 2) 탄소중립 이행	탄소중립, 에너지, 재생에너지, 감축, 계획, 전환, 대응, 환경, 온실가스, 전력	이준서(2022), 채영근(2022), 최선영(2022)
(토픽 3)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대응, 경제, 기후변화협약, 글로벌, 기금, 정책, 책임, 참여, 노력, 협력	성봉근(2021), 이기한(2022), 민영훈(2023)
(토픽 4) 녹색생활 실천	ESG, 실천, 참여, 가치, 학교, 교육, 성과, 미래, 환경교육, 책임	정재욱(2020), 이두곤(2022), 장진아 외(2022)
(토픽 5) 기후변화 적응역량	도시, 시민, 교육, 문화, 지역, 공원, 미래, 환경, 공간, 생활	김나윤 외(2022) 박현주 외(2023), 조상순 외(2023)
(토픽 6) 녹색경제 전환	제품, 기술, 친환경, 데이터, 소비자, 플랫폼, 소비, 시스템, 캠페인, 적용	이규홍(2021), 이준서(2021), 최정열(2022)
(토픽 7)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혁신	기술, 협력, 기업, 연구, 혁신, 추진, 미래, 과학기술, 경제, 글로벌	송인옥 외(2020), 김두수(2023), 이경선 외(2023)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8)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산림, 지역, 해양, 환경, 추진, 계획, 대응, 조성, 안전, 대책	김수련 외(2020) 천정윤 외(2021), 이병재(2023)
(토픽 9)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산불, 폭염, 기온, 기상, 가뭄, 예측, 태풍, 지구온난화, 홍수, 날씨	박효선 외(2022), 성준경 외(2022), 윤동현 외(2022)
(토픽 10) 기후변화 국제협력	협력, 정상회의, 경제, 평화, 국가, 안보, 대화, 코로나19, 대응, 강화	송재령(2022), 이태동(2022), 문예찬(2023)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기후변화'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탄소중립 이행(토픽 2)', '녹색생활 실천(토픽 4)',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혁신(토픽 7)'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토픽 3)', '기후변화 국제협력(토픽 10)'

[그림 3-30]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기후변화



8) 지속가능개발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개발'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국제사회 공조 및 역할', '산학 연계·협력 및 역할',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미래지향적 지속가능개발'로 정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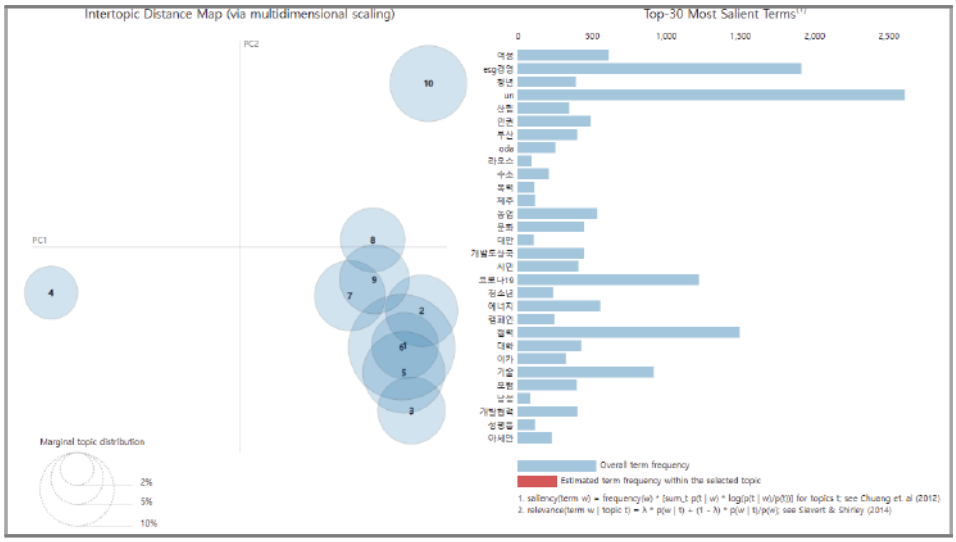
[표 3-33]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지속가능개발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ESG 역량	기업, 코로나19, 환경, 기술, 교육, 기후변화, ESG경영, 에너지, 협력, 전세계	이윤선 외(2021) 양미란 외(2022), 김지연(2022)
(토픽 2) 미래 협력관계	기업, 정책, 글로벌, 협력, 경제, 국가, 기술, 지역, 계획, 미래	김애정(2021), 주한나 외(2022) 등
(토픽 3) ESG 경영 참여	ESG경영, 협력, 기업, 코로나19, 기후변화, 친환경, 대응, 추진, 노력, 참여	안세민 외(2022), 박정호 외(2023), 허종호 외(2023)
(토픽 4) 국제사회 동참 캠페인·홍보	코로나19, 대응, 계획, 국가, 교육, 활동, 정책, 캠페인, 지역, 참여	김은주(2023), 공택욱(2023) 등
(토픽 5)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코로나19, 기후변화, 협력, 대응, 혁신, 국가, 기술, 참여, 정책	정헌주 외(2022), 이지선 외(2023) 등
(토픽 6) 국제사회 공조 및 역할	ESG경영, 기업, 글로벌, 환경, 기후변화, 협력, 국가, 교육, 지역, 경제	이유경(2022), 장석인(2023) 등
(토픽 7) 산학 연계·협력 및 역할	기업, 대학, 경제, 국가, 코로나19, 정책, 협력, 지역, 기술, 교육	김하늬 외(2021), 노준석(2022) 등
(토픽 8)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청년, 교육, 문화, 시민, 협력, 참여, 지역, 청소년, 추진, 활동	황세영(2021), 이승준 외(2021) 등
(토픽 9) 국제 교류·협력	지역, 글로벌, 협력, 코로나19, 참여, 도시, 여성, 청소년, 문화, 노력	이찬 외(2023), 오종택 외(2021) 등
(토픽 10) 미래지향적 지속가능개발	협력, 미래, 대응, 지역, 추진, 활동, 합의, 이행, 교류, 시민	손예령(2020), 김진오 외(2020)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지속가능개발'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토픽 5)', '국제사회 공조 및 역할(토픽 6)'
- '산학 연계·협력 및 역할(토픽 7)',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토픽 8)', '국제 교류·협력(토픽 9)'

[그림 3-31]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지속가능개발



9) 정치참여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정치참여'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민주주의',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정치참여를 통한 공정사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참여형 통치구조', '정치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시민 주도의 정치개혁', '정치참여에 대한 청년의 역할', '다양한 집단의 지역정치 참여·활동', '지역 민주시민교육', '정치참여·소통문화'로 정의되었음

[표 3-34]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정치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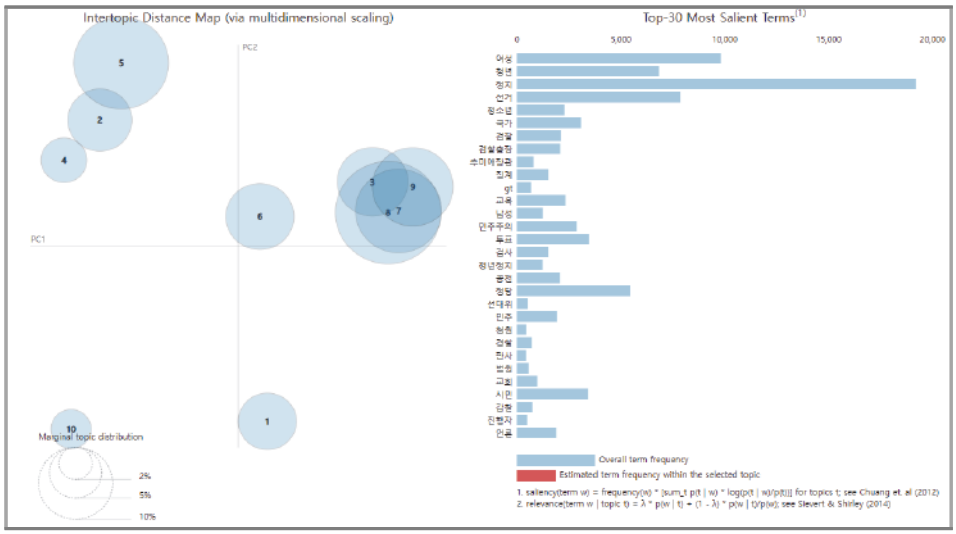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민주주의	정치, 시민, 청원, 참여, 민주주의, 선거, 제도, 권력, 정책, 정당	윤형석(2020), 한주희(2022), 임정빈 외(2022) 등
(토픽 2)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사건, 여성, 청년, 공정, 권력, 역할, 인권, 가치, 시민, 투표	박상준(2020), 이정진(2022) 등
(토픽 3) 정치참여를 통한 공정사회	여성, 투표, 남성, 선거, 지역, 정책, 진보, 보수, 가산점, 20대	권수현(2022), 송경재(2022) 등
(토픽 4) 사회적 합의를 통한 참여형 통치구조	정치, 참여, 선거, 비판, 정책, 청년, 개혁, 활동, 투표, 시민	김훈호 외(2021) 김범수 외(2021) 등
(토픽 5) 정치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책, 비판, 선거, 역할, 경제, 보수, 정치중립, 부동산, 지역, 책임	최현태 외(2021), 윤상규(2023), 유수동 외(2022) 등
(토픽 6) 시민 주도의 정치개혁	선거, 활동, 정책, 혁신, 개혁, 시민, 청소년, 교육, 통합, 투표	이창호(2021), 강병희 외(2021) 등
(토픽 7) 정치참여에 대한 청년의 역할	청년, 선거, 지역, 청년정치, 투표, 민주주의, 유권자, 시민, 활동, 지방선거	김해원(2020), 이종희(2021), 장선화(2021) 등
(토픽 8) 다양한 집단의 지역 정치 참여·활동	여성, 정책, 시민, 청년, 지역, 활동, 민주주의, 교육, 20대, 역할	정병삼 외(2021), 송경재(2021) 등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9) 지역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교육, 청년, 민주주의, 지역, 학생, 권력, 활동, 시민, 학교	남미자 외(2020), 김자영 외(2022), 배소연(2020) 등
(토픽 10) 정치참여·소통 문화	선거, 민주주의, 정신, 권력, 시민, 역할, 민주운동, 지역, 문화, 소통	길혜지 외(2020), 정소라(2022)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정치참여'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참여(토픽 2)', '정치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토픽 5)'
- '정치참여를 통한 공정사회(토픽 3)', '정치참여에 대한 청년의 역할(토픽 7)', '다양한 집단의 지역정치 참여·활동(토픽 8)', '지역 민주시민교육(토픽 9)'

[그림 3-32]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정치참여



10) 지방자치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지방자치' 영역의 10개 토픽에 대해 키워드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사회적 약자 보호', '가족서비스 및 복지 사각지대',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지역 탄소중립 이행',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교육혁신', '자치역량 및 책임성', '지역 방역 및 의료체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 및 협력',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혁신 생태계'로 정의되었음

[표 3-35]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지방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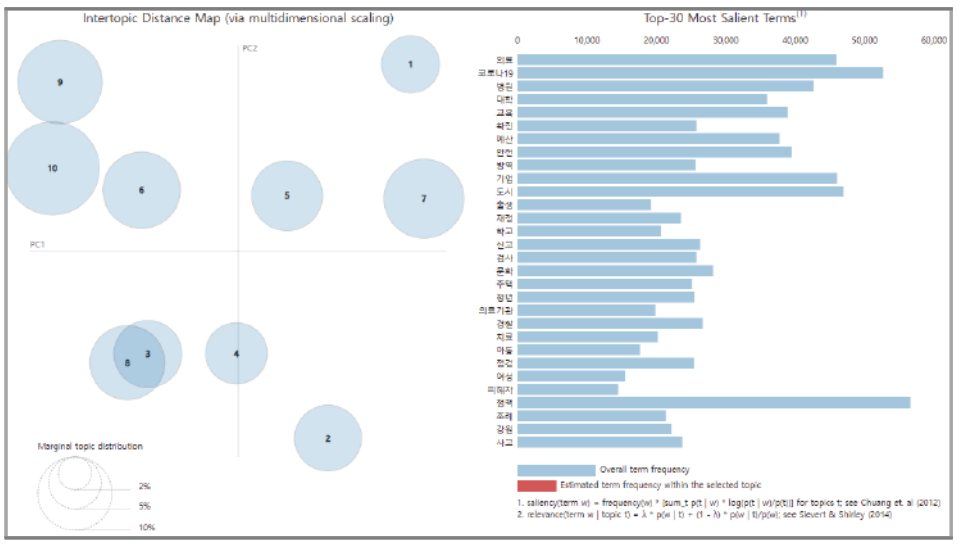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1)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 피해자, 사건, 가족, 스토킹, 보호, 범죄, 인권, 차별, 예방	김서기(2020), 김제선 외(2021), 손경희(2022) 등
(토픽 2) 가족서비스 및 복지 사각지대	출생, 아동, 출산, 보호, 제도, 서비스, 동물, 복지, 부부, 가족	김원중(2022), 김남욱(2022) 등
(토픽 3)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대책, 주택, 아파트, 계획, 규제, 부동산, 정비, 재건축, 공공, 민간	임동진 외(2021), 배정현 외(2022) 등
(토픽 4) 지역 탄소중립 이행	이행, 탄소중립, 강화, 조치, 계획, 개선, ESG경영, 대책, 공공기관, 기후변화	양철 외(2021), 김남욱(2022), 권순길 외(2023)등
(토픽 5)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교육혁신	대학, 교육, 학교, 대응, 교육부, 지역, 교육청, 자치단체, 계획, 체계	황준성(2020), 나민주(2021), 박선형(2021) 등
(토픽 6) 자치역량 및 책임성	조례, 행정, 정치, 공무원, 개정, 선거, 책임, 규정, 권한, 시민	하태영 외(2021), 조진우(2023) 등
(토픽 7) 지역 방역 및 의료체계	코로나19, 의료, 병원, 방역, 의료기관, 대책, 진료, 조치, 감염병, 체계	박주영 외(2021), 고미선 외(2022) 등
(토픽 8)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예산, 재정, 고향사랑기부제, 정책, 답례품, 기금, 대책, 제도, 보조금, 지원금	조진우(2022), 이상신(2022), 황이경 외(2023) 등

토픽	키워드	참고
(토픽 9) 주민참여 활성화 및 협력	정책, 문화, 청년, 시민, 행정, 참여, 활동, 협력, 노력, 역할	노현수(2020), 김남욱(2021), 이현국 외(2021) 등
(토픽 10) 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혁신 생태계	지역, 기업, 추진, 계획, 조성, 서비스, 기술, 유치, 혁신, 협력	박건우 외(2020), 김우영(2021), 전승훈 외(2022) 등

❍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활용하면, '지방자치'의 각 토픽들은 다음의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있음

-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토픽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토픽 8)'

[그림 3-33] LDA 토픽 모델링 결과: 지방자치



제4절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1. 분석 개요

□ 분석개요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미래사회 주요 이슈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변형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음
- 델파이 기법은 통제된 피드백이 제공되는 2~4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복잡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유수동·박현욱, 2023)
- 즉,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유수동·박현욱, 2023)
- 이러한 점에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미래사회 주요 이슈와 지방행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복잡성, 영역별 개별화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방행정 주요 이슈를 구체적·종합적으로 탐색하는데 있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음

❍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래 지방행정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인식을 바탕으로 트렌드별 적합성과 영향시기 등을 분석하여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함

❍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트렌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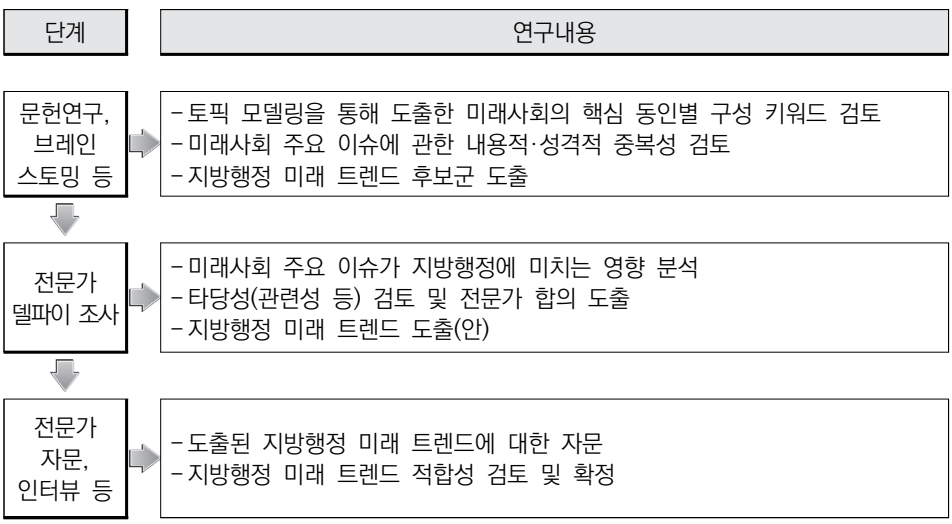
□ 분석절차

○ 먼저,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미래사회 핵심 동인별 구성 키워드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내용적·성격적 중복성을 검토하여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통합하였음

○ 다음으로, 구체화된 미래사회 주요 이슈와 지방행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안)를 도출하기 위해 변형된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인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확정하였음

[그림 3-34]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을 위한 분석절차



2. 미래사회 주요 이슈 중복성 검토 및 종합결과

❍ 미래사회의 핵심동인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영역 등 국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영역별·토픽별 중복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음

- LDA 토픽 모델링 결과에 대한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각 영역별·토픽별 내포하고 있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을 구체화하였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내용적·성격적으로 통합·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은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을 의미하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방행정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함

[표 3-36]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종합결과: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

미래사회 주요 이슈 종합			
구분	**비고**	**구분**	**비고**
•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 고용안전망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인구구조, 지방자치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구조, 지방자치	•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 안전관리 및 재난 위기 대응	기후변화, 지방자치
• 디지털 안전사회	사이버 범죄, 4차 산업혁명	• ESG와 사회적 실천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4차 산업혁명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디지털혁신 생태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디지털 플랫폼 시장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치참여, 사회갈등

미래사회 주요 이슈 종합			
구분	**비고**	**구분**	**비고**
•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 지역사회 안전망	지방자치, 인구구조, 양극화
• 균등한 교육기회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지방자치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지방자치, 4차 산업혁명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자치역량과 책임성	지방자치, 정치참여
• 주거 안정	양극화	• 지역혁신 생태계	지방자치, 지속가능개발

3.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절차

❍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해 변형된 델파이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2차 라운드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음

- 일반적으로 델파이 기법의 라운드 횟수는 2~5회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Critcher & Gladstone, 1998)
-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델파이 조사기법과 조사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37] 전문가 델파이 조사 절차

구분	주요 내용	기간
계획 수립	-주요 평가지표 개념 정립 및 연구방법 선택 -전문가 패널 추천 및 섭외	2023년 8월~9월
주요 이슈 도출 및 전문가 선정	-연구문제의 선정을 위한 주요 이슈 도출 -전문가 패널 선정	2023년 9월
1차 조사 및 응답결과 분석	-1차 라운드 폐쇄형 설문지 작성(Likert 7점 척도) 및 설문조사 -각 항목별로 도출된 평균값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항목 제외 -1차 응답결과 통계치 제시 -2차 조사를 위한 최종항목 도출	2023년 9월~10월
2차 조사 및 응답결과 분석	-2차 라운드 폐쇄형 설문지 작성(Likert 7점 척도) 및 설문조사 -구성요인의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 전문가 패널

❍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이종성, 2001)

❍ 델파이 기법이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때,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질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사대상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유수동·박현욱, 2023)

- 조사대상은 참여자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능력, 참여의 성실성, 참가자의 수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전문가 집단의 선정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학계 및 연구원,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들을 선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학계 8명, 연구원 17명, 관련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전문가 5명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미래사회 주요 이슈와 지방행정 환경을 둘러싼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 표집목표 인원은 총 30명이었으나, 1차 라운드에서는 25명, 2차 라운드에서는 25명이 참여하였음

-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38] 참여 전문가 패널의 특성

구분	직업(직급)	경력	표집목표 인원	실제 응답인원	
				1차	2차
학계	교수	만 25년	8명	6명	6명
	교수	만 20년			
	교수	만 18년			
	교수	만 16년			
	교수	만 15년			
	교수	만 11년			
	교수	만 4년			
	교수	만 1년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만 30년	17명	15명	15명
	선임연구위원	만 17년			
	연구위원	만 20년			

구분	직업(직급)	경력	표집목표 인원	실제 응답인원	
				1차	2차
	연구위원	만 15년			
	연구위원	만 15년			
	연구위원	만 10년			
	연구위원	만 6년			
	부연구위원	만 8년			
	부연구위원	만 8년			
	부연구위원	만 6년			
	부연구위원	만 5년			
	부연구위원	만 5년			
	부연구위원	만 3년			
	부연구위원	만 3년			
	부연구위원	만 2년			
	부연구위원	만 2년			
	부연구위원	만 2년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연구위원	만 18년	5명	4명	4명
	과장	만 10년			
	센터장	만 6년			
	팀장	만 5년			
	팀장	만 5년			
계			30명	25명	25명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본 연구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음

❍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이메일을 통해 1·2차 라운드에 계량화된 설문지를 작성·배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음

- 1차 라운드는 총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2차 라운드는 총 25명을 대상으로 2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최종적인 분석에 활용하였음

❍ 델파이 조사의 라운드가 진행될 때 전 단계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응답하였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음 라운드 설문지에 반영하였음

- 1차 라운드에서는 토픽 모델링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출한 미래사회 주요 이슈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2차 라운드는 1차 라운드 결과를 종합 분석·정리하여 전문가 패널로 하여금 재평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음
- 특히, 2차 라운드 설문지에서는 1차 라운드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평정하였던 반응들에 대하여 집중 경향과 변산도를 알 수 있는 중앙값(Mdn)과 사분점간 범위(interquartile range)를 사전에 제시하여 질문에 대한 반응을 제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2차 라운드에서 추출된 결과들에 대해 각 평가 항목의 내용적 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n)을 산출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음
- Lawshe(1975)와 Ayre & Scally(2014)가 제안한 CVR 산출 공식과 임계값 계산 공식을 활용하였으며,[3] CVR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그림 3-35] CVR 산출 공식

$$\text{CVR}=\frac{n_e-(N/2)}{N/2}$$

주: 1) n_e = Number of panel members indicating an item 'essential'
2) N = Number of panel members
출처: Lawshe(1975), 유수동·박현욱(2023: 99)

3) CVR을 산출하는 공식은 Lawshe(1975)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내용 타당도를 계량화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Ayre & Scally(2014)는 CVR의 임계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항 확률 표와 함께 제안하였다(유수동·박현욱, 2023: 99).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전문가 패널이 25명이므로 N은 25,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N_e는 5, 6, 7을 선택한 패널의 수가 된다.

❍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3-39] 설문지의 구성 및 자료분석방법

Round	형식	주요 내용	자료분석방법
사전	내용분석 및 개념 정의	•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 도출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선행연구 검토
1차	구조화 응답 (Likert 7점)	• 각 영역별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등 평가	기술통계에 의한 평균 산출
사후 (1차)	내용적 타당도 검증	• 각 평가항목의 내용적 타당도 비율(CVR) 산출 및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CVR 및 임계값 계산 공식 활용
2차	구조화 응답 (Likert 7점)	• 각 영역별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재평가	기술통계에 의한 평균 산출
사후 (2차)	내용적 타당도 검증	• 각 평가항목의 내용적 타당도 비율(CVR) 산출 및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CVR 및 임계값 계산 공식 활용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미래사회 이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던 총 24개의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음

- 7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으로 작성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였음
- 1차 델파이 조사는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과 지방행정과의 관련성 검증 차원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될 항목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특히,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미래사회 이슈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에 대한 최종 델파이 조사의 사전 검증차원에서 수행된 만큼 전문가 평가를 통해 평가항목의 평균값이 4.00 미만인 후보군을 제거하였음

❍ 분석에 있어서는 평가항목에 대한 CVR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 각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내용적 타당도 비율(CVR)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평가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 1차·2차 델파이 조사에서 분석에 사용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의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4)]

4) 일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Cronbach's α값이 0.60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0, 나아가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유수동·전성훈, 2016: 103).

- 특히,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의 평균값이 4.00 이하이거나, CVR 값이 0.440[5] 미만인 경우 이를 제외하여 내용적 타당도가 있는 후보군들로 축소하였음

❍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있어 분석에 사용된 총 24개의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 중 1개를 제외한 23개의 후보군들이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2차 라운드 항목으로 선정되었음

- '디지털 안전사회'는 CVR 값이 -0.120으로 나타나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에서 제외하였음
- 1차 검증을 통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역보건·의료와 시민건강',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디지털혁신 생태계', '디지털 플랫폼 시장',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균등한 교육기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거안정', '고용안전망',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ESG와 사회적 실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 안전망',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자치역량과 책임성', '지역혁신 생태계'로 도출되었음

5) Lawshe(1975), Ayre & Scally(2014)에 따르면, 패널 사이즈(panel szie)가 25명인 경우 참여자의 응답값이 0.440 이상이면 내용적 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표 3-40]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요소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N	M	SD	CVR	α if item deleteted	α
• 저출산·고령사회	25	6.84	0.874	1.000	.864	.867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5.48	1.084	0.520	.868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6.88	0.831	1.000	.865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6.20	0.816	1.000	.864	
• 디지털 안전사회 ∨		4.32	1.180	-0.120	.859	
•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4.64	0.637	0.280	.866	
• 디지털혁신 생태계		4.56	0.768	0.120	.862	
• 디지털 플랫폼 시장		4.60	0.957	0.200	.858	
•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4.88	1.129	0.200	.853	
• 균등한 교육기회		5.48	0.962	0.600	.873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4.68	1.069	0.360	.858	
• 주거 안정		4.92	1.077	0.360	.865	
• 고용안전망		5.32	1.029	0.600	.860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5.08	1.579	0.360	.864	
•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5.24	1.267	0.680	.890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5.88	0.832	0.920	.866	
• ESG와 사회적 실천		4.68	1.281	0.120	.859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5.24	1.051	0.600	.856	
•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4.40	1.290	0.120	.849	
•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5.56	1.121	0.600	.859	
• 지역사회 안전망		5.52	1.228	0.600	.867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5.12	1.201	0.600	.871	
• 자치역량과 책임성		5.72	1.100	0.680	.865	
• 지역혁신 생태계		5.56	1.003	0.680	.864	

주: (∨) 표시 부분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주요과제로서의 CVR 비율값이 낮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외시킨 문항임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결과 도출된 23개의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들을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폐쇄형 설문으로 작성·배포하였음
-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문가 패널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은 1차 델파이 조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값이 4.00 미만이거나 CVR 값이 0.440 미만 등 내적 타당도 비율이 낮은 후보군들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전문가 패널 간 합의점 도달을 위해 1차 라운드에서 각각 응답하였던 문항별 중앙값과 사분점간 범위를 제시하여 수정 의견을 수렴하였음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1차 델파이 조사와 같이 평가항목에 대한 CVR과 Cronbach's α값을 활용하였음

❍ 2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있어 분석에 사용된 총 23개의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 중 10개를 제외한 13개 항목들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의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되었음
-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디지털혁신 생태계', '디지털 플랫폼 시장',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거 안정', '고용 안전망',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ESG와 사회적 실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은 CVR 값이 0.440 미만으로 나타나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에서 제외하였음
- 1·2차 검증과정을 통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은 '저출산·고령사회',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균등한 교육기회',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 안전망',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자치역량과 책임성', '지역혁신 생태계'로 도출되었음

[표 3-4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가요소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N	M	SD	CVR	α if item deleteted	α
• 저출산·고령사회	25	6.96	0.800	1.000	.812	.810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6.12	1.013	0.840	.829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6.96	0.800	1.000	.811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6.48	0.814	1.000	.819	
•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		4.60	0.645	0.200	.801	
• 디지털혁신 생태계 ∨		4.56	0.711	0.040	.793	
• 디지털 플랫폼 시장 ∨		4.48	0.822	0.120	.787	
•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		4.76	1.051	0.120	.778	
• 균등한 교육기회		5.52	0.918	0.680	.819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4.72	1.021	0.360	.797	
• 주거 안정 ∨		4.84	1.067	0.280	.804	
• 고용안전망 ∨		4.42	0.710	0.040	.800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		5.04	1.567	0.360	.791	
•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5.08	1.255	0.520	.792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6.16	0.943	0.920	.815	
• ESG와 사회적 실천 ∨		4.60	1.224	0.120	.788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5.12	1.013	0.520	.790	
•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		4.20	1.040	-0.120	.783	
•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5.76	0.925	0.760	.805	
• 지역사회 안전망		5.68	1.029	0.760	.819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4.92	1.151	0.440	.812	
• 자치역량과 책임성		5.88	0.971	0.760	.797	
• 지역혁신 생태계		5.56	0.916	0.760	.804	

주: (∨) 표시 부분은 2차 델파이 조사결과 주요과제로서의 CVR 비율값이 낮아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에서 제외시킨 항목임

3)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종합 결과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을 위해 실시된 2차 라운드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6.96)', '저출산·고령사회(6.96)', '지역인재와 지역 일자리(6.48)',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6.16)',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 건강(6.12)', '자치역량과 책임성(5.88)',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5.76)', '지역사회 안전망(5.68)', '지역혁신 생태계(5.56)', '균등한 교육기회(5.52)', '지속가능한 국토개발(5.12)',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5.08)', '교육자치와 교육혁신(4.92)'의 순으로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미래 지방행정 환경에 있어 인구구조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도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물론,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같은 격변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글로벌 메가트렌드에서 주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 국제협력 등은 지방행정환경과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이와 같은 과제들을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예산·인력·조직 등)과 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가 주로 접하고 있는 글로벌·국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트렌드들이 지방행정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극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격변하고 있는 미래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인력 등 각종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함

[표 3-4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종합 결과

(N=25)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순위	M	비고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1	6.96	인구구조, 지방자치
• 저출산·고령사회	2	6.96	인구구조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3	6.48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4	6.16	기후변화, 지방자치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5	6.12	인구구조, 지방자치
• 자치역량과 책임성	6	5.88	지방자치, 정치참여
•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7	5.76	정치참여, 사회갈등
• 지역사회 안전망	8	5.68	지방자치, 인구구조, 양극화
• 지역혁신 생태계	9	5.56	지방자치, 지속가능개발, 4차 산업혁명
• 균등한 교육기회	10	5.52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지방자치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11	5.12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실천	12	5.08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13	4.92	지방자치, 4차 산업혁명

□ 종합 결과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적인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였음

- 전문가 자문은 각 트렌드별 중복성과 함께 한국적 맥락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확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자치역량과 책임성', '디지털혁신 생태계', '교육자치와 교육혁신'으로 도출되었음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저출산·고령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통합하였음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특히 농촌과 지방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은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상호 보완적이고 중복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으로 통합하였음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은 재난상황 예방 및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자치역량과 책임성'과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공공정책 및 사회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서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역량과 책임성'으로 통합하였음
  - 자치역량과 책임성은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을 바탕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자치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음
- '지역혁신 생태계'와 '디지털혁신 생태계'는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서로 유사한 측면과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혁신 생태계'로 통합하였음
  - 디지털 혁신은 지역경제와 산업을 변화시키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내어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기회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줌
  - '디지털혁신 생태계'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지방행정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자문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방행정에 효율성 향상, 혁신적인 정책개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디지털 혁신이 시대적·세계적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로 정성적으로 판단하였음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과 ‘균등한 교육기회’는 교육분야에서의 핵심적인 개념들로 서로 상호작용하여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교육자치와 교육혁신’으로 통합하였음
  - 균등한 교육기회를 추구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교육혁신을 통해 학습방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실천’은 환경보호와 자원보전을 중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 고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로 트렌드 명을 변경하였음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실천은 지구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데 공통된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지역개발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표 3-43]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안)	전문가 중복성 검토	최종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 저출산·고령사회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 지역사회 안전망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 자치역량과 책임성	○	자치역량과 책임성
•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안)	전문가 중복성 검토	최종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 지역혁신 생태계	○	디지털혁신 생태계 (전문가·연구진 합의로 포함)
• 디지털혁신 생태계		
• 균등한 교육기회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문가·연구진 합의로 트렌드 명 변경)
•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실천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영향 시기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가 우리나라 지방행정환경에 영향을 미칠 시기를 전망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은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며, 총 22명이 응답하였음
- 지방행정환경에 대한 영향 시기는 단기(1~3년), 중기(3~5년), 장기(5~10년)으로 구분되고, 논의의 명확화를 위해 단기=1, 중기=2, 장기=3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응답결과의 평균값으로 종합하여 예측하였음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가 우리나라 지방행정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1.44)’,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1.48)’,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1.76)’, ‘자치역량과 책임성(1.76)’, ‘교육자치와 교육혁신(1.80)’, ‘인구감소와 지방소멸(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해당 트렌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함
- 특히, 단기적인 과제는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로 도출되었고,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자치역량과 책임성’,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과제가 도출되었음

[표 3-44]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의 영향 시기 예측

(N=25)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M	비고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1.44	기후변화, 지방자치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1.48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1.76	인구구조, 지방자치
• 자치역량과 책임성	1.76	지방자치, 정치참여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1.80	지방자치, 4차 산업혁명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1.84	인구구조, 지방자치
• 디지털혁신 생태계	2.28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지속가능한 지역(국토)개발	2.28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주: 단기=1, 중기=2, 장기=3

[표 3-45] 참고: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후보군의 영향 시기 예측

(N=25)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순위	M	비고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1	1.44	기후변화, 지방자치
• 저출산·고령사회	2	1.48	인구구조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3	1.48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 지역사회 안전망	4	1.48	지방자치, 인구구조, 양극화
• 주거안정	5	1.64	양극화
• 고용안전망	6	1.64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균등한 교육기회	7	1.72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지방자치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8	1.76	인구구조, 지방자치
• 자치역량과 책임성	9	1.76	지방자치, 정치참여
•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1.8	정치참여, 사회갈등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11	1.8	지방자치, 4차 산업혁명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12	1.84	인구구조, 지방자치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13	1.92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디지털 플랫폼 시장	14	2.08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 지역혁신 생태계	15	2.08	지방자치, 지속가능개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순위	M	비고
•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16	2.12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
• 디지털 안전사회	17	2.2	사이버 범죄, 4차 산업혁명
•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실천	18	2.24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ESG와 사회적 실천	19	2.24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디지털혁신 생태계	20	2.28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21	2.28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22	2.32	4차 산업혁명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3	2.32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24	2.48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주: 단기=1, 중기=2, 장기=3

KRIL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제4장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방향

제1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제2절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재구조화
제3절 재난·안전관리 회복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제4절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제5절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제6절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문제해결력 강화
제7절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제8절 균형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

제4장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방향

제1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1. 개요 및 현황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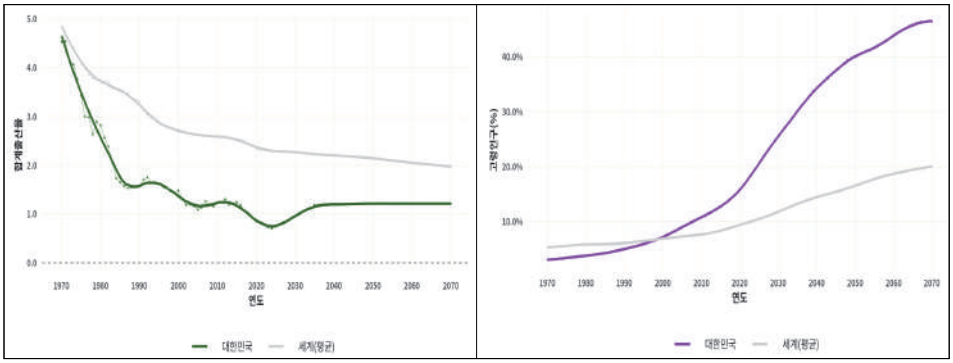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인구감소의 원인과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음(Haartesen & Van Wissen, 2012; Keegan, 1998)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3대 인구리스크인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에서 2020년 0.84, 2021년 0.81, 2022년 0.7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 고령화는 인구감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전체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Johnson et al., 2015)
  -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의 비율인 고령화율은 2000년 7.2%에서 2021년 16.1%, 2022년 1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그림 4-1] 세계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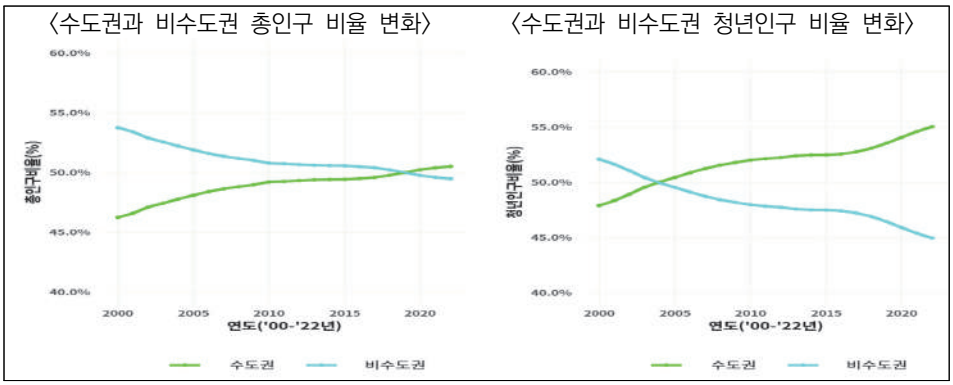
(고령인구 구성비 단위: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출처: 이원도·유수동·김영롱(2023: 255-256)

-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 심화 문제는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인구의 자연감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수도권 인구는 2020년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하였고(수도권: 2,596만 명, 비수도권: 2,582만 명), 청년인구의 불균형 문제는 2005년 전부터 역전 현상이 나타나 현재 그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음(행정안전부, 2023)

[그림 4-2] 수도권과 비수도권 총인구 및 청년인구 비율 변화



출처: 이원도·유수동·김영롱(2023: 257)

❍ 우리나라 3대 인구리스크의 본격화에 따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지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이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통해 인구 불균형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게 됨(이원도 외, 2023: 258)
- 이와 같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변화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감소와 함께 지역사회의 붕괴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및 사회전반에 걸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미래 정책방향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적 어려움, 도시화, 경제활동·서비스·인프라의 집중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한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구조와 균형이 깨지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제약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바람직한 미래모습은 균형잡힌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 전략적·장기적 관점의 계획수립·추진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간·단일한 대책 및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전반의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학계, 기업 등 각 부문의 협력과 전략적·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함
  - 진정한 의미의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 교육·의료 등의 서비스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협업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주민들과 지역 소재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문화·경제활동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을 촉진하여야 함
-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교육·건강 등 사회적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하며, 온라인 교육, 재택·원격근무 등을 도입·활성화하여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 균형의 실현을 도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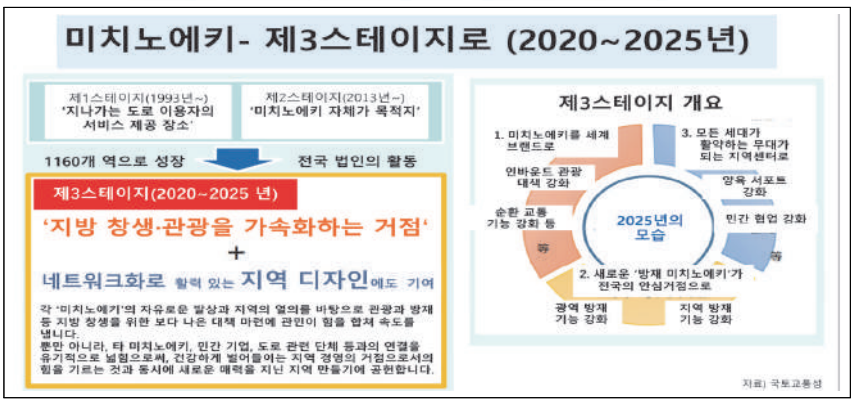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활성화 및 공간구조 재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 활성화 전략은 정주여건 개선, 사회적 활력 증진, 경제적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간구조 재편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더불어 지역별 특수성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원스톱 복지공간의 조성, 생활밀착형 도시공간 조성, 거점 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거점공간의 조성 등이 필요함
- 지역의 사회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등 각종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문화된 마케팅을 활용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간·장소 활력지원 사업, 인구감소지역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확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 관광거점사업 등이 필요함
-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및 대상별 특화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마련 등을 주요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노인, 여성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교육, 업종 변경 및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지원, 민간투자 주도 생태계 조성·발전 등이 필요함

※ 참고: 해외 우수사례

□ 일본 미치노에키와 지방창생 사례

사례명	인구감소 속에서 지방이 살아나는 거점: 미치노에키와 지방창생
필요성	- 2050년 일본 내 전국 주거지역에서 인구가 50% 이상 감소하고, 약 20의 주거지역의 무거주화가 진행될 예정임 •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구정촌일수록 인구 감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2015년 기준으로 1만 명 미만의 시구정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여 대응이 필요함 • 미치노에키의 약 80%가 중산간 지역이고, 10년을 앞선 고령화를 겪고 있어 지역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역 창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인구감소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도쿄권으로 과도한 인구 집중을 시정하여 각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해야 함
주요 내용	- 일본 전국의 지자체와 도로관리사업자가 연계해 국토교통성에 등록된 종합 휴게소 '미치노에키'를 운영함 • 기본 편의시설과 지역진흥시설 등을 통합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을 운영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을 활성화함 • 미치노에키 미야코노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역정주자립권을 확보하고 물산교류 및 관광정보를 공유함 - '미치노에키'는 휴식 기능, 정보발신 기능, 지역연계 기능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만드는 개성 넘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 •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 화장실, 육아시설과 도로 및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 시설, 문화 교양 시설, 관광 레크리에이션 등 지역 진흥 시설, 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배리어 프리화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2013년 기준 1,014곳이 미치노에키로 등록되었으며, 약 2억 3,000만 명이 이용하였음 • 매상 총액은 2,200억 엔으로 단순 계산 결과 한 곳당 연간 약 23만 명, 2.2억 엔의 부가가치를 창출함 • 2010년 미야자키현 구제역의 영향으로 광역 지원의 후방 거점으로서 방재 교육 등을 수행함 - 2014년부터 전국모델 미치노에키, 중점 미치노에키, 중점 미치노에키(후보)로 구분하여 운영 중임 • 전국 모델은 6곳으로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서 특별히 뛰어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전국적인 모델로서 성과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기능 발휘를 중점적으로 지원함 • 중점 미치노에키는 총 103곳으로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우수한 기획으로 향후 중점 지원의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관계 기관이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중점 미치노에키 후보는 78곳으로 지방정비국장 등이 선정하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기획을 위해 지역 차원의 의욕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임

사례명	인구감소 속에서 지방이 살아나는 거점: 미치노에키와 지방창생
	- 미치노에키는 2025년까지 제3스테이지로의 도약을 준비 중임 • 지방창생·관광을 가속화하는 거점으로서 네트워크화로 활력있는 지역 디자인에 기여하고자 함  
기대 효과	- 장래에 활력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마을·사람·일 창생'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함 - 휴게장소 제공 및 도로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 도모함 - 관광 확대 효과, 지역 일자리 및 취업 확대, 지역 커뮤니티의 확대 등 지역 진흥상의 효과가 기대됨 - 자위대의 재해 대책 거점, 구호 물자의 중계 거점 등 재난 대책의 거점 등 방재 거점 기능 효과가 있음
참고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3). 「2023 한·일 공동세미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미치노에키와 지방 창생"

제2절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재구조화

1. 개요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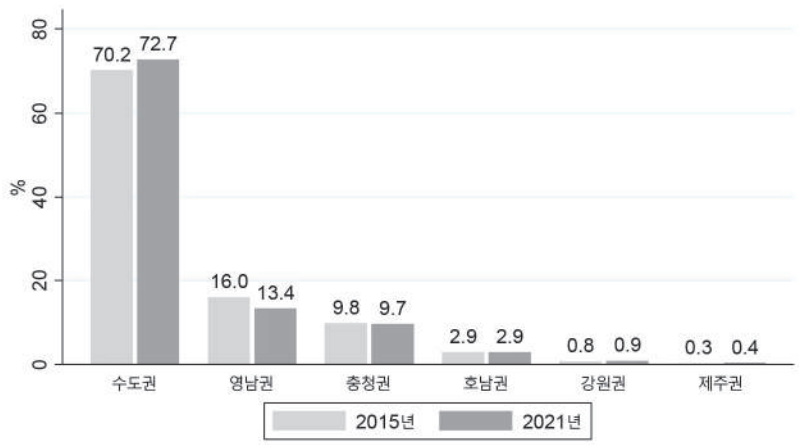
□ 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재 유출 심화

❍ 인구감소 및 주요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

- 2015년과 2021년 국내 상장사 본사 소재지 분포를 비교할 때, 다양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수도권이 약 2.5% 증가하였으며, 영남권에서는 약 2.6% 이탈 현상이 나타났음(최진섭, 2022)

[그림 4-3] 국내 상장사 본사 소재지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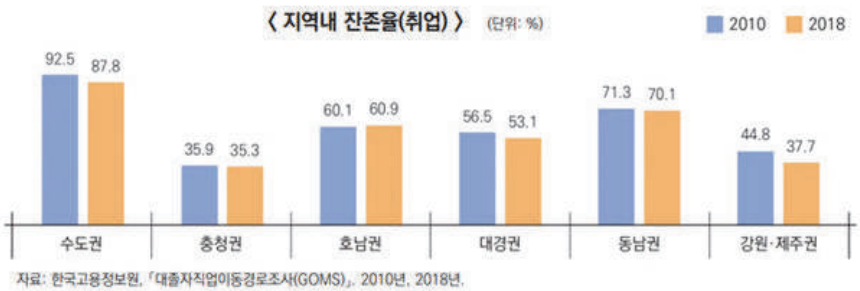


출처: 한국거래소, 최진섭(2022: 45) 재인용

-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 따르면 취업에 따른 지역 내 잔존율을 살펴보면, 충청권은 35.3%, 강원·제주권은 37.7% 순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은 2010년 92.5% 대비 2018년 87.8%로 지역내 잔존율이 낮아졌으나 이는 전반적인 취업률 저하, 해외 취업 등 다른 요인들로 인해 전반적인 잔존율이 저하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 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는 충청권과 강원·제주권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미래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4] 지역 내 잔존율(취업, 2010년 및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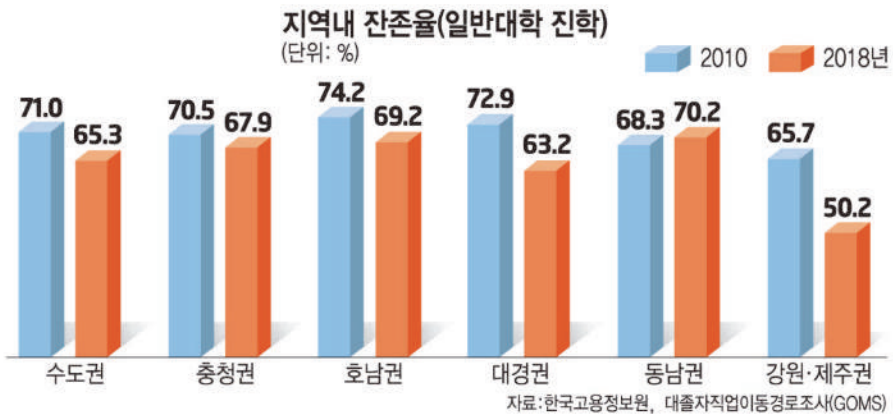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지역내 잔존율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도 기준으로 동남권(70.2%), 호남권(69.2%), 충청권(67.9%) 순으로 지역 내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반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타계하기 위한 지역정부 및 민간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그림 4-5] 지역 내 잔존율(일반대학 진학, 2010년 및 2018년)



❍ 대표적인 지역인재 육성 정책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가 있음

- RISE는 지방자치단체-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대학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권한을 이양받고, 대학은 지역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대학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RISE의 핵심은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대학 발전이 함께 계획되는 것으로서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강조된다는 것임 (교육부, 보도자료.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 본격 시동. 23.03.09)
-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형 RISE'를 살펴보면, 기본계획에서 지역정착에 대한 강조 및 특화산업 육성을 구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6] 대구형 RISE 육성계획



출처: 대구광역시 육성계획(https://m.blog.naver.com/ash1106/223038834917)

- 대구광역시는 신산업을 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학별 특성화를 고려하여 매칭하여 지역 혁신 선도 인재 및 기업 맞춤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총 사업비 2,966억 규모의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 4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① 지역 맞춤 파워풀 인재양성(지역기업 인재양성), ② D-Brain산업 대전환(전통산업을 5대 신산업 구조 전환 지산학연 추진), ③ 현장 밀착 통합 기업지원(기업집적지에 대학 현장 캠퍼스 조성하여 기업 밀착 지원), ④ 지역사회 열린대학(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지역사회 개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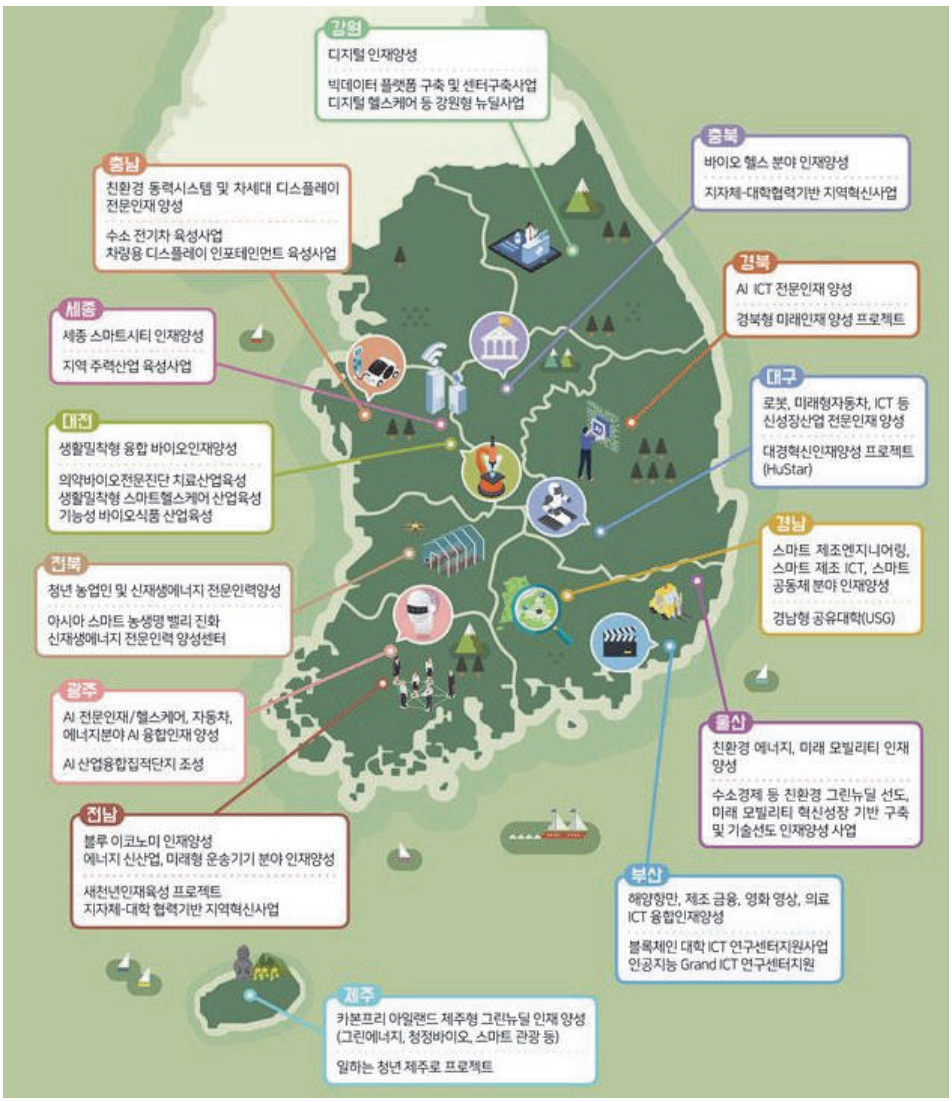
❍ 종합하면,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특성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2. 미래 정책방향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의 바람직한 미래 정책방향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긴밀한 연계가 핵심이며, 지역과 대학의 특성화 산업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지원,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해서 앵커대학과 앵커기업의 육성, 그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균형잡힌 지역 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특성화 산업을 선정할 때, 독단적인 결정인 아닌 유관 대학과의 협의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획 단계부터 협력하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아래 그림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으로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을 나타낸 것임
  - 중앙-지방-대학 모두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에 동의하고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혁신,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주요 과제 속에서 협의를 통해 도출하였음
  - 2025년까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지역별 특화인재를 운영하게 될 것이며 RISE 사업(글로컬 등) 등 연관 사업 모두 지역과 대학의 연합을 통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강조하게 될 것임

[그림 4-7]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



출처: 퍼블릭뉴스, 21.03.03. 교육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발표.

- 지방과 대학이 연합을 통한 지역 효과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고, 취업-교육 연계성을 고민해야 함

- 지역인재 유출을 연구할 때, 주로 이동 패턴에 따른 지역 효과를 유추하기도 함(이종욱 외, 2022)

[표 4-1] 대학 졸업 이동 유형과 지역 효과 추정

유형	이동 패턴					인적자원 영향	지역격차 영향
	출생(고등)	→	학업(대학)	→	일터(고용)		
역내 완결형	A	→	A	→	A	인적역량 축적	지역격차 감소
잔류형	A	→	B	→	B	인적역량 축적	지역격차 감소
회귀형	A	→	B	→	A	인적역량 유출	지역격차 심화
유출형	B	→	B	→	A	인적역량 유출	지역격차 심화
유동형	A	→	B	→	C	인적역량 유출	지역격차 심화

출처: 이종욱 외, 2022 수정 및 재인용

- 위의 표에 따르면 대졸자의 지역 간 취업이동의 유형을 '역내 완결형(completion type)', '잔류형(residual type)', '회귀형(return type)', '유출형(leakage type)' 및 '유동형(flow type)'으로 구분하였는데, 실제로 지역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유형은 역내 완결형과 잔류형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라 미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과 대학은 고등교육과 대학 및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교육 연계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함

- 중앙정부 또한 지방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혁신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앙정부는 지방과 대학의 연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참고: 해외 우수사례

□ 일본 '뉴 노멀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사례명	뉴 노멀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필요성	- 일본의 시부야시는 스마트폰으로 주민증을 신청하는 등 일본의 지자체 중 행정서비스를 최초로 디지털화한 곳 중 하나이며 복지, 교통, 환경, 안전, 산업 등의 분야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 및 관리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교육 운영, 디지털 기기 제공 등을 통해 디지털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함
주요 내용	- 뉴 노멀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New Normal)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부야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 • 1,000명 이상의 시부야시 주민들이 테스터로 활동하며 사업 성장을 위해 지원함 - 공동창작허브(Co-Creation Hub)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내 데이터를 수집·공개하고 지역과 기업, 대학 등 혁신을 창출하는 외부 조직과의 협업을 지원함 • 아이들에게는 태블릿을 제공하여 기술 교육을 실시, 어르신들에게는 스마트폰을 배포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강의하는 등 디지털화를 위한 기기 및 교육을 제공함 • 도시 내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공개하여 대기업을 비롯한, 스타트업, 대학 등 혁신을 창출하는 외부 조직과의 협업을 유도함 시부야시 Co-Creation Hub 홈페이지 
기대 효과	- 주민들이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외되지 않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기대할 수 있음 • 주민들은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교육, 돌봄,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이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선순환이 가능함 -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한 태블릿은 학생의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함 •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여 전문가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함
참고 자료	- OECD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 https://oecd-opsi.org/innovations/the-foundation-of-digital-government/

제3절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재난·안전관리 회복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1. 개요 및 현황

□ **도시화·세계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난 발생 양상 복합화 추세**

○ 기후변화의 가속화,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형·규모 면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유형과 발생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음

- 재난은 단일한 원인이나 영향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적·사회적·구조적·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고 전개되기 때문에 도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피해의 원인과 재난의 전개 과정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등장은 더 이상 재난이 국지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전환되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으며, 유형·규모 면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국가·지역의 재난 취약성과 회복력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

○ 이에 따라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패러다임은 도시 취약성을 낮추고 회복력을 향상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1970년~80년대 초기에는 홍수, 지진과 같은 막대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을 막기 위한 댐·제방 등의 구조적 대책 중심의 재난·안전관리가 수행됨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빈도를 넘는 규모의 재난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 이에 2000년대 초에는 재난을 막기보다 도시 자체가 갖는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게 됨

-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비상상황계획, 비상훈련 등이 강조됨
- 지역의 내생적(endogenous) 취약성을 낮춤으로써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잠재적 영향을 줄이고,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 주목을 받음

- 그리고 최근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임
  - 근본적인 정책적 기재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내생적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력 구축을 위한 재난위험경감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변화됨

□ 비구조적 방식의 정책적 수단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참여 강조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으며, 이에 포괄적 위험관리의 필요성과 예방과 대비가 중요하게 대두됨

- 개별재난에 대한 관리를 이행함과 동시에 재난의 유형과 상관없이 피해가 저감할 수 있는 비구조적 방식의 정책적 수단이 강조됨
  - 사전 위험식별을 통한 근본적인 위험요소 제거, 교육·훈련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정보 제공·공유 등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됨
- 또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내생적 요인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지이용계획, 환경관리정책 등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단일 부문이나 단일 기관의 역할로는 재난·안전관리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강조됨

-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는 단순한 봉사·참여의 수준을 넘어 재난위험평가, 계획수립, 경보시스템 운영, 재난 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참여와 기여가 중요시되고 있음

[표 4-2] 재난위험관리 국제 프레임워크의 변화

구분	과거 패러다임	HFA (2005-2015)	SFDRR (2015-2030)
위험인지	외생적(exogenous)	외생적(exogenous)	내생적(endogenous)
접근방법	재난에 대한 비상대응에 초점	재난위험경감을 통해 해결	근본적인 정책적 기제를 통한 내생적 문제해결
정책적 수단	재난의 효과적 대응/복구를 위한 상황계획, 비상훈련 강조	하드웨어적 측면 (조기경보시스템, 방재기술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 (도시 및 토지이용계획, 위해 저감대책, 환경관리정책 등)
우선순위	-	강력한 제도적 기반 위험식별·평가·조기경보 지식·혁신의 공유와 교육 근본적 위험요인 감소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해대비 강화	재난위험의 이해 재해위험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복원력 구축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투자 발전적 재건을 위한 재난 대비 강화
실행주체	중앙정부 주도, 국가 재난관리기관	국가 및 지방정부, 정책 결정자, 재난관리기관 및 기타 이해당사자 (민간, NGO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 (국가/지역 재난관리기관, 민간, NGO, 시민단체 등 지역 단위 주체 포함)
특징		협업과 참여 강조	공동체 파트너십 구축 포용성과 참여 강조
연관성	-	MDGs	SDGs

출처: UNISDR(2014); 오윤경(2017)

2. 미래 정책방향

❍ 전 세계적으로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위험 중심적인 접근에서 취약성 중심적인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

❍ 이에 재난·안전관리를 지속가능개발의 일부로 간주하여 장기적인 방향에서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접근방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래 재난·안전관리는 별도의 정책적 기제가 아니라 개인에게는 일상적 활동에 포함되는 요소로, 제도적으로는 도시개발·환경·문화·산업 등 모든 분야에 당연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환경관리정책 등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를 고려해야 함

❍ 재난·안전관리의 주체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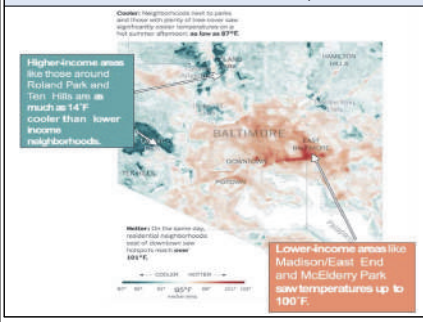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재난안전관리의 주체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마다 특화된 재난 유형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고민하되, 지역주민들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해가야 함
-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진흥 운동 등이 지속되어야 함

❍ 개발되는 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높여가야 함

- 센서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은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위험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통신기술의 발달은 재난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함

※ 참고: 해외 우수사례

□ 미국 '볼티모어 Smart Surface 도시 지표'

<table>
<tr><th>사례명</th><th>"스마트"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스마트"한 도시 되기: 폭염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지표 관리, 경제적으로도 "스마트"</th></tr>
<tr><td>필요성</td><td>- 녹지가 부족한 볼티모어 시는 미국 최악의 폭염 도시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볼티모어 시의 녹화율은 27%로 권장률인 4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 볼티모어 시처럼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아스팔트, 건물, 도로에 태양 복사열이 축적되면서 만성적인 핫스팟이 형성되며, 핫스팟에서는 주변지역에 비해 보통 화씨 9℉(약 섭씨 5℃) 이상 덥기에 폭염이 가중됨</td></tr>
<tr><td>주요 내용</td><td>- 2019년 창립된 미국의 스마트 도시지표 관리연합(Smart Surface Coalition)은 볼티모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한 도시지표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음
• Madison East End와 같은 저소득 지역은 부유한 지역, 주로 Roland Park와 같은 백인 지역보다 여름에 최대 14°F 더울 수 있음
• 따라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지표가 열악한 볼티모어의 동부와 서부 지역에 우선적으로 스마트 도시지표 관리 방안 도입을 제안함
- 볼티모어는 Smart Surface 목표 및 분석 기간 설정에 시의 2040년 나무 캐노피 목표와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함함
• Smart Surface 채택 시 발생할 비용과 이점에 대한 매핑 및 분석은 볼티모어의 저소득 지역인 Brooklyn Curtis Bay, Cherry Hill 및 Madison East End의 세 곳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에서 수행함
- Smart Surface 솔루션은 도시 환경을 식히고 에너지 요금을 줄이기 위한 반사형(냉각형) 지붕, 빗물 유출을 줄이고 도시 환경을 식히고 에너지 요금을 줄이기 위한 녹색(식물형) 지붕,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옥상 태양광 발전(PV)을 포함함
- COVID-19 대유행 이후 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의 열과 홍수를 줄이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임
<table>
<tr><th>볼티모어 Heat Map</th><th>Smart Surface 지표 적용 사례</th></tr>
<tr><td>
</td><td>
</td></tr>
</table></td></tr>
</table>

사례명	“스마트”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스마트”한 도시 되기: 폭염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지표 관리, 경제적으로도 “스마트”
기대 효과	- 도입 후 여름 기온은 평균 2.5℉(약 1.4℃) 감소하고, 가장 열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4.5℉(약 2.5℃)까지 기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적으로도 20년간 초기 투자비용 대비 10배가 넘는 130억불(13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30년 간 1,700만 톤 규모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됨.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저소득 지역에서 Smart Surface를 광범위하게 채택함으로써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경북연구원(2021). 「DGI 글로벌 경제진단 13호(2021-04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지역의 대응방향” - Smart Surfaces Coalition(2022). *Cooling Cities, Slowing Climate Change and Enhancing Equity: Costs and Benefits of Smart Surfaces Adoption for Baltimore.*

제4절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1. 개요 및 현황

□ **건강보험제도에 기반한 높은 의료서비스 질과 안정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 심화, 신종 질병 발생 등 변화에 따른 리스크 존재**

○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제도에 기반하여 전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은 편이며, 의료공급자 선택의 자율성이 높고 보건소 등의 지역사회 1차 공공의료망이 잘 갖춰져 있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질병구조 변화는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비용상승을 유인하여 수요자 측면의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2019년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8.0%로 OECD 회원국 평균(8.8%) 대비 낮은 수준이나,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정성희·문혜정, 2021)

□ **지역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지역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이 인프라와 서비스 양면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음**

○ 그간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재정 안정화를 통해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려는 등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에 많은 노력을 진행함

- 그러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높은 편에 속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제공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의 포괄적 의료·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임
  - 의료공급자의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미흡하며, 보장성이 낮고 민간 재원의 의존도가 높음

- 높은 환자 본인부담금은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구의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평등함을 넘어 불공평함(OECD, 2010)

❍ 또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대형병원·시설의 대도시 편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환자 쏠림 현상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 간 의료불평등은 인프라와 서비스 양면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

□ 메르스(MERS),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보건의료체계와 자원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종 위험이 발생

❍ 메르스(MERS),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신종·대형 감염병의 발생은 공중보건 위기(public health emergency)를 초래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취약성이 크게 드러나는 계기가 됨

- 2014년 발생한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는 병원감염과 감염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초기 정부·지자체의 방역기능이 무력화되었으며, 병·의원 내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에 부재하여 지휘체계·환자관리 등 종합적인 대응과정의 혼란과 문제가 발생함
- 2020년 우리나라에 첫 발병자가 발생한 코로나19의 경우 초기 해외입국자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초동대응에 실패하였고, 과도한 불안감속에서 마스크 대란이나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
- 또한 급속한 감염자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의 마비, 중증환자·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됨
- 두 사례 모두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하였으며, 잠재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사회활동이 극도로 위축됨

2. 미래 정책방향

❍ 향후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정책은 인간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소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평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건강의 최소 수준을 확보하고 지역·계층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 이는 지역 기반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적 재정 능력과 장래의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보건의료환경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인력 및 자원의 확충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사회적 비용과 시민건강을 위해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촉진하고, 예방접종,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의료기관과 관련기관들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연동·공유하여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가 변화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연계·협력을 위해 데이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보급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 필요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진단·치료연구 등을 통해 의료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와 텔레메딕신이 강화될 것임
  - 텔레메딕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거리를 초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의미함
- 원격 진료, 거주지에서의 건강 모니터링, 건강 앱을 통한 자가 진단 등을 통해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이에 기술 활용 능력 격차에 따른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체계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해외 우수사례

□ 미국 위스콘신주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

사례명	미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
필요성	-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치매환자는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이 저하되어 사회적으로 치매 돌봄비용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 법National Alzheimer's Project Act, NAPA」 발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돌봄자의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6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함 • (1) 2025년까지 치매 예방 및 효과적 치료, (2) 치매 환자와 돌봄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 (3) 치매 환자와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 (4)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대중 참여, (5) 진행 상황 추적 및 개선, (6)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치매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 가속화 - 치매 친화 지역사회 툴킷(Dementia Friendly America Community Toolkit) • 1~3개월 동안 치매와, 치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실행팀을 소집 • 2~6개월 동안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치매친화를 위해 해당 지역사회의 강점과 약점 명시 • 1~2개월 동안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표들을 선정 • 구체적인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 전략 수립, 정기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결과 공유 • 치매 친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진행과 효과를 측정 및 평가, 결과 공유 • 위와 같은 모든 단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며 전화, 오프라인 만남 등의 방법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함 - 위스콘신주 Healthy Brain Initiative(HBI) 프로젝트 • Memory Café 사례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 있는 카페, 도서관, 식당, 박물관, 교회 같은 곳에 모여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치매 전문가가 적어도 한 명 참석하는 가운데 운영됨 • 해당 모임에서는 치매 환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돌봄자의 고립감, 무력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함 • 위스콘신주 내 33개의 카운티와 Project Lifesaver라는 지역단체가 협력하여 치매 환자 배회,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
기대 효과	- 지역의 자원, 치매 인식도, 노인인구 수, 치매 환자 수, 주민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 - 지역 운영위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미국치매친화협회DFA와 같은 민간기구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기관, 시설, 단체들의 조력을 기대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박수빈(2023). 미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여름), 129-134. https://doi.org/10.23063/2023.06.11

제5절 (자치역량과 책임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1. 개요 및 현황

□ 지방자치 30년의 평가

❍ 지방자치의 역량진단은 지방자치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분권수준과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수준을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우선, 국가와 지방간의 분권수준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지방과 지방 간의 균형수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인구규모와 재정자립도, 수요분포 및 인구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수준을 진단하고자 함

□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권한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협의로 조례제정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함(금창호 외, 2016)

❍ 자치입법권의 근간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전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규칙의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와 규칙의 위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할 수 없도록 하여 계층 간 위계를 적용하고 있음
-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일본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로, 영국은 “법률에 준하는 범위”로, 그리고 미국은 법률제정권을 부여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에 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조례를 통한 주민의 기본권 제한은 미국과 독일 제외하고는 동일하며, 벌칙제정권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한국의 자치입법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치행정권

❍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함
- 자치행정권의 대상사무는 협의의 관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를 의미하나, 광의의 관점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간주되고 있음(금창호 외, 2016)

❍ 2020년 현재 법령상의 국가사무 총 규모는 61,075개로 원처리권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사무가 50,564개(71.6%)이고, 지방사무가 17,321개(28.4%)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율이 1994년 13.4%에서 2013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32.3%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면서 2020년 현재 28.4%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중이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증감을 보이면서도 당초보다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자치조직권

❍ 국가별로 자치조직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기구설치와 정원책정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대통령령을 근거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일본은 기구설치와 정원책정을 원칙적으로 자율화하되 직제변경 신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구설치는 자율화하고 정원책정은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표 4-3] 자치조직권 수준

구분	조직관리 방식	행정 지표
한국	기구 및 정원의 부분통제	-(기구) 본청의 실국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결정 -(정원) 지자체별 기준인건비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성 부여
일본	기구·정원 자율화, 직제변경 신고 및 참고지표만 제시 (간접적 통제)	-(기구) 조례로 자율화, 표준모델을 제시, 직제 변경시 총무대신에게 신고 -(정원) 총무성에서 참고지표로 적정 정원 제시 • 회귀분석(인구, 면적), 유사단체비교(주민1인당 공무원수), 라스파이 레스지수(중앙-지방 급여수준 비교)
영국	기구 자율화, 정원은 간접통제 (간부층 규모 등)	-(기구) 수석행정관 권한, 운영예산 절감이 결정 기준 -(정원) 지자체 권한, 인건비가 주요 결정 기준 • 중앙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간접 통제 가능

□ 자치재정권

❍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임

-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동시에 그 재산을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을 실행하는 관리작용을 포함하는 것임(금창호 외, 2016)

❍ 2018년 기준으로 국가 대비 지방의 세입 및 세출의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세입을 기준으로 국세가 77.5%임에 비하여 지방세는 22.5%이고, 세출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39.5%임에 비하여 지방교육을 포함한 지방은 60.5%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

❍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은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 이러한 역량의 집적화는 수십 년간 지속된 행정학의 중요한 현상이자 연구 주제로 행정체제의 물리적 개편을 통한 연계협력의 구조변화 시도에 집중되어 있음

-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대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할시(광역시)의 설치와 도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 인정을 통해 광역행정의 분절성이 심화되었다는 문제인식이 존재함

2. 미래 정책방향

□ 중앙과 지방 간 정부간 관계의 재설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관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의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헌법 및 법령의 개정
- 현행 헌법 및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국가와 중앙정부를 동일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예속된 관계로 설정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표현하도록 헌법 및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곧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행정적 관계에서 수평적, 법률적 관계로 전환함

❍ 관여법정주의 채택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는‘법률’또는‘법률로 위임된 시행령’에 의한 경우만 인정(관여법정주의)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관여 수단인 ‘지도’를 삭제하는 등 중앙정부의 관여를 축소함

❍ 자치단체 사무 관련 사전심의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부담을 주는 사무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사무구분 및 배분, 국가관여, 재정부담 등에 대해 필수적 사전 심의가 필요함

❍ 행정계약체계(정부간 계약방식)의 신설·보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수평적, 법률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계약이 활성화되어야 함
- 민사상 계약과 다른 행정계약의 법적 성격과 효과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1) 자치단체별 비용 및 조건 등 차별 허용 범위, 2) 계약 불성립 시 강제성 허용 여부, 불이행 시 이행방법, 3) 사무처리 중 분쟁발생 시 소의 종류, 사무처리 거부 시 민원처리 주체 등에 대한 법적 장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조례의 위상 강화
- 현행 자치법규 체계인 조례와 규칙은 중앙정부 법령의 하위 법체계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나, 이를 자치법률, 자치규칙으로 표현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함
- 사무수행주체만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식에서 사무수행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지방 차원에서의 사무수행의 현지 적합성을 제고하도록 함

□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초광역화

❍ 광역의 효율성과 기초의 민주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조 재편이 불가피함

❍ 중앙의 비대화, 지방의 왜소화로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면 고령화도 지방이 훨씬 빨리 진행되고 저출산도 더 심각한 형편으로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일차적인 방향인바 선제적으로 기능별 초광역화가 필요함

❍ 기능별 광역화 모델은 지역의 힘이 국가의 힘인 시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에 적합한 올바른 국가·지방발전모델일 수 있음

□ 맞춤형 분권 추진을 위한 차등적 분권 방식

❍ 포괄적 접근 vs. 기능적(부분적) 접근 vs. 개별적 접근
- 포괄적 접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동일한 계층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를 유형화

하고, 유형별로 수행기능에 차별을 두는 것(우리나라의 인구 50만 이상 시, 인구 100만 이상 시, 자치구에 대한 특례, 일본의 특례시와 중핵시, 미국의 선택헌장제도가 대표적)

- 기능적 접근: 특정한 기능에 한해서 자치단체의 정책수행능력과 의지를 고려하여 권한이양에 차등을 두는 것(미국의 부분선점권제도, 일본의 지방분권 특례제도가 대표적)
- 개별적 접근: 개별법에 의해 자치단체간 기능배분에 차등을 두는 것(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 미국의 특별헌장제도, 영국의 개별법을 통한 개별적 수권 방식이 대표적)

□ 주민 중심의 소규모 지역기반 자치의 확대

❍ 전국에 걸쳐 획일적이고 기관(공급자) 중심의 중앙과 광역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 역할에서 벗어나 소도시 수준의 지역단위(commune: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모여 함께 살며 공동의 이익, 재산, 소유,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주민자치가 강화될 전망임

- 반면 권력기관으로서의 수도권 중심 광역정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전망이며 도관(conduit) 역할 중심의 광역자치단체는 소멸하고 서비스 및 분쟁조정 기능으로 재편해야 함
- 인구가 소멸되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단위 자치도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지역은 준광역단위(county level)를 통해 필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모든 기업과 기관과 도시가 실물세계와 디지털세계의 융합을 추진하고 디지털 트윈이 보편화되는 환경을 감안하면 초연결사회의 지방자치의 모습도 제도 자치가 아니라 생활자치, 주민이 행복한 마을 단위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주민자치의 획기적 변화

❍ 유권자로서의 시민 역할 확장

- 정책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통합한 헤테라키(융합)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NIA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6)]

❍ 시민참여 다양화 및 통합 추구
- 기존의 투표 방식 이외에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예)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국민청원을 통해 새로운 법안 마련
-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주민의 참여가 다양성을 포괄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

❍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간 연계 강화
- 주민자치의 강화는 곧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며 책임지는 구조의 구현이 필요함
-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기초 단위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소통·견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곧 마을 단위 주민자치가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계되어 의결권·집행권·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6) 「글로벌 미래전략」

※ 참고: 해외 우수사례

□ 콜롬비아 '보고타 공공 공간 공동창조'

사례명	지역의 가치와 미래상을 반영한 공공 공간 공동 개발: 보고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공공 공간 공동 창조
필요성	-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가치 있는 공공 공간 조성이 부재한 상황임 - 기업의 사회관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지역 내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 디자인 세션을 통해 지역 정체성이 어떻게 대중적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고 디자인 제안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공공 주도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도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함 • 보고타는 급속한 도시화와 불균등한 공간 개발로 인해 지역 전체 면적의 23%가 불법 도시화와 중심지 편중 현상을 겪고 있었으므로 도심지역 회복을 위한 개발 관련 정책이 시급하였음 -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토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최종 수혜자, 즉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과 더불어 국민주택기금 동네개선팀 전문가들의 경험, 거주자의 이동권, 휴양, 사색과 소통을 위한 동네 등으로 공공 공간을 구상함 • 디자인의 범위와 방법론 등의 컨셉을 잡고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민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건축, 엔지니어링, 디자인, 예술, 사회사업, 전통 공예의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음 - 지역특성을 반영한 보고타 지역의 도시재개발 사례로 페니시아를 들 수 있음 • 페니시아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을 위해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해 지역 주도의 개발 기회를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임 • 지역 내 교육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으로 진행되었음. 지역사회와 함께 관련 워크숍 등을 개최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높이고 주거·상업·공공 시설 등이 복합된 사업으로 개선되었음 페니시아 도시재개발 사업 대상지 전경 및 공동공간 조성 

사례명	지역의 가치와 미래상을 반영한 공공 공간 공동 개발: 보고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공공 공간 공동 창조
기대 효과	-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포장 도로 및 우수한 접근성 외에도 안전, 편안함, 삶 및 각 지역의 지역적 요소를 촉진하는 공공 공간 조성을 추진함 -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체계적인 계획에 기반한 도시개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도모함 - 수익성 위주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재정착 지원과 지역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을 구상함
참고 자료	- OECD(2021).「OPSI」“보고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공공 공간 공동 창조” - 국토연구원(2019).「해외동향 해외리포트」, “콜롬비아 보고타(Bogota) 도시재개발 사례와 시사점”

제6절 (디지털혁신 생태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문제해결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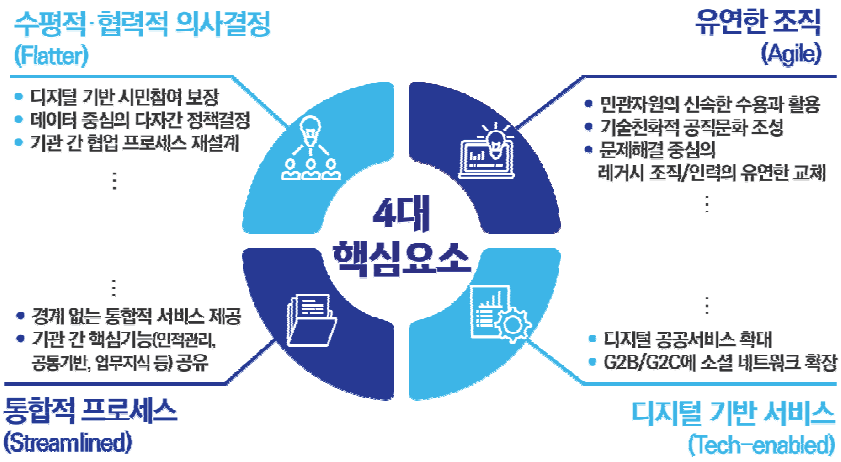
1. 개요 및 현황

❍ 정보사회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연결되어 방대한 데이이터 분석으로 공공·산업에서의 지능 서비스 혁신을 초래할 것임

❍ 2020년을 전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추세가 지방정부까지 확산 및 가속화될 전망임

- 첫째, 디지털로 보다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참여 보장
- 둘째, 기존 레거시 인력과 조직구조 대신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공직문화와 운영체계 혁신
- 셋째, 서비스 간 및 기관 간 통합적 자원공유와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넷째,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현

[그림 4-8]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방정부의 4대 핵심 요소별 미래모습



❍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의 전략적 방법론이 확대됨
-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시민참여, 국민주권,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나 지방분권화의 흐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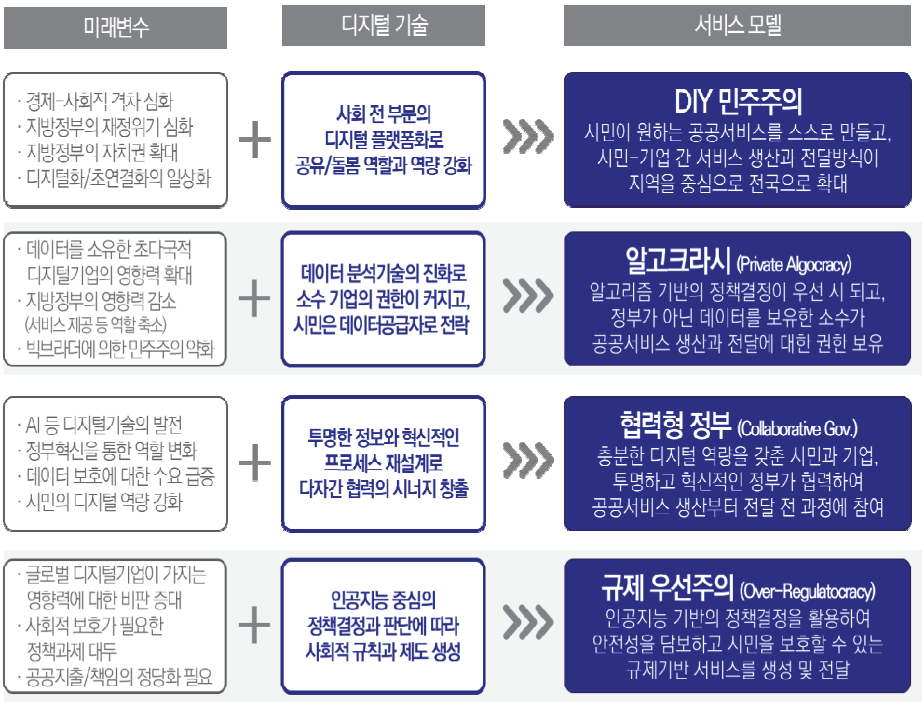
❍ 문제해결의 리빙랩, 플랫폼을 통한 참여의 공간 조성이 중요함
- 리빙랩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생활공동체 속에서 연구와 혁신체계를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임
- 이는 일반적으로 신기술, 신제품, 서비스 혁신을 위한 솔루션 개발과 사용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실험 참여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부터 ICT와 IoT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실사용자인 시민이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는 참여플랫폼으로 제안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 사회분야로 확산되고 있음

2. 미래 정책방향

□ 지방행정에 있어 지능정보기술의 결합

❍ 사회·경제 전반으로의 지능정보기술의 도입·활용 확대, 즉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저성장 고착화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DIY 민주주의 모델과 협력형 정부 모델의 경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자유로운 디지털 플랫폼 기능과 혁신적인 프로세스가 발현되도록 해주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그림 4-9] 지방정부의 4가지 새로운 서비스 모델



자료: 'EU (2019). The Future of Government 2030+'을 참조하여 재작성

-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영역 혁신은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 증대하는 사회비용 절감 효과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 중심 시민사회 공간과 주민자치 연계

❍ 온라인 플랫폼 형식의 활동 분야 매칭을 통해 시민사회 공간 창출이 필요함

- 공간 및 거점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중심 시민사회 활동에서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온라인 중심 시민사회 활동으로 변화하여, 인권, 교육, 빈곤 등 각 분야 시민사회 활동이 온라인을 거점으로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분야별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형식의 활동 분야 매칭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방정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참여를 강화하여 지역 단위 다양한 사안을 지방의회에서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민청원'을 통해 「민식이법」 등이 의제화되는 것처럼 향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안별 의제화가 강화될 것임
-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참여가 아닌 지역 차원의 사안을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제화되는 사안들이 지방의회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조례를 통해 의무화 조항의 규정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기술발달이 시민의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을 편리하게 도울 것임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 발달로 인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변화함
- 즉, 기존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책의 결정·집행·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공동 창안자로 대체됨
- 각종 기술 발달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생산·전달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임
  -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의 결합을 통해 전문가의 지원 하에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 내에서 중증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함
- 스마트시티 정책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달과 시민들의 참여를 결합하여 도시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시민이 적극적 주체로 나서는 과정을 포괄함
  -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 및 계획 내에 반영됨

※ 참고: 해외 우수사례

□ 스페인 '플라자 마요르'

사례명	완전한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통한 민주적 가치 강화: 시민참여 프로젝트 '플라자 마요르'
필요성	- 완전한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발생가능한 불평등이나 기존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	- '플라자 마요르'는 공공행정이 시민들의 제안을 수집하기 위해 활용하는 혁신적인 다채널 시민참여 프로젝트임 • 전체 아스투리아스 인구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면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참여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교육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였음 • 웹페이지 사용, 아스투리아스의 여러 도시(Oviedo, Gijón, Avilés, Pola Siero, Mieres, Llanes, Navia, Ribadesella 및 Luarca)에 위치한 에이전트의 존재 및 소셜 미디어 계획이 포함됨 - 제안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공공 부문 정보(RISP)의 재사용을 주요 전제로 하는 체계적인 분류 방법론을 확립하였음 •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자는 행정당국으로 시민들의 제안을 수집하는 기회를 가졌음 • 또한 공공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요소로서 시민의 권한 부여를 촉진하고 사회 서비스를 위한 공공 정보의 재사용을 개선함 • 협의회는 전체 지역 영토에서 거의 2,000개의 제안을 받았으며, 아스투리아스 사회 또는 이 참여자 그룹을 잘 대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 소득 수준 또는 거주 협의회와 같은 일련의 질문이 등록 양식에 포함함 • 정보 재사용을 위해 제안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의 개발과 중장기적 유용성을 향상시킴 아스투리아스 시민참여 데이터 수집 홈페이지 
기대 효과	- 시민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 혹은 불평등 등 기존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 - 활용된 정보분석 방법은 행정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며,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자료	- OECD(2022). 「OPSI」 "시민참여 프로젝트 '플라자 마요르'" - 아스투리아스 시민참여 홈페이지(http://www.asturiasparticipa.es/#1)

제7절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1. 개요 및 현황

□ 완전무상교육 개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논의 심화

❍ 무상교육에 대한 이슈는 유아교육, 보육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유아의무교육, 유아무상교육, 유보통합, 학제 개편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OECD 국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각계각층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음(육아정책연구소, 2021)
  - 이러한 논의는 결국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률 감소 경향 심화 및 미래 교육 체제 개편 논의 등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학계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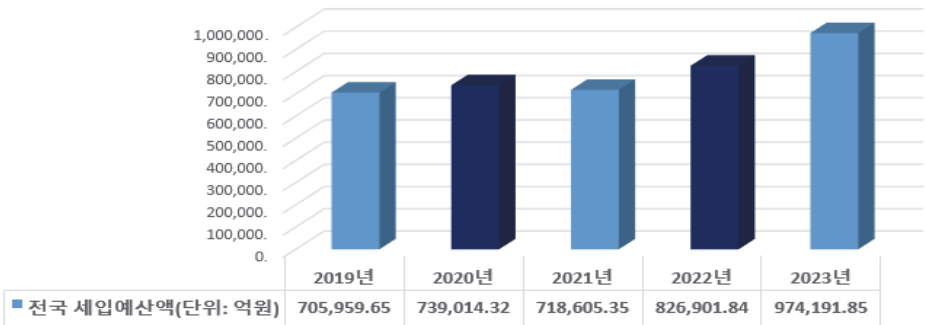
❍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재정 축소에 관한 논의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반등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완전무상교육에 대한 주장도 나타나게 되었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2)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추가 예산 소요를 추정했을 때, 2023년 약 19조 6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22조 2천억 원으로 약 2조 6천억 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방재정 축소와 맞물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나타남으로써 국가책임교육을 통한 완전무상교육 추진이라는 주장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재편에 대한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쟁점

○ 지방교육재정 규모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21년도에 일시적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2년도와 '23년도에 이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10] 지방교육재정 규모 및 추이('19-'23년, 당초)



출처: 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portal/main.do)

- 내국세와 연동하여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한 영향이며,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증가하여 이와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차입 및 기타 항목으로 세입이 구분되어 있음

- 지방교육재정 중 교부금은 내국세수와 연동되어 있어서 학령인구를 반영하거나 교육 실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교육의 재원배분 관점에서 개편 논의가 나타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교부금과 교육세분교부금으로 재구분되며 내국세 총액의 20.79%, 국세 교육세(개별소비세액 중 일부, 교통세액의 일부, 주세액의 일부 등) 중 일부를 통해 조성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쟁점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2)에서 3가지 정도의 쟁점사항을 정리하였고, 앞선 언급한 것처럼 미래교육 재정 수요를 전망하여 오히려 추가적 재정 소요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음

- 첫째,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증가해야 하는가?, 둘째, 교육재정의 늘어나는 기금으로 인한 불용액과 비효율, 셋째, 이미 한국은 교육 예산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상위권이다라는 쟁점으로 요약하여 이에 대한 반박 분석을 진행하였음

❍ 종합하면, 현재 출산율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논쟁 중임

- 또한 현재 교육비특별회계로 별개로 운영되는 교육재정을 지방재정과 통합하는 안이 나오는 등 교육재정에 대한 구조와 배분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미래 정책방향

❍ 한국의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이에 따른 명확한 미래교육 재정 수요를 전망하여 적절한 수준의 교육재정 추계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혁신 등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인적 자원 양성 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야 함
  - 특히 미래교육을 위해 “①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회복, ② 교육여건 개선, ③ 미래교육 기반 구축, ④ 포스트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로 세부 사업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22.11.11.‘국가 책임 교육 실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

[표 4-4] 미래교육 영역별 사업 내용(예시)

영역명	사업내역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회복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특수교육지원, 학생 심리·정서회복, 학생 건강 증진 지원, 국제교육·다문화교육, 학교급식운영, 대안교육, 학교 밖 지원, 국가정책사업 안정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학교 신·증설, 과밀학급 해소, 유아 공교육 확대, 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교육과정운영 지원, 미래형 고등학교 재구조화, 직업교육 운영 및 환경개선 등
포스트 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학교 등 노후 시설 개선, 아이놀이터 조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공간 조성 등

출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2022.11.11.)

- 미래교육의 세부적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명확한 재원 산출 근거를 도출하는 것이 쟁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임

- 무상교육에 대한 대국민 정서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임
  - 끊임없이 진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습 기회의 영역 대 효율성(경제성) 영역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무상교육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voice)가 존재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공청회, 공개 포럼, 세미나, 학계의 노력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교육재정 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적 관점 하에서 갈등을 최소화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 교육재정이 더 소요될 것인가, 학령 인구에 따라 재편할 것인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이슈는 한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임
  - 그러나 이를 추진할 경우 중앙에 의한 결정(top-down),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 없이 변화하거나 혹은 여론몰이에 의한 단순·즉각적 결정은 피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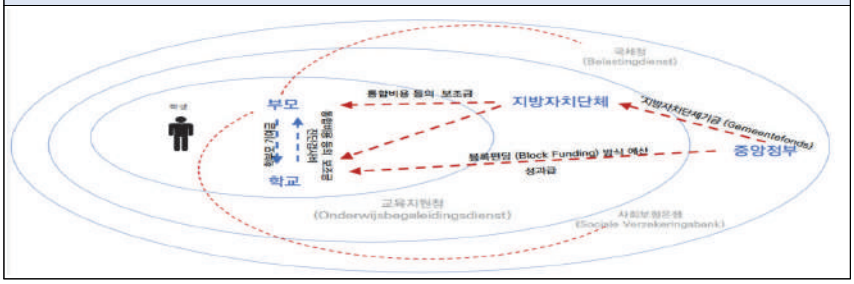
- 교육재정 구조 개편은 첨예한 이해당사자들, 그 파급효과는 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논의에 대한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핵심임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통합 논의 또한 구조 개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참고: 해외 우수사례

□ 네덜란드 '학생 통합 맞춤형 교육재정 운영 사례'

사례명	공정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 조성: 학생 통합 맞춤형 교육재정 운영 사례
필요성	- 성과 기반의 정책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습자를 둘러싼 통합적 관점에서의 교육재정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함
주요 내용	- 네덜란드의 교육재정 전달체계는 통합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불가산적인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교육재정을 산출함으로써,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교육의 질 담보 및 책무성이 강화되며,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교의 선택권이 넓어져 교육의 다양성을 누릴 수 있음 - 교육재정 부담 주체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교육 재정 및 서비스 지원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을 지원 받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됨 • 중앙정부가 정부와 교육기관 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지방정부도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투자를 보완해 교육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킴 - 네덜란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학생통합 맞춤형 교육재정을 운영 중임 • 영유아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선택, 각종 검사/진단비 지원,아동을 지도하는 교원들 대상으로 보금 지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시 지자체가 승인 및 재원을 지원함 • 초등학교에 입학 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블록펀딩을 통해 교육재정분야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함 • 중등교육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받으며, 지출에 대한 부분은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교사 인건비, 고용조건에 대한 협상 사항은 지방정부로 일정 부분 이양됨

사례명	공정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 조성: 학생 통합 맞춤형 교육재정 운영 사례
	•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다른 교육단계들과 같이 인건비, 교육 재료비, 기숙사 비용 등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배분된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지출할 수 있음 유·초·중등교육단계에서의 재정지원 구조 
기대 효과	- 교육재정 측면에서 재정분담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포스트 코로나와 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 가능함 -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통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음 -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참고 자료	- OECD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제8절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균형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

1. 개요 및 현황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목표

❍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자원 고갈, 인구구조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목표에 동참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글로벌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환경보호와 자원 보전, 사회적 포용성을 강조하는 그린 인프라, 친환경 도시개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UN SDGs는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의 환경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한 해결과 그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공동목표라 할 수 있음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UNDESA) 산하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DSDG)는 물, 에너지, 기후, 해양, 도시화 등 SDG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역량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의제는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써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 유지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가 수준의 이행 검토를 이끌어 내야 하며, 적절한 정책 공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임

[그림 4-11]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출처: United Nations 홈페이지(https://sdgs.un.org/)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미래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음

-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물 서비스 품질 제고,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과제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역의 녹색경제 생태계 강화, 지역의 환경보호와 자연 생태계 보전, 자원 관리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개발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적용해보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자연환경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은 목표하는 범위와 규모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자원 관리와 협력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또한 지역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지역의 총합이 국가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뒷받침 없이는 이룩할 수 없음
-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음

2. 미래 정책방향

❍ 자연환경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한 개념과 요구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신성과 균형을 통한 지역성장,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은 미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큰 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이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러한 가치 간의 연계와 실현이 강조될 수밖에 없음
- 자원보전, 친환경 지역개발, 그린 인프라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균형,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전환, 지역의 녹색경제 생태계 강화, 지역자원관리와 지역균형발전, 지역 수준의 역할 강조, 국가-지역 수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여야 함

❍ 환경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균형 유지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자연환경과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 자원보전, 친환경 지역개발, 그린 인프라 등의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도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들을 수립하여야 함

❍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전환
-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경제 전환을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교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동시에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역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지역의 녹색경제 생태계 강화
-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 생태계 조성은 지역개발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녹색기술의 연구 및 적용을 촉진하고,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혁신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함

❍ 지역자원관리와 지역균형발전
- 지역 내 자원관리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통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여야 함

❍ 지역 수준의 역할 강조

- 국가 수준의 정책 이행, 즉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지역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역 수준의 정책 공간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함

❍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의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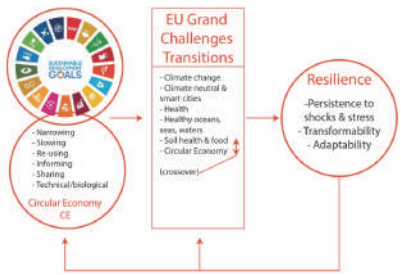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의 발전이 국가적인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 간의 연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국가와 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역의 특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하여야 함

❍ 혁신적이고 균형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게 되면, 다가올 미래에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 해외 우수사례

□ 아일랜드 'FRELLA 사례'

사례명	상향식 혁신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회복력 강화: 아일랜드 FRELLA
필요성	- 전 세계의 지역사회는 순환 경제(CE)를 포함하여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EU의 사회적 대과제(GSCs)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 - 대규모 전환에는 전략적 혁신 실행 계획을 위해 적용하기 쉬운 새로운 기술과 상향식 거버넌스 모델의 투입 및 가용성이 필요하며, 숙련된 지방/지역 정부 및 커뮤니티 기반 "전환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
주요 내용	- FREIIA 프로젝트의 목표는 GSC/SDGs에 중점을 두고 공공 부문이 혁신적 정책과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자원, 역량, 역량 및 구조를 만드는 것임

<table>
<tr><th>사례명</th><th>상향식 혁신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회복력 강화: 아일랜드 FRELLA</th></tr>
<tr><td></td><td>• 질적으로 새로운 FREIIA 접근 방식은 단순(엔진 + 바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구적인 섬들의 경험과 교훈을 모델링하고 더 많은 잠재적인 '전환가' 그룹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궁극적으로 (1) 상향식 혁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2)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개선된 혁신 거버넌스 모델, (3) 보다 강력한 복원력을 위한 전환 기술 및 역량 향상, (4) 500명의 숙련된 '전환가' 및 '공동-전환가'로 이루어진 선구적인 그룹, (5) 디지털 전환 학습자료, 그리고 (6) 전환을 위한 구조적인 새로운 초국가적 협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Fryslân 지역은 다른 유럽 5개국의 파트너와 함께 상향식 혁신을 촉진 및 촉진하고 지역 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혁신 모델(소위 Tipping Approach)을 개발함
• 혁신적인 도구로서의 팁(TIPPING)은 혁신의 섬 모델에 따라 도서 및 유사한(많거나 적은) 고립된 지역에 대한 거버넌스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별 액션 플랜 개발에 사용될 예정임
• 휠에는 8개의 주요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또는 미래의 정책을 조합하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함
<table>
<tr><th>FRELLA 프로젝트 개념 및 구상도</th><th>TIPPING Wheel</th></tr>
<tr><td>
</td><td>
</td></tr>
</table></td></tr>
<tr><td>기대 효과</td><td>– 모든 파트너의 공동 참여와 함께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이니셔티브와 리더십을 자극하여 지역/지역 CE의 개발 및 가속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
– 하향식 EU GSC의 맥락에서 상향식 접근방식을 형성함
– 정부의 다양한 수준(다단계 거버넌스)을 연결하고 접근 방식의 다양성을 활용하고 문화적 차이를 통합하여 EU 국가의 관점에서 학습이 가능함</td></tr>
<tr><td>참고 자료</td><td>– OECD. (2022). 「OPSI」 "FREIIA, 아일랜드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회복력 강화"
– Rotterdam, Netherlands. (2019). 「The Innovation Program's Perspective for the New Governance of Islands TIPPING GUIDE」. (www.fryslan.frl/islandsofinnovation/)</td></tr>
</table>

KRIL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제5장

결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과제

제1절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제2절 결론

제5장 결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과제

제1절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미래 지방행정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도입, 실행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이양이 전제되어야 하며, 예산·인력 등 각종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구 및 기술혁신에 투자하고,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여 미래의 사회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원을 제공하여야 함
-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다양한 미래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미래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인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인종, 성별, 장애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필요함
- 미래사회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와 다양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미래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친환경 기술과 실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 미래에는 글로벌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 내에서도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노력들은 미래에 대비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표 5-1] 지방행정의 도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정부 및 공공정책의 변화	•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도입, 실행 •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및 기능 이양 • 예산·인력 등 각종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과학기술과 혁신의 촉진	• 연구 및 기술혁신 투자 •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 촉진 • 과학기술·혁신 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원 제공
역량과 교육 강화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 • 다양한 미래 직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민간자원의 적극 활용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 증진	•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 •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조직문화 조성 • 정책수립에 다양성 반영
주민참여와 사회적 연대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연대 강화 • 다양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 공동창조 활성화 및 정부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활성화 • 친환경 기술 및 실천 촉진, 참여 및 홍보활동 강화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정책 수립
글로벌 협력과 국제사회 참여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활동 참여 활성화 • 국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력을 위한 지역 내 노력 활성화 • 국제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자원 제공

❍ 이와 같은 지방행정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의사결정역량 제고, 문제해결역량 제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표 5-2] 지방행정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구분	주요 내용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 집단지성을 통한 글로벌·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입안 • 정부 정책 연속성 강화 • 미래예측 연구에 기반한 정책결정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 빅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 정보의 복잡성·다양성에 대응하는 열린체계 구축 • 전자정부 시스템의 적극 활용
의사결정역량 제고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활용(집단지성 시스템 연계) • 전문가-대중의 의사소통 시스템 개발·운영 •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제해결역량 제고	•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와 행동 • 창의성과 혁신성 강조와 실현 • 능동적·미래지향적 대응 역량 제고
공정한 의사결정	•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공정성 제고 • 사회적·집단적 책임감 제고 • 사회·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

제2절 결론

❍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미래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적인 논의 수준을 지방행정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며,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미래 트렌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발표되고 있으나, 국가 전체차원의 분야별 트렌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였음
- 특히, 정책 현장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계적·국가전체적인 측면의 미래환경변화와 트렌드, 요구되는 과제들에 있어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현실 가능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음
-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기회로 삼아 현실의 정책이나 사회적·지역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관련된 데이터와 지식을 축적하며 정책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음

❍ 또한 지방행정의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전망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미래 지방행정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는데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 개선, 선도적인 대응을 정책방향 설정 등에 대한 전략적인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

❍ 불확실한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행정서비스 개발을 고민하여 실험·응용하며, 실용 가능성을 발견하고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지방행정의 미래방향성과 이를 위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과제들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특히, 정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참고문헌

강나래. (2022).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를 위한 법조항개정 검토. 「치안정책연구」, 36(4): 251-284.

강병희·양지훈·정필운. (2021). 사회참여와 연결한 입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법과인권교육연구」, 14(3): 99-124.

강희영.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12(2): 45-93.

경북연구원. (2021).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지역의 대응방향. 「DGI 글로벌 경제진단」, 13: 11-13.

고경일.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사례 및 시사점. 「경영컨설팅연구」, 21(4): 461-470.

고대유. (2022). 공정성과 사회갈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 147-170.

고서연·손승현. (2023). 코로나19 발생 전후 초등학교 3, 4학년의 수학 학업성취도 변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6): 445-460.

고윤성.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세 정책 개선방향. 「조세연구」, 20(1): 125-156.

공택욱. (2023). 농촌 생활 영상 콘텐츠에 담긴 농촌 힐링 관광의 개발 가치: 중국 틱톡 사례를 중심으로. 「콘텐츠와산업」, 5(2): 87-94.

곽진선·공득조. (2022).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인 학습 플랫폼 개발. 「HRD연구」, 24(4): 1-33.

구본상. (2023). 한국 사회 내 젠더갈등과 편향성의 동원. 「현대정치연구」, 16(2): 51-97.

국제미래학회. (2014). 「전략적 미래예측 방법론 BIBLE」. 서울: 두남.

국토연구원. (2019). 콜롬비아 보고타(Bogota) 도시재개발 사례와 시사점. 「해외동향 해외리포트」, 452: 82-90.

권순길·김준범·전승준. (2023). 국내 지자체에서의 산림조성과 탄소흡수발자국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환경공학회지」, 45(8): 348-356.

권수현·이진옥. (2022). 여성청년의 정치참여 경험과 선거제도 개혁방안 모색. 「이화젠더법학」, 14(1): 229-266.

권연화·최열. (2020). 주거취약계층별 주거비부담 결정요인 비교분석: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1): 119-141.

권오익·김영식. (2022).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경제분석」, 28(4): 4-48.

권용식. (2021). 저소득층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노인일자리사업과 SCSEP의 정책중점 및 정책경로 변동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6(3): 121-165.

권지혜. (2020).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행위와 형사법적 개선점. 「비교법연구」, 20(1): 7-46.

금창호·권오철·김건위·박재희·한부영. (2021). 「2030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연구보고서.

금창호·박해육·김정숙·최지민·주재복·권오철·김지수·조기현·홍근석·박승규·김상민·박재희·전성만. (2020).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수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체연구보고서.

기정훈. (2020).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地域政策研究(충북연)」, 31(2): 23-46.

길혜지·박지민·조효제. (2020). 청소년의 시민성 관련 활동, 시민적 효능감, 미래 정치참여 의식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41(3): 165-189.

김나윤·박창석. (2022).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 국토·연안부문 적응대책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23(5): 125-144.

김남욱. (2021). 주민자치회법의 합리적 제정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1(2): 35-76.

김남욱. (2022).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22(2): 59-168.

김남욱. (2022).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재정고권 강화: 견 보유세를 중심으로.「지방자치법연구」, 22(3): 141-168.

김동준·조민상·조호대.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사이버테러에 관한 연구.「한국융합과학회지」, 9(3): 280-292.

김동철·서영우. (2008).「경영전략 수립 방법론」. 서울: 시그마인사이트컴.

김두상. (2021).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29(1): 57-74.

김두수. (2023). 생물자원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환경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31(2): 65-89.

김범수·조화순. (2021). 시민참여형 전자입법을 통해 본 민주주의 제도 혁신.「21세기정치학회보」, 31(2): 105-128.

김범준·이채율. (202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관한 경쟁법상 쟁점.「법이론실무연구」, 9(2): 91-117.

김병록. (2023).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국가법연구」, 19(3): 63-96.

김미경·김신영. (2022). 보편복지 확장을 위한 '일자리보장제'도입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문화기술의 융합」, 8(6): 429-433.

김상봉·김시언·홍종혁. (2023). 금융불평등에 대한 실증 연구.「신용카드리뷰」, 17(1). 35-101.

김상호. (2021).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 독일 사례 연구.「사회보장연구」, 37(1): 1-29.

김서기. (2020).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관한 제언.「홍익법학」, 21(1): 249-268

김소연. (2020).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긱노동(gig work) 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과학기술법연구」, 26(2): 59-96.

김수련·박진한·송원경·성선용·손학기·권혁수·주우영·박찬. (2020). 지역의 미래 환경 비전 공간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시나리오 체계 연구.「국토계획」, 55(5): 120-133.

김승래. (2021). 디지털 전환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법학연구」, 21(2): 1-30.

김승래·이윤환. (2021). 메타버스 기반의 인문학 콘텐츠 활용과 법적 보호방안. 「법학연구」, 21(4): 4-78.

김신언. (2020).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도입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9(4): 5-62.

김애정. (2021). 신재생에너지 지정학: 한국과 이란의 에너지 협력. 「아시아연구」, 24(1): 259-280.

김우영. (2021). '지역 내 재투자력론'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 인천광역시와 일본 요코하마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34): 261-290.

김 원. (2020). 빅데이터 처리 기반의 범죄 예방 스마트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75-80.

김원중. (2022). 노인고독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법적 검토. 「일감법학」, 51:3-28.

김윤정. (2022).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변혁적 역량 신장을 위한 사이버 의사소통 교육 연구. 「문화와융합」, 44(2): 27-56.

김은비·정홍인·김대영·변기용·임철헌·최지수·조대연. (2020). 미래인재양성 방향모색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교육문화연구」, 26(6): 5-27.

김은주. (2023). 항공사의 친환경 경영활동이 기업신뢰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7(6): 143-160.

김자영·정수진. (2022). 초등학교 사회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 참여의 개념과 양상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15(3): 105-131.

김재경. (2022). 사이버 스토킹과 스토킹 처벌법 개정방안. 「法學論文集」, 46(3): 97-126.

김정화. (2021).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법과정책연구」, 23(4): 65-92.

김제선·황성완·문상혁. (2021). 지방자치단체의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입법의

지향점. 「사회복지법제연구」, 12(2): 27-50.

김종세. (2020).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법학연구」, 20(1): 1-35.

김종승. (2023). 디지털자산과 금융의 역할 정립을 위한 과제. 「연세법학」, 42: 181-222.

김종윤·조대연·오소영·최지현. (2020).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분석과 정책제안 연구: 경기도 평생직업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6(2): 161-184.

김종호. (2021).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법적 과제. 「지급결제학회지」, 13(1): 337-370.

김지연. (2022). 지방 출연기관의 ESG 경영 추진방안 연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연구」, 22(3): 173-190.

김진수·배화숙·정원석·황성하·차정음. (2021). 사회보험의 미래 존립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9“ 61-88.

김진영. (2022). 사회적 갈등이슈에 대한 댓글과 온라인 공론장 특성에 대한 연구: 뉴스 플랫폼 기업들의 과제. 「기업과혁신연구」, 45(3): 181-196.

김진오·민병욱. (2020).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절차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환경영향평가」, 29(5): 363-376.

김진혁. (2021). 디지털 성범죄 특성 및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4): 1-28.

김하늬·김영환·박정선. (2021).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인식연구. 「교양교육연구」, 15(3): 195-206.

김한균. (2020).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저스티스」, 178: 369-392.

김해원. (2020).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와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6(3): 1-38.

김현우. (2021).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무적 가입에 대한 쟁점 연구. 「보험법연구」, 15(3): 57-83.

김훈호·이호준. (2021). 학생의 학교 참여의 교육적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1): 483-510.

나민주. (2021).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0(3): 1-22.

남미자·장아름. (2020).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7(1): 31-60.

남재욱·이다미. (2020). 한국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는 가능한가?. 「한국사회정책」, 27(1): 187-221.

남태우·유수동. (2016). 주민참여와 정부대응성 간 관계요인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학술논문과 뉴스기사 내용분석의 퓨처스 휠 기법 적용. 「사회과학논총」, 36: 1-26.

남춘호. (2016). 일기자료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기법의 활용가능성 검토. 「비교문화연구」, 22(1): 89-135.

노규성. (2020). 포용적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22-33.

노기우. (2022). 청년세대 젠더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능력주의와 운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6(5): 57-86.

노준석. (2022).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역대학 캠퍼스 마스터플랜 설계방안. 「대학건축학회논문집」, 38(4): 97-107.

노한장. (2023). OECD 국가 연금개혁 분석을 통한 공적연금법 개정 방안 연구.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16(4). 267-301.

노현수. (2020).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8(4): 223-245.

녹색기술센터. (2020). 「2030 기후변화대응 분야 글로벌 메가트렌드」.

라혜정·김연희. (2021). 국립박물관 디지털 미디어 전시매체 활용 방안 연구.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0(3): 279-289.

맹철규. (2022). 주택거래가격양극화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43: 115-131.

문길성. (2021). 단문의 주제 분석을 위한 LDA와 BTM 토픽모형 평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3): 1,313-1,326.

문병효. (2021).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 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21(3): 243-288.

문예찬. (2023). 기후변화 시대의 한반도 환경협력. 「한국과 국제사회」, 7(1): 105-125.

문인철. (2021).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지역공동체의 평화 구축 방향 연구. 「평화와 종교」, 12: 35-58.

민서현·이민규·정성문. (2021). 부산지역 디지털의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연구」, 39(2): 107-128.

민성기. (2022). 미·중간 ICT 산업 공급망 분리에 관한 연구: 화웨이의 5G 장비 시장 배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45: 25-48.

민영훈. (2023).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35(1): 51-74.

민유기. (2021). 부유세와 최소소득 관련 프랑스의 사회갈등과 완화, 1981-2019. 「역사학보」. 249: 43-75.

박건우·윤성일. (20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 「예산정책연구」, 9(4): 125-147.

박동준. (2005). 「New Swot Stratezy」. 서울: 소프트전략경영연구원.

박미옥. (2020). 한국지방정부의 환경보건 위해소통사업 활성화방안연구: 전북 익산 장점마을과 인천 사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2): 81-114.

박상준. (2020).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3(1): 121-140.

박선형. (2021).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시민교육의 쟁점과 발전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28(3): 125-154.

박세훈. (2022). 주택공급 절차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99: 135-168.

_____. (2021). 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위한 법제 검토.「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7(8): 311-320.

박수빈. (2023). 미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국제사회보장리뷰」, 25:129-134.

박연성·최윤진. (2022). 지자체 내 적정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의 규모산정에 관한 연구: 강북구를 중심으로.「안전문화연구」, 16: 209-222.

박영숙·제롬 글렌. (2020).「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서울: 교보문고.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2007).「전략적 사고를 위한 미래예측」. 서울: 교보문고.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2013).「유엔미래보고서 2040」. 서울: 교보문고.

박정호·정태윤. (2023). 공간정보산업 ESG경영에 관한 연구.「한국지적정보학회지」, 25(1): 31-48.

박종훈. (2022). 초혼연령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통계연구」, 27(1): 90-115.

박주경·오영열·임희정·강옥려·김광수·문성환·이윤형.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초등학생의 융합적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한 수업모형 탐색.「한국초등교육」. 31: 193-209.

박주섭·홍순구·김종원. (2017).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과학기술동향 및 예측에 관한 연구.「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2(4): 19-28.

박준우·여찬구. (202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주요사례를 중심으로.「기업과혁신연구」, 44(4): 261-280.

박지혜.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환경법연구」, 42(2): 47-83.

박창현·김근진·윤지연. (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박현주·신영준. (2023). 중학생의 기후변화 동아리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 실천 역량과 생태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너지기후변화교육」, 13(2): 71-87.

박호정. (202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유형 변화와 대응 방안. 「교정상담학연구」, 5(1)” 85-110.

박홍윤. (2009). 「전략적 기획론」. 서울: 대영문화사.

박효선·유문무·장동우. (202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물 관리 기술의 적용. 「Crisisonomy」, 18(12): 35-48.

오윤경. (2017).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FDRR)의 주요 이슈와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ISSUE PAPER」, 58: 3-12.

방민석. (2022).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24(3): 263-299.

배소연.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3(2): 23-44.

변승현. (2020).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과 O2O서비스 소비자분쟁 및 보호방안. 「중재연구」, 30(4): 121-138.

변종헌.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문화 시티즌십의 내용. 「倫理硏究」, 1(133): 193-214.

서영표. (2021).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불로소득 추구 ‘기회’의 평등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18(3): 10-40.

서유정·김학민. (202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업자 대상의 디자인 분야 직업훈련 과정 방향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6(2): 171-180.

서현정·윤정섭. (202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9): 29-45.

선은애. (2021). 디지털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92: 319-335.

선종수. (2023). 사물인터넷의 범죄활용과 대응. 「비교형사법연구」, 25(1): 33-64.

_____. (202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법학의 융합 교양교육의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실천연구」, 6(1): 53-68.

_____. (2022). 디지털경제 안전의 형법적 보장. 「과학기술법연구」, 28(2): 47-74.

성봉근. (2021).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적 비교 현황과 국내 도입에 관한 제어국가의 법정책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37: 385-438.

성준경·윤화영·양봉숙·변지희·강규영. (2022). 산불피해지 복구제도 개선을 통한 산림 탄소흡수원 강화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8(12): 49-60.

손경희. (2022).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3(4): 195-218.

손예령. (2020).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시민 실천을 위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45: 119-144.

송강직. (2020). 한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시대와 노동법 논의. 「노동법논총」, 49: 1-31.

송경재. (2022). 디지털 기술과 청년 정치참여: 참여하는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의 등장. 「한국과 세계」, 4(6): 39-67.

송경재. (2021). 소셜미디어와 여성의 다층적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168-201.

송명섭. (2022). 여성 노인의 가족갈등 대처방식과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3(5): 2,385-2,400.

송영현. (2021).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에서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규범성 고찰. 「IT와 법연구」, 22: 341-370.

송영현·이윤환. (2020).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 「법학연구」, 20(3): 215-239.

송인옥·송동수. (2020).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적용과 법제 개선방안. 「과학기술법연구」, 26(3): 99-136.

송재령. (2022). 주한 외교관을 통해 본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외교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기후기술 공공외교로의 가능성 탐색. 「기술혁신학회지」, 25(5): 1,025-1,050.

송지연. (2020). 서비스경제 시대 한국 노동시장의 삼중딜레마: 재정건전성, 고용증가, 소득평등. 「평화연구」, 28(2): 39-75.

송해순. (2022).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민연금제도의 정책 과정 분석: 문재인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4(3): 303-328.

송헌재·조하영. (2020).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5): 1,977-1,988.

신만철. (2021). 디지털 리터러시 배양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융합인문학」, 9(3): 55-82.

신상기·오동일. (2022).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Metaverse)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융합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8(1): 64-82.

신용덕.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인천 드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7: 9-61.

신영진. (2020). 안전한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인공지능기술 적용에 따른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정보연구」, 6(2): 135-162.

신창식. (202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대면 공연 분석 연구: 국내 공연예술단체 사례 중심으로. 「연기예술연구」, 25(1): 109-133.

신하영·이미나. (2022). 경북지역청년의 지역 내 고용시장 진입 요인 분석. 「대구경북연구」, 21(2): 61-82.

신현주. (2020). 4차 산업혁명 기반 물류기술의 활용 동향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1(2): 17-27.

심승환. (2020). 사회정의교육의 개념과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977-1,007.

안세민·조대혁·류도현·최재혁·안기완. (2022). 산림분야 ESG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국내외 ESG 동향과 전략. 「산림경제연구」, 29(2): 67-84.

양미란·조안나·우승연·배창현. ESG경영에 대한 분석과 이해: ㈜셀트리온 사례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연구」, 22(1): 1-25.

어광수·남태우. (2020).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의 활성화 요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례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7): 21-29.

오건호. (2021).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재구조화 연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4): 123-157.

오민지. (2022).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4): 63-89.

오삼광. (202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검토. 「한양법학」, 34(1): 109-129.

오석영·이진희. (2020). 중소기업 조직학습 과정 탐색: 실행공동체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미래교육학연구」. 33(3): 103-127.

오정용·박혜현.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38(2): 31-58.

오종택·전광호. (2021). 코로나 팬데믹과 SDGs에서 한국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체계. 「국제정치연구」, 24(4): 99-123.

외교부. (2022). 「2022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교육에의 시사점」.

유나리·문승민. (202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현대사회와 행정」. 30(2): 193-217.

유동현·김용욱·하영재·류연승. (2021). 비대면 시대의 신 융합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1): 1-9.

유수동. (2023). 미래사회의 핵심 동인: STEEP 분석과 퓨처스 휠 기법의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유수동·강희송·문혜리. (2023a). 글로벌 트렌드와 지방행정의 미래 방향.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유수동·강희송·문혜리. (2023b). 챗GPT가 말하는 지방행정 미래트렌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카드뉴스」, 11: 1-9.

유수동·박현욱. (2022).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미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퓨처스 휠 기법을 통해. 「한국지방행정학보」, 19(3): 131-151.

유수동·박현욱. (2023).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통합물관리 환경변화와 기능 재설계

방향: 수자원조사 기능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8(2): 85-113.

유수동·이진실. (2017). 아동복지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Downs의 이슈관심주기이론을 중심으로. 「정부행정」, 13: 29-60.

유수동·임정빈. (2022). 시민이 바라본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의 기대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제도적 기능, 투명성,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1(1): 107-132.

유수동·전성훈. (2016).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집행요인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3): 87-115.

유정식. (2009). 「시나리오 플래닝」. 서울: 지형.

육아정책연구소. (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윤 건. (2023).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정부연구」. 26(4): 187-210.

윤동현·남원호·전민기·안현욱·유도근·박무종. (2022). 수자원 부족량 기반 가뭄 대응역량 평가.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2(2): 39-46.

윤상규. (2023).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5(4): 141-168.

윤지영. (2021).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범죄와 형사사법적 대응 전략. 「저스티스」, 182(2): 258-291.

윤형석. (2020). 청원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17(2): 79-103.

이건수. (2022). 결제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통화의 유통 확산 가능성. 「지급결제학회지」, 14(1): 293-311.

이경선·김준순·최태헌. (2023).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 구상. 「강원법학」, 71: 227-274.

이경열·이준영. (2023). 메타버스 공간의 신종범죄와 형사입법대책. 「형사정책」, 34(4): 69-115.

이규홍. (2021). 생태전환기의 환경권, 과학기술 및 특허제도의 재조명. 「성균관법학」,

33(3): 65-128.

이기한. (2022). Challenges and Chance for the Korea's Future Climate Change Law for the Paris Agreement Global Governance. 「명지법학」, 20(2): 60-85.

이길재·조성은·김지선·박태양. (2021).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39(4): 85-106.

이대웅. (2023). 지방의 청년세대 인구구조와 이동에 관한 실태 분석 및 정책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1): 26-56.

이두곤. (2022). 환경교육 의무화의 의의와 실행 방안. 「환경교육」, 35(4): 434-450.

이민윤·권기헌(2023). 사회갈등 관련 인식이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3(2): 1-37.

이병재. (2023). 미래형 재난에 대비한 국토방재 지능화 정책대안 고찰 연구.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16(1): 37-48.

이상근. (2023).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활용과 혁신과 협업을 위한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 「경상논총」, 41(2): 67-86.

이상신. (2022).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에 따르는 과세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논집」, 9(3): 81-99.

이성준. (2023).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유튜브 기반 의학정보 주요 이슈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8): 198-207.

이성호·민인식. (2022). 코로나19 재난 시기의 청년층 임금격차: 상대적 분포분석 활용. 「노동정책연구」, 22(4): 1-28.

이승모·하동현. (2020). 공공갈등과정에서 사회집단의 역할유형 분석: 갈등의 발생책임과 해소노력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203-229.

이승준·김지원·구교준. (2021). GDP를 넘어: 국민후생의 측정지표로서 25개 대안 GDP 비교·분석. 「한국조사연구학회」, 22(2): 33-70.

이영주. (2022).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혁신을 위한 학습공유공간으로서 대학도서관 공간구성 제안: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3): 111-124.

이원도·유수동·김영롱. (202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적 변동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37(1): 251-280.

이원상. (2022). K-웹툰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법학논총」, 29(2): 35-63.

이유경. (2022). 소비자의 ESG 인식이 기업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소비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6(4): 61-83.

이윤선·문혁·이태식. (2021).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건설기업 ESG 활동 및 성과 사례.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2(2): 106-118.

이은영·서봉성. (2021). 불법촬영물 유포사례와 피해자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2): 169-182.

이재현. (2023).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한반도 평화·통일 인식 연구.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3(2): 71-94.

이정진. (2022). 지방선거를 통해 살펴본 청년정치의 한계와 가능성. 「법과인권교육연구」, 13(1): 121-140.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종욱·홍진슬·홍성조. (2022). 대학 졸업자 이동 유형의 지역별 동향 분석: 2010년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8), 191-202.

이종희. (2021). 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과 개선과제: 유럽 사례들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논총」, 31(3): 55-93.

이준서. (2022).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과제. 「한양법학」, 33(2): 89-120.

_____. (2021). 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입법형식과 체계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43(1): 1-38.

이지선·김석우·김지영. (2023).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연구.「국제 개발협력연구」, 15(1):17-31.

이진규. (2022). 주거복지를 위한 지분주택제도의 도입방안.「토지공법연구」, 97: 125-150.

이진홍·박상진. (2020). 동물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20(2): 571-595.

이 찬·박복미. (2023). 지속발전을 위한 중앙아시아 고위공무원 역량모델링.「아시아리뷰」, 13(2): 157-192.

이창호. (2021). 고3 유권자의 정치참여 실태 및 요인: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선거연구」, 1(14): 61-84.

이척희·노재철. (2021).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산업진흥연구」, 6(1): 79-86.

이 태·권태희·김난주. (2023). 고령화가 지역 일자리의 반복업무 수준에 미치는 영향.「여성경제연구」, 20(2): 59-92.

이태동. (2022). 기후변화와 국제정치: 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 어젠다.「국제정치논총」, 62(1): 271-303.

이현국·이민아. (2021). 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영국의 로컬카운실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4): 177-202.

이혜원. (2022).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콘텐츠.「만화애니메이션 연구」, 67: 295-315.

이혜윤. (2021). 정책의 역설, 소득주도성장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의 정합가능성의 관점에서.「규제연구」, 30(2): 183-219.

이호근. (2021).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사회보장법학」, 10(1): 1-80.

임명임·장항배. (2020). 암호화폐거래소 위험성 경감방안 연구.「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8(4): 29-37.

임무송. (2021).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법과 기업 연구」, 11(1): 135-171.

임보영·마강래. (2020). 기술 혁신에 의한 지역 일자리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2): 29-45.

임상호. (202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진흥연구」, 8(2): 61-66.

임석회·송주연. (2022).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와 회복력의 지역적 특성: 도시 고용위기와 회복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2): 281-298.

임정빈·유수동. (2022). 지방의회 청원제도를 바라보는 시민 인식에 관한 연구: 기대효과와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2): 1-21.

임채광. (2020). 한국사회의 가치갈등과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해결방안 연구. 「동서철학연구」, 96: 401-428.

임현철. (2021).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근로자의 워라밸 결정요인 비교분석. 「입법과정책」, 13(3): 177-208.

장석인. (2023). 국내기업의 ESG 경영동기와 경영전략 및 해외사례연구. 「혁신기업연구」, 8(1): 85-405.

장선화. (2021).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 문화, 정당을 중심으로. 「NGO연구」, 16(1): 77-119.

장세영. (2020).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 꿈의 대학'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23(2): 186-194.

장윤진·이도현·이채민·최혜정·손승우. (2020). 해외 서버 기반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수사 모델 방안. 「디지털포렌식연구」, 14(2): 179-194.

장윤희. (2020). 기업 간 디지털협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신원인증 메카니즘 제안. 「대한경영학회지」, 33(7): 1,343-1,362.

장진아·조수진. (2022). 참여적 시민 양성을 위한 장소기반 환경교육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3): 33-53.

장창석·김선경. (2023). 공공갈등관리 과정의 주민참여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6(4): 319-339.

장현우·최민섭. (2020). 정부의 주택정책과 시장특성이 주택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8(3): 1-22.

장희은·김유휘. (2020). 플랫폼 경제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외 정책동향. 「산업노동연구」, 26(1): 1-48.

전승화·김정호. (2020). 언택트(Untact) 산업 확산의 이론적 배경과 전망. 「신산업경영저널」, 38(1): 96-116.

전승훈·강희진·조기현. (2022).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7(3): 109-139.

전현숙·신원식. (2022).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성가구주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사회보장연구」, 38(1): 101-133.

정고은. (202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2010년대 이후 한국소설에서의 '노동' 재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재 양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68: 501-543.

정도희. (2023). 사이버테러의 개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26(1): 345-374.

정병삼·박균열. (2021). 한국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12(2): 605-620.

정성문·여영준·김성진·정현민. (2022). 디지털 전환 투자에 따른 지역별 차별적 영향 분석: 지역산업연관분석 접근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혁신학회지」, 17(4): 301-316.

정성희·문혜정. (202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특징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이슈분석」.

정소라. (202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이의 정치'와 '소통적 민주주의': 한나 아렌트와 아이리스 영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98: 205-226.

정 완. (2022). 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 규제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23(3): 419-442.

정재욱. (2020). 청소년 자연 친화 교육을 위한 그린 스쿨 통합공간계획 연구: 2015 개정교육과정 주요교육공간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8(2): 27-36.

정재훈·박사유. (2021). 교육시설을 통해서 본 도시 공간적 불균형-서울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3(4): 43-50.

정헌주·백유나·정윤영. (2022). 우주와 국제개발협력: 우주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33(2): 125-147.

정혜련. (2022).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최근 해외 입법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6(1): 31-74.

조가은·윤여진. (2022). 공동주택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 방안 연구.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1(3): 59-76.

조규준·정흥준. (2023). 고객불량행동과 돌봄노동자의 직무만족: 감정부조화의 매개효과와 인지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의 조절효과. 「경영학연구」, 52(6): 1,383-1,408.

조기영. (2020).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북아법연구」, 13(3): 441-466.

조상순·김지수. (2023). 우리나라의 유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고찰. 「문화재방재학회.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8(1): 29-39.

조성제. (2022). 디지털농업 결정요인이 우리나라 농식품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통상정보연구」, 24(4): 311-330.

조재우. (2021). 스마트도시에서 블록체인이 갖는 함의와 그 역할. 「지역연구」, 37(2): 35-48.

조진우. (2022).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3(1): 3-27.

조한솔·유재흥·조원영·신정우. (2021).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6(4): 243-265.

조희원·도광조. (2022). 범죄예방교육 사업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법무보호연구」. 8(2): 49-82.

주시연·서병선. (2023). 한국 은퇴자들에 대한 은퇴-의료이용 퍼즐의 탐색: 보건의료 이용 및 건강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9(2): 1-33.

주한나·최혜민. (2022). 광역자치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한국공공관리학보」, 37(2): 235-264.

진종순·유수동. (2021). 정책환경 변화와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발전방향. 「여성·청소년·

가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논문자료집」, 1-24.

차미숙. (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정책 Brief」, 555: 1-8.

채영근. (2022).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연구」, 25(4): 63-99.

천정윤·이현규·김강선·정주영·김충기. 우리나라 해상·해안국립공원 미래 연구 방향 도출. 「환경정책」, 29(2): 99-128.

최두원. (2020). 스마트 물류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과 적용동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5(4): 135-157.

최선영. (2022).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녹색기술 촉진 방안. 「환경법연구」, 44(3): 299-339.

최순종. (2022). 사회갈등과 청소년의 정치시민교육: 시대정신, 사회정의 그리고 사회통합. 「교정담론」, 16(2): 135-155.

최인수·전대욱·최지민·유수동. (2022).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최재섭.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의 유통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무역보험연구」, 23(1): 183-197.

최재성. (2020).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갈등완화 방안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5(3): 87-130.

최정열. (2022). 그린뉴딜 분야의 기술 특허 동향 분석.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7(10): 1,686-1,693.

최지민·김정숙·안혜경. (2021). 「현장중심의 읍·면·동 기능개편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최진섭. (2022).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방향.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조세정책의 과제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최현태·한성훈. (2021).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민사재판에의 적용 가능성 모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9(2): 285-314.

하태영·손정혁·오지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5(2): 3-42.

한광호·금상수. (2021). 프롭테크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모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경영」, 24: 203-221.

한국고용정보원. (201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한국고용정보원.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3). 「2023년 CES 기술동향 및 글로벌 유망기술 메가트렌드」.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2023). 「NIA가 전망한 2023년 12대 디지털 트렌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2023 한·일 공동세미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미치노에키와 지방 창생".

한상암·김윤영. (2020). 북한의 금융기관 사이버테러 실태 대응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34(2): 319-355.

한승훈. (2022).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강원법학」, 66: 69-111.

한정원. (2022). 지역사회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방향.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6(12): 1,826-1,831.

한주희. (2022). 정치적 연대를 위한 정치 공간으로서 온라인 국민청원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30(4): 95-116.

함영욱·임종인. (2020).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한국경찰연구」, 19(2): 197-226.

행정안전부. (2023). 「지역별(시도/시군구/읍면동)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

허종호·박병규·김리아·김태민·홍재원. (2023). 소비자 관점의 ESG경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소비자학연구」, 34(2): 99-127.

허준영. (2021). 인구구조변화와 거시경제: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접근. 「한국경제의 분석」, 27(2): 73-132.

현대경제연구원. (2023). 「2023년 7대 글로벌 트렌드: 혼돈의 세계 경제」. 23-01(941).

홍대식. (2021).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법학연구」, 31(1): 317-352.

홍준호. (2021).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평가와 금융분야 적용가능성. 「지급결제학회지」, 13(1): 221-255.

홍지아. (2022).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7(2): 99-155.

황성수·박선주. (202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정립: 플랫폼산업과 Governing the Commons 의 가능성. 「한국행정논집」, 34(2): 175-198.

황세영. (2021). 봉사에서 협력으로, 전달에서 학습으로: 과학교사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상호문화주의 학습 경험 해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1(5): 429-440.

황이경·남철. (2023).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공법연구」, 51(3): 643-675.

황준성. (2020). 지방교육자치제도 관련 법령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교육행정학연구」, 38(1): 29-51.

황준성. (202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조세정책: 로봇세의 도입. 「세무회계연구」, 67: 153-173.

Ayre, C., & Scally, A. J. (2014).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Revisting the Original Methods of Calcul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7(1): 79-86.

BlackRock. (2022). Megatrends: Insights on the forces shaping our future.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Brookings Institution. (2022). An inclusive future? Technology, New dynamics, and Policy challenges.

Criteo. (2021). Shopper Story 2022: Global Consumer Trends & the Future of Commerce.

Critcher, C., & Gladstone, B. (1998). Utilizing the Delphi Technique in Policy

Discussion: A Case Study of a Privatised Utility in Britain. *Public Administration*, 76(3): 431-449.

EPTA. (2021). Technology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under scientific uncertainty.

EU. (2019). The Future of Government 2030+.

GLOBSEC. (2020). GLOBSEC Megatrends 2020.

_____. (2022). GLOBSEC Megatrends 2022.

gov.wales(영국 웨일즈 자치정부). (2021). Future Trends Report Wales 2021.

Goverment Office for Science. (2020). The future of citizen data systems.

Haarsten, T., & Van Wissen, L. (2012),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for Primary Schools. *Tijdschrift voor Econoische en Sociale Geografie*, 103(4): 487-496.

Hellenic Republic. (2023). Megatrends 2040: Volatility, Unceratinty, Resource fulness.

Huawei. (2021). Intelligent World 2030.

Keegan, J. (1998). The First World War. *Vintage.* London: Hutchinson.

HR Institute. (2002). KADAI KAIKETSU NO GIJUTSU. Kyoto: *PHP Institute, Inc.*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2).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2.

ISWA(International Solid Waste Association). (2021). The Future of the Waste Management Sector 2021-2030.

Johnson, K. M., Field, L. M., & Poston, D. L. (2015). More Deaths than Births: Subnational Natural Decrease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opu 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4): 651-680.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McKinsey. (2021). The top trends in tech.

Nexit Ventures. (2022). The Hottest VC Trends of 2022: Our Predictions.

NIC. (2021).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NTT R&D. (2021). NTT Technology Report for Smart World 2021.

OECD. (2010). Health-Care Reform in Korea.

OECD. (2022). Trends Shaping Education 2022.

Osborne, D., & Gaebler, T. (1993).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 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Y: A Plume Book*.

PWC. (2022). Megatrends: Five global shifts reshaping the world we live in.

Roland Berger. (2020). Trend Compendium 2050 Six megatrends that will shape the world.

Siemens. (2021). A New Space Race.

Smart Surfaces Coalition. (2022). Cooling Cities, Slowing Climate Change and Enhancing Equity: Costs and Benefits of Smart Surfaces Adoption for Baltimore.

Solactive. (2022). Future Trends 2022.

Stuart, W. (1998). Choosing the Future: The Power of Strategic Thinking.

UN. (2020). Shaping the Trends of Our Time.

UNISDR.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WEF(World Economic Forum). (2021). Positive AI Economic Futures.

교육부. (23.03.09).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 본격 시동' [보도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2.11.11).'국가 책임 교육 실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 [보도자료].

퍼블릭뉴스, (21.03.03). 교육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portal/main.do)

대구광역시 육성계획(https://m.blog.naver.com/ash1106/223038834917)
아스투리아스 시민참여(http://www.asturiasparticipa.es/#1)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https://survey.keis.or.kr/goms/goms01.jsp)
OECD OPSI(https://oecd-opsi.org/)
United Nations(https://sdgs.un.org/)

부 록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1차)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 (1차)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분석과 뉴스기사 토픽 모델링 등을 통해 발굴한 **'미래사회의 주요 이슈'**와 이러한 이슈들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및 핵심 이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정책·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정책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기재된 사항은 「통계법(법률 제17339호)」 제33조에 의해 보호되며 통계적·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본 설문은 **1차 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다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연구책임자 유수동 미래전략연구센터장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유수동 미래전략연구센터장(soodongyoo@krila.re.kr, 033-769-9846)

1. 연구목적 소개

❍ 급변하고 있는 사회·기술·경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 경쟁사회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미래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과거와는 다른 문제해결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예측과 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세와 방향을 예측하여 여러가지 대응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저희 연구는 급격하고 예측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본 연구 결과는 지방행정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의제의 변화와 계획 수립,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미래지향적 의사결정 지원, 미래에 대한 통찰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주요 연구질문

▣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환경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 미래사회 주요 이슈

❍ 뉴스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과 전문가 자문회의, 브레인스토밍,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자료분석 시점은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이후 현재까지(2020.01~2023.06)로 한정하였습니다.
- 토픽모델링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 분석 및 퓨처스휠 기법 등을 통해 도출된 미래사회 핵심 동인(키워드) 10가지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3년 6월 30일까지 수집한 뉴스기사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미래사회 핵심 동인				
인구구조	사회갈등	사이버 범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양극화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정치참여	지방자치

- 토픽모델링에서의 토픽명은 해당 키워드들을 고려하여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설정하였으며, 중복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저출산·고령사회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ESG와 사회적 실천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균등한 교육기회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주거 안정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디지털 안전사회	고용안전망	지역사회 안전망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디지털혁신 생태계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자치역량과 책임성
디지털 플랫폼 시장	안전관리 및 재난 위기 대응	지역혁신 생태계

3. 전문가 타당성 조사

❍ 다음은 토픽 모델링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출한 미래사회 핵심 이슈들입니다. 각 이슈들이 **지방행정환경에 미치거나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점부터 7점 중에서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각 이슈들이 **지방행정(환경)에 미치게 될 시기**와 함께 **각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주요(핵심) 행위주체를 선택**하여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1: 각 이슈들이 지방행정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불확실, 판단 불가 등), 비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기: 1~3년, 중기: 3~5년, 장기: 5~10년**

*주2: 주된 행위주체를 표시해 주시되, 하나의 주체만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3: 행위주체 중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지방공기업 등 포함), 중앙은 중앙행정기관(국회 및 특행기관 포함), 민간은 기업 및 지역주민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 요소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방행정(환경) 영향 예상 시기	행위주체
(인구구조) • 저출산·고령사회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인구구조, 지방자치)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인구구조, 지방자치)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인구구조, 4차산업혁명)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사이버범죄, 4차산업혁명) • 디지털 안전사회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4차산업혁명) •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디지털혁신 생태계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 • 디지털 플랫폼 시장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 •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양극화, 4차산업혁명, 지방자치) • 균등한 교육기회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양극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양극화) • 주거 안정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양극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고용안전망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기후변화, 지방자치)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ESG와 사회적 실천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사회갈등, 정치참여) •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지방자치, 양극화, 인구구조, 양극화) • 지역사회 안전망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지방자치)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지방자치, 정치참여) • 자치역량과 책임성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지방자치, 지속가능개발) • 지역혁신 생태계	①---②---③---④---⑤---⑥---⑦	단기/중기/장기	지방/중앙/민간

4. 기타

❍ 그밖에 바람직한 미래 지방행정의 모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정책·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응답자 특성

◎ 다음은 본 설문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니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 )
① 공무원 ② 연구원(민간/공공부문) ③ 학계 ④ 기업
⑤ 기타_____(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세)
3. 귀하께서 해당분야에 종사한 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년)
4. 귀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2차)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 (2차)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분석과 뉴스기사 토픽 모델링 등을 통해 발굴한 '**미래사회의 주요 이슈**'와 이러한 이슈들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및 핵심 이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정책·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정책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기재된 사항은 「통계법(법률 제17339호)」 제33조에 의해 보호되며 통계적·학술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본 설문은 **2차 조사**에 해당합니다. **2차 조사**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다시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으로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연구책임자 유수동 미래전략연구센터장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유수동 미래전략연구센터장(soodongyoo@krila.re.kr, 033-769-9846)

1. 연구목적 소개

❍ 급변하고 있는 사회·기술·경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 경쟁사회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미래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과거와는 다른 문제해결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미래예측과 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세와 방향을 예측하여 여러가지 대응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저희 연구는 급격하고 예측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본 연구 결과는 지방행정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의제의 변화와 계획 수립, 미래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미래지향적 의사결정 지원, 미래에 대한 통찰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주요 연구질문

▣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는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환경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 미래사회 주요 이슈

○ 뉴스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과 전문가 자문회의, 브레인스토밍,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미래사회 주요 이슈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자료분석 시점은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이후 현재까지(2020.01~2023.06)로 한정하였습니다.
- 토픽모델링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 분석 및 퓨처스휠 기법 등을 통해 도출된 미래사회 핵심 동인(키워드) 10가지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3년 6월 30일까지 수집한 뉴스기사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미래사회 핵심 동인				
인구구조	사회갈등	사이버 범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양극화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정치참여	지방자치

- 토픽모델링에서의 토픽명은 해당 키워드들을 고려하여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설정하였으며, 중복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미래사회 주요 이슈 구체화		
저출산·고령사회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ESG와 사회적 실천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균등한 교육기회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주거 안정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디지털 안전사회	고용안전망	지역사회 안전망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교육자치와 혁신
디지털혁신 생태계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자치역량과 책임성
디지털 플랫폼 시장	안전관리 및 재난 위기 대응	지역혁신 생태계

3. 전문가 타당성 조사

❍ 다음은 토픽모델링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출한 미래사회 핵심 이슈들입니다. 각 이슈들이 **지방행정환경에 미치거나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도**를 다음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점부터 7점 중에서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 이전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요약하여 **평균값**과 본인의 **이전 응답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하여 **본인의 이전 응답을 수정해 주시거나**,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인의 이전 응답을 수정하지 않을 시, 만약 전문가들의 응답결과의 **평균값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요소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값	수정의견
(인구구조) • 저출산·고령사회	①---②---③---④---⑤---⑥---⑦						
(인구구조, 지방자치)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①---②---③---④---⑤---⑥---⑦						
(인구구조, 지방자치)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①---②---③---④---⑤---⑥---⑦						
(인구구조, 4차산업혁명)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①---②---③---④---⑤---⑥---⑦						
(사이버범죄, 4차산업혁명) • 디지털 안전사회	①---②---③---④---⑤---⑥---⑦						
(4차산업혁명) • 디지털 사회구조 전환	①---②---③---④---⑤---⑥---⑦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디지털혁신 생태계	①---②---③---④---⑤---⑥---⑦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 • 디지털 플랫폼 시장	①---②---③---④---⑤---⑥---⑦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 •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①---②---③---④---⑤---⑥---⑦						
(양극화, 4차산업혁명, 지방자치) • 균등한 교육기회	①---②---③---④---⑤---⑥---⑦						
(양극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①---②---③---④---⑤---⑥---⑦						
(양극화) • 주거 안정	①---②---③---④---⑤---⑥---⑦						
(양극화,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 고용안전망	①---②---③---④---⑤---⑥---⑦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①---②---③---④---⑤---⑥---⑦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 녹색경제 및 녹색생활 전환	①---②---③---④---⑤---⑥---⑦		
(기후변화, 지방자치)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①---②---③---④---⑤---⑥---⑦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ESG와 사회적 실천	①---②---③---④---⑤---⑥---⑦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①---②---③---④---⑤---⑥---⑦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①---②---③---④---⑤---⑥---⑦		
(사회갈등, 정치참여) • 공공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①---②---③---④---⑤---⑥---⑦		
(지방자치, 양극화, 인구구조, 양극화) • 지역사회 안전망	①---②---③---④---⑤---⑥---⑦		
(지방자치) • 교육자치와 혁신	①---②---③---④---⑤---⑥---⑦		
(지방자치, 정치참여) • 자치역량과 책임성	①---②---③---④---⑤---⑥---⑦		
(지방자치, 지속가능개발) • 지역혁신 생태계	①---②---③---④---⑤---⑥---⑦		

4. 전문가 의견조사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미래 지방행정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방향성**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미래 지방행정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도전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응답자 특성

◎ 다음은 본 설문조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니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 )
 ① 공무원 ② 연구원(민간/공공부문) ③ 학계 ④ 기업
 ⑤ 기타_____(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세)
3. 귀하께서 해당분야에 종사한 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년)
4. 귀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